

## 4. 성폭력 용인체제로서의 미일안전보장조약

상술한 군대의 배경으로부터 성폭력은 예견 가능하다. 미일안보조약에 의한 장기 주둔 군대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양국 정부의 속수무책은 성폭력 용인 체제를 만들어낸다. 이는 범죄적인 입법 부작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미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위자료에 관한 양 정부의 고압적 냉담한 정책에 미루어볼 때, 미일안보가 인간의 안전보장과는 대극에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왜 장기간에 걸쳐 오키나와 여성은 미군의 테러에 노출되어 왔는가.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언제 오키나와의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을 지켜 줄 것인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6조는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합중국은 일본의 시설,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여성과 어린이에게 있어 안보조약은 위험한 군사동맹조약으로서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다.

너무나 장기간에 걸쳐 빈발하는 성폭력에 대하여 일본의 저명한 페미니스트조차도 '미군이 있기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이것을 남성의 성폭력이라는 시점에서 본다면, 미군 병사들이든, 같은 일본인이든, 어디에나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키나와 여성이 미군의 성폭력에 피해를 입는 것은 익숙한 풍경이 되어 버렸다.

미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오키나와의 여성들에게는 언제 나도 당할지 모를 폭력으로서 고통이 공감된다. 구 일본군은 조선, 대만, 일본, 오키나와 여성을 성노예화하여, 군 '위안부'로서 오키나와의 섬들에 배치했지만, 미군도 1945년 상륙으로부터 전시하·점령하를 통해 성폭력의 폭풍과 임신, 경제파괴에 의한 기지 매매춘의 구조를 만들어 냈고,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시에는 '미군 후방시설의 여자'로서 오키나와 여성의 신체를 관리 수탈했다. 또한 미군의 농지, 토지 강탈에 저항 투쟁한 농가의 여성들도 기지 난민으로서 현내나 해외의 이민으로서 섬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오키나와는 '전쟁체협'에 이어지는 '기지체협'에서 인권감각을 체득하여 왔다. 우리들은 '군대의 성폭력이 일부의 썩은 사과인 병사에 의한 것으로, 강간당한 여성은 운이 나빴다고, 여성의 매매춘의 문제도 복귀문제가 선결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90년 한국의 전 '위안부' 여성의 목소리는 우리를 바꾸었다. 1995년의 사건은 많은 오키나와 사람을 바꾸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왜 한 사람의 소녀 사건에 그렇게 분노하는 것입니까?"라고 질문 받는다. 이것은 오키나와의 역사적 감정에 뿌리를 둔 분노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1995년 사건은 미군 병사의 성폭력이 한 병사의 범죄로서 축소되지 말아야 하며, '군대라고 하는 구조적 폭력에 의해 여성의 권리가 침해된다'라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공통인식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되게 되었다. 국가 폭력이 발동될 때, 늘 여성도 희생되고, 특히 성폭력으로 나타

난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전시에 한정되지 않고 군대 주둔지에서 일상화하고 있다. 국가의 폭력 장치(기지)주변에는 여성의 인권 침해가 일상적 억압으로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여성사, 페미니즘, 젠더이론은 안보체제와 미군기지·군대의 구조적 폭력의 문제 영역을 구축하였는가. 안보체제의 젠더문제로서 날카롭게 문제제기하여 이론화하고 기지·군대를 학문의 카테고리에 넣는 것을 회피해온 이유는 무엇인가.

'군대의 구조적 폭력'에 의한 여성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절규를 강력한 이론과 운동이 받아들이며, 피해를 회복시켜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희망을 안겨주는 인권운동이 요구된다.

\* '안보', '미일안전보장조약', '안보조약의 정식명칭은 '미합중국과 일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을 말한다.

\*\* '지위협정', 정식으로는 '미합중국과 일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의거한 시설, 구역 및 일본국에 있어서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전체 28조로 구성되어 있고, 발효일은 1960년 6월 23일이다.

이 조약의 제17조는 미군인 등의 범죄에 관한 형사재판권과 그에 관한 경찰권 등의 문제에 대하여 규정한 12항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7조5항C」: 일본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될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혹은 군속인 피의자의 구금은 피의자의 신병이 합중국의 수중에 있을 경우, 일본국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합중국이 연속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함.(이 항은 국제법의 주권제한문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사건이지만, 군인의 특권적 항목으로 생각되어지는 사항은 다음의 17조9항f, g이다

「17조9항F」: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능한 통역을 사용할 권리

「17조9항G」: 합중국의 정부대표자와 연락할 권리 및 자기의 재판에 정부대표자를 입회시킬 수 있는 권리

## 참 고 문 헌

「미일 지위협정을 생각함 - 기지피해로부터의 구제를 목표로 -」 큐슈변호사연합회·오키나와변호사회 편 2001년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피해」 일본공산당 국회의원단 편 新日本出版社 1996년

「오키나와에 있어서 미군의 피해」 福地謙昭 同時代社 1995년

「오키나와·미군의 여성에 대한 성범죄 제5판」 기지·군대를 허용하지 않는 행동하는 여성들의 모임 편 2001년 6월

## 대만 지구 계엄시기 정치사건 연구

- 여간첩 상시원(商希韞) 무죄 판결의 예 -

주덕란 (朱德蘭, 대만중앙연구원  
중산인문사회과학연구소)

### 1. 대만지구 계엄 시기 정치 사건의 역사적 배경

1945년 일본 패전 항복 후 중국대륙에는 국민정부와 공산당이 경쟁적으로 일본이 점령한 국토를 수복하기 위해 파병하고, 일본군 무기를 수용하는 군사행동을 벌였는데, 그 사이에 국민당과 공산당은 군대편제 개편, 실지수복, 권력분배 등의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협상하였지만, 쌍방간에 '약간의 권한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다투고' '약간의 토지를 놓고도 반드시 싸우고' 서로 양보하지 않아 대략 3년간에 걸친 내전이 벌어졌다.<sup>1)</sup>

국공 양당이 대륙에서 서로 대치할 때, 대만 방면에서는 국민정부가 파견하여 접수한 관원이 부패하여, 일본 식민통치를 받던 대만 주민들에게 외면 당하였기 때문에, 대만이 중국이 반환된 지 2년도 못되어 국민들을 참혹케 한 '2.28 사건'이 발생하였다.<sup>2)</sup>

1949년 중국 내전의 결과 민중동원을 잘 하고 전략이 민활했던 공산당이 중국 정체를 석권하였고, 사익만 도모하고 서로 알력을 벌이고 적을 지나치게 경시한 국민당은 패퇴하여 산이 무너지듯이 대륙을 버리고 대만으로 쫓겨 갔다. 국민정부는 공산당이 정권탈취에 성공한 것에 통탄을 느끼고 공산당이 대만에 잠복하여 적화할 것을 두려워하여, 방공과 반공을 위하여, 군대의 사기를 떨치고 대륙을 수복할 목적으로 당·정·군 권력을 정부에 집중시키는 권위체제를 건립하였으며, 이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계엄령'을 반포하여, 정부기구와 민간조직에 세밀한 특무 네트워크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민중사상을 통치하는 특무정치를 실시하였으며, 특무계통 인원은 위의 뜻을 받들고 공을 세울 기회를 엿보아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적지 않

1) 곽정이, 《근대중국사상》(하) 대북: 남천서국, 1994년, 718-766, 진영발, 『중국공산혁명 칠십년』, 대북: 연경출판, 1998년, 388-451, 장숙법, 『중화민국사』, 대북: 연경출판, 1998년, 452-488을 보라.

2) 賴沢濤總主筆, 2-28사건연구보고, 대북: 시보문화공사, 1994.

은 '간첩' 사건을 만들어냈다.<sup>3)</sup>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지만, '간첩' 사건 중, 비교적 사람들의 주목을 끈 사건으로는 특무인원이 가져 공산당 구오팅량을 만들어내고 장관 쏜리런을 포함한 반란 사건,<sup>4)</sup> 특무기관이 날조한 것으로, 라이젠이 '간첩' 류즈잉을 은닉하여 검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10년형을 선고한 '라이젠 사건',<sup>5)</sup> 저명한 작가 췌양(본명은 꾸오이통)이 '힘센 선장(大力水手)'라는 만화를 번역하였는데, 특무인원이 그 만화가 정부의 지도부를 공격하였다고 불만을 품어 강제로 그가 공산당 외곽조직에 참가하였다고 실토케 하여 9년간 감옥에 처넣은 사건,<sup>6)</sup> 유명 방송 연예인인 추이샤오핑이 15세 때 일본군이 고향 지난을 점령하자 그녀와 언니가 전란으로 헤어진 형부를 찾아 산시를 2주일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 '공비' 조직에 참가하였다고 인정되어 징역 14년, 공민권 박탈 8년 처분을 받은 사건 등이 있다.<sup>7)</sup>

'2.28 사건' 및 수많은 조작된 '간첩' 사건에 대해 1987년 정부가 계엄령을 해제한 후, 정부는 여론의 압력을 받고 역사의 상처를 위로하고, 정부가 과거 저지른 잘못과 인권 경시에 대한 민중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1995년부터 '재단법인 2.28 사건 처리 및 보상 조례'를 공포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 '재단법인 2.28 사건 기념 기금회'를 설립하였으며, 1998년에는 '계엄시기 잘못된 반역과 간첩 사건 보상조례'를 공포하였고, 이 법에 따라 '재단법인 계엄시기 잘못된 반역과 간첩 사건 보상기금회'를 설립하여, 각각 보상건의 피해자 신청을 받았다.<sup>8)</sup> 기금회 통계에 따르면, 2.28 사건 보상 신청건수는 대략 1,600여건이며, 계엄시기 정치사건의 보상 신청건수는 6천 건이었다.<sup>9)</sup>

정부가 피해자에 대해 보상과 구제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부당한 판결을 받은 정치사건의 역사의 진상은 아직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보복행동을 취하여 정국불안·사회질서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입법원이 이미 1999년 11월 30일 <당안법>을 통과시켜 만 30년이 지난 관방 서류를 공개토록 하였지만, 아직도 미적미적 서류공개이용 시행체적이 정해지지 않아, 정치법과 관련된 서류는 아직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고, 학술성 연구도 다소 국한되어, 많은 역사의 의혹이 탐구와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이를 감안하여, 상시원 여사가 보존하고 있다가 제공한 25건의 당안자료(부록 목록 참조)와 그 외에 관련된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상시원 사건에 대해 중요한 맥락을 검토하고,

3) 주덕란, 최소평사건, 남투: 대만성문헌위원회, 2001.

4) 朱滋源, 계론 손립인여곽정량 비첩안, 아저수총 편, 1949-1987 계엄시기 정치안전지법틀여역사탐토 논문집, 대북: 재단법인 계엄시기 부당반란 및 비철심판안전보상기금회, 2001 45-71.

5) 傅正 편, 뇌진회역론, 대북: 계관도서공사, 1990.

6) 柏楊 구술, 주벽술집필, 柏楊回憶錄, 대북: 원유출판공사, 1996.

7) 상동.

8) 재단법인 2.28 사건 기념 기금회 편, 재단법인 2.28 사건 기념 기금회 간개, 1999. 기타.

9) 상동.

이에 의거해 학술연구의 부족을 메우고자 한다. 그 외에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피해자가 관용적 심성으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가해자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게 되어 학술연구에 협조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정부측에서는 하루빨리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역사에 대한 진실된 반성과 교훈 기록만이 역사의 전철을 밝히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 2. 상시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사건 발발의 전조

상시원의 어릴 적 이름은 상슈즈이고, 1917년생으로, 푸젠성 취엔저우부 진장현 출신이다. 푸젠성립 난안 사범학교를 졸업하여, 푸젠성 룽지 중학 교사를 맡은 적이 있다. 1945년(민국 34년) 8월 일본 패전항복 후, 중앙정부가 인원을 파견하여 대만을 접수하였을 때 상시원의 동창이 대만 성립 타이중 여자 고급중학 (이하에서는 간략히 타이중 여중으로 칭함)의 접수 책임을 지게 되었고, 후에 교장직을 맡았다. 타이중 여중에 교사가 부족하여, 교장은 푸젠에 가서 교사를 모집하였는데, 상시원과 남편 왕정이 모집에 응하여 자녀를 데리고 대만에 이주하여, 상시원은 수학교사 겸 지도교관이 되었고, 왕정은 과학 교사 겸 선도주임이 되었다. 상시원은 가르치는데 열심이어서 여러 해 동안 교과성적이 모두 첫째였고, 교육청이 주는 장려상을 9건, 학부모회의 감사패 두 번, 성 교육회의 감사패를 한번 받았다. 교육계에서는 모두 그녀가 우수 교사라고 인정하고 있었다.<sup>10)</sup>

상시원은 열심히 가르쳤을 뿐 아니라, 훌륭한 현모양처여서, 2남 4녀를 길러냈는데, 일본식 다다미가 있는 낡은 집에서 살았고, 생활은 순박하고 규율이 있었으며, 평소 음악을 즐겨, 타이중에서 음악회가 열리면 전 가족이 함께 가서 즐기곤 했다. 상시원의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부모의 영향을 받아 모두 독서를 좋아하였고, 모두 자연과학을 전공하였으며, 성적이 우수하여, 각자 국의 장학금을 신청하여 미국과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sup>11)</sup>

그러나 상시원의 교사생활이 25년째 접어들어 퇴직을 준비하기 몇달 전, 즉 민국 60년(1971) 1월 조사국 타이중 사무소의 직원이 그녀 학교 동료들 통해 전달하기를 그녀에게 조사국에 와서 '자수하라'고 하였을 때, 상시원은 깜짝 놀랐다. 상시원은 동료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러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를 물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녀 또한 스스로 범을 준수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가서 자수할 이유가 없었다. 뜻밖에 이 해 5월 3일, 상시원이 학교 강당에서 교무활동에 참가하고 있을 때, 조사국 직원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미 이야기되었다고 하면서 직접 상시원을 타이베이 우싱지에 있는 조사국 유치장(看守所)로 데리고 가, 가둔 후 그녀에게 40년 전의 사건과의 관련을 추궁하였고, 결국 그녀가 반란조직에 참가했

10) 주덕란, 양언빈, 장혜정, 인터뷰 기록

11) 商希驪 구술기록.

다는 정치죄명을 뒤집어씌웠다.<sup>12)</sup>

## 3. 조사국 추궁과정

상시원은 유치장 접객실에서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고, 주야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조사국 인원은 돌아가면서 그녀를 심문했다. 피로가 쌓여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후에 비로소 그녀를 데려다 다다미 한 장 정도의 작은 방에서 쉬게 하였고,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그 때 그들은 어린애를 어르듯 말했다. “날이 곧 저물거야. 당신이 솔직히 말하면, 타이중에 돌아갈 기차가 아직 떠나지 않았을 거야”. 그들은 처음부터 줄곧 그녀에게 재촉해 말하기를 “당신집 사람들은 속이 탈거야. 빨리 털어놓아”라고 하고, 잠시 후에는 “자 봐. 날이 저물었지. 아직도 털어놓지 않는데, 털어놓으면 집에 갈 수 있어”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당신 애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미국에 유학간 그 친구가 내 타이중 동창이지. 당신 가족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어. 당신 딸이 왜 출국할 수 없는지 알고 있나? 다 당신 문제 때문이야. 당신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면, 당신 딸은 출국할 수 있어”라고 했다.

일이 없는데 어떻게 지어낼 수 있는가? 상시원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자기가 여기에 구금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집의 애들을 돌보아주어야 하는데, 남편이 어떻게 집을 꾸려갈지 걱정이 되었다. 자기 딸은 이미 대학을 졸업해 한 명은 영국에 유학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 명은 미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 출국 허가증을 받지 못했다. 조사국 인원은 계속 자녀의 전도를 들먹이며 그녀를 협박하였는데, 이런 일들이 상시원의 마음을 뒤흔들어, 그녀는 극히 혼란스러워졌고, 자신을 회색하면 자녀들이 순조롭게 출국하여 유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조사국 인원의 뜻대로 조작된 자백서를 썼다. 조사국 인원이 읽어본 후, 끊임없이 내용을 보충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만족할만한 자백서를 다시 쓴 후 군사법원으로 이송해 기소되었다.<sup>13)</sup>

## 4. 군사법정 기소와 재판

### 1) 군사검찰관 기소

조사국은 상시원을 5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50일간 구류 심문하였으며, 자백서를 얻은

12) 商希驪 구술기록.

13) 商希驪 구술기록.

후에,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 6월 25일 군사검찰관이 그녀의 자백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소하였다. (본 사건과 관련된 친척들의 일상생활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글 속의 약간 명은 익명으로 표시한다.)

대만 경비총사령부 군사검찰관 기소서 61년 警檢訴字003호

60년 遵戒字 제 4469호

피고 상시원(또 다른 이름은 상슈즈). 여자. 54세(민국 65년 xx월 xx일 출생). 푸젠성 진장현 사람. 성립 타이중여중 교원. 타이중시 xx리 xx지에 2호 거주 (국민신분증번호: 중시서3자 제x6x8호)

구속 중

상기 피고는 반란사건으로 조사를 마쳤고, 기소내용을 시인하였으며, 이에 범죄사실, 증거 및 저촉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범죄사실

상시원은 민국 21년 초여름 푸젠 진장에서 난화여중 3학년일 때, 정췌취(대륙거주)의 소개로 공산비적당에 가입하였고, 27년 난핑 전시 민중교육인원 훈련소에 입학하여 학습하고, 리스지에(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 허뽤화(대륙 거주), 커루이예(기결 반란범), 천췌준(대륙 거주) 등 비적들과 소조 활동을 하였는데, 이 사건은 사법행정부 조사국 (이하에서는 조사국으로 약칭)의 수사를 거쳐, 상시원은 본부 조사로 이송되었음.

증거와 저촉법조문

심문에 따르면 상시원은 민국 21년 초여름 푸젠 진장 난화여중 3학년때, 동창 멩수밍의 소개를 통해 정췌취를 알게 되었고, 다시 정을 통해 다시 비적당 사상을 받아들였고, 이어서 정의 소개로 공산비적당에 가입하였으며, 27년에는 푸젠 난핑 전시 민중교육인원 훈련소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고, 6주간 훈련을 받았는데, 이 훈련소의 책임 직원이 모두 비적당에 관련된 분자였기 때문에, 리스지에, 허뽤화, 거루아예, 천췌준 등 비적들과 더불어 소조를 결성하여, 28년 말, 푸젠성 훈련단 단기교사반에서 훈련을 받고, 계속 리스지에, 커루오예 등 비적들과 2주간 소조회의를 한차례 열어, 함께 공산주의 사상 및 공산당을 위해 어떻게 공작을 하는가 등의 문제를 토론하는 등의 정을 보였는데,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피고와 정췌취 모두 비당과 연루된 분자임이 조사되었고, 또한 증인 지x위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다:

“21년 내가 진장 서원 간부훈련대에서 공작하였을 때, 나는 중의 정췌취집에 거주하였는데, 정부인은 나에게 ‘상슈즈(즉 상시원)은 공산당분자야’라고 말한 적이 있고, 또 말하기를 ‘우리 선생 (정췌취를 가리킴)도 공산당분자고, 정부에서 그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在 卷 증거가 서로 일치하고, 또한 커루오예가 민국 55년 4월 6일 조사국에서 기술한 자백서 및 리스지에가 동년 9월 26일 조사기록에 서술된 피고와의 사이에 비적당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

한 것, 각각의 자백서와 기록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자백서와 사실은 서로 부합되어, 믿을 수 있어, 사실과 증거가 명확하니, 공산비당계 반란조직으로 조사되었고, 피고가 반란조직에 참가하였으므로, 민국38년 6월 20일 반란징벌 조례 반포 전이지만, 아직까지 자수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이탈했다는 기타 사실증명이 없어, 사법원 대법관회의 석자 제 68호 해석에 따라, 그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 행위에 비추어, 분명히 반란징벌 조례 제 5조의 혐의에 저촉되고, 반란징벌 조례 제 10조 후단에 따라, 군사재판법 제 145조 제 1항에 따라 기소한다.

본부 군사법정 전

중화민국 60년 6월 25일

군사검찰관: 후x즈

위의 정보는 본문과 같음을 증명함

중화민국 60년 7월 12일

서기관: 꾸오x황

2) 경비총사령부 판결

상시원은 기소된 후, 법정에서 부인하고, 자백서는 조사국 인원이 피로·위협·유혹·사기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심문하여 강제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원은 법정이 난화여중 교장 왕포와 까오딩팅, 리슝 등을 소환해 피고가 전시 훈련소에 참가하게된 사정을 설명해주도록 요구하였다. 상시원은 그 훈련소가 난핑에 있었고, 푸젠성 지방정부가 설립한 것이라고 서술했다. 당시에는 벽지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참상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 교도원(즉 비정식 임시 교사)가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3개월마다 지구를 바꾸어 가면서 교도원이 소학교 교사에게 일본인이 어떻게 중국을 침략하여 동포를 살해하였는지 하는 시사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소학교 학생을 가르치도록 하였는데, 상시원은 용춘과 더화에 간적이 있었다.

상시원은 또한 훈련소에서 모두 네 명의 여학생이 있었고, 나머지가 남학생이었는데, 그들은 분반하여 수업하여 서로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리스지에라는 이름을 들었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업내용은 총통언론, 국부가 남긴 가르침, 국제정세, 교재교육법, 소조 토론 등이었다. 그들 또한 동창회를 열었고, 행군하거나 체조 또는 단체활동을 진행할 때 모두 ‘류망 3부곡’, ‘의용군 행진곡’을 합창했는데, 이들 노래는 누구나 부를 줄 알았으며, 광복 후에 대만에서 당국이 중공의 국가로 인정한 후에는 부르는 것이 금지되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민중은 일본군의 폭격을 피하기 위해, 한 달에도 여러 번씩 이사를 했고, 모두 일본인을

중요하였으며, 상시원이 훈련소에 참가한 것은 완전히 애국심에 따른 것이었다.

상시원은 지x위, 리스지에 모두 그녀가 공산당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고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그들 두 사람과 대질 심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14)</sup>

60년(1971) 8월 7일, 경비총사령부 재판법정은 상시원 사건에 대해 이하의 이유에 근거해 판결을 내렸다.

(1) 조사국이 민국 55년 (1966), 리스지에, 커루오에 반란사건을 심리하였을 때, 법정은 고문하여 공술을 재촉하지 않았다.

(2) 증인 지x위, 리스지에의 공술과 피고의 자백의 내용은 서로 부합한다.

(3) 공산당은 일찍이 조직을 확장하고, 적극적으로 당의 무리를 확대하기 위해, 그 포섭 대상 및 연령이 당 규약에서 규정한 것처럼 엄격하지 않았다. 피고가 참가한 훈련소는 비록 정부 설립이지만, 실제로 공산당 분자가 장악하였고, 왕포, 까오덩탕, 리슝 등은 당시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므로, 증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

(4) 증인 지x위, 리스지에의 증언은 민국 55년 수사 중에 이미 종결된 것이므로, 대질할 필요가 없다.

(5) 피고가 대만에 온 후 열심히 가르치고 훌륭한 생활을 했다는 것에 관해서는, 이는 직분 내의 일이고, 반란조직에 참가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반증이 될 수 없다. 피고가 반란조직에 참가한 것은 분명히 민국 38년(1949) 6월 20일 반란 징벌 조례 반포 전이지만, 아직까지 자수하지 않았고, 그 조직으로부터 이탈했다는 기타 사실증명이 없으므로, 사법원 대법관회의 결석자 제 608호 해석에 따라 그 행위는 지속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반란조직 가담죄에 속한다.

상론을 총결하여, 군사재판법원 1073조 전단, 반란징벌 조례 제 10조 후단, 제 5조, 제 12조, 형법 제 37조 제 2항에 따라 징역 10년 공민권 박탈 5년에 처한다.<sup>15)</sup>

경비총사령부의 이상의 판결에 대해 피고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변호사 천우춘을 통해 민국 61년(1972) 1월 6일 법정에 이하 사항을 조사해줄 것을 청원하였다.

(1) 피고가 푸젠성 훈련소에서 했던 행위는 30여년 전의 행위이며, 이미 형법 제 80조에서 정한 20년의 공소시효를 지났으며, 이런 행위의 지속성도 없다. 또한 당시 푸젠은 계엄지구도 아니었고, 반란징벌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군사기관은 이에 대해 재판권이 없으므로, 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함.

(2) 군사감찰관이 제기한 증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와 대질시켜줄 것을 요구함

(3) 법정이 피고가 대만에 온 후의 행위에 대해 그것이 지속 중인지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함

14) 이세걸 안건은 이세걸, 조사국연구, 대북: 이오출판사, 1995. 商希驥 구술기록을 참조.  
15) 민국 60년(1971), 8월 7일, 대만성 경비총사령부 판결 61년도 초특자 제3호, 60년 준계자제5373호 당안.

천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정이 마땅히 피고에 유리한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16)</sup>

상시원이 구속된 후 그녀의 남편 왕정은 그녀의 변호를 맡도록 여러 곳의 변호사에게 부탁하였다. 첫 번째 변호사 천우춘은 군사법관을 맡은 적이 있었고, 두 번째 변호사 리리에정은 군사 고등법원(군법복판국) 주임을 맡은 적이 있었다. 그들 모두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였는데,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안 후에 왕정에 대해서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리 변호사는 항소하면, 죄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피고가 법률이란 '대쪽같이 끈기' 때문에 그녀에게 무죄를 내릴 것이라고 깊이 신뢰하여 항소하도록 요청하였는데, 민국 61년(1972) 1월 20일 징역 10년에 공민권 박탈은 원래의 5년에서 3년이 더해져 8년이 되었다.<sup>17)</sup>

### 5. 상시원 사건의 변론

상시원 사건은 재심판결을 거친 후 사건의 당사자와 가족, 변호사는 곧바로 법정, 정부고위층에게 적극적으로 이하와 같은 재심청구 행위를 전개하였다.

- 3월 변호사 리리에, '변론요지' 제출
- 3월 변호사 리리에, '재심청구서' 제출
- 3월 14일 변호사 천우춘, '.....이유' 제출
- 3월 16일 상시원 '상술답변서' 제출
- 4월 2일 왕정 '보충이유진술서' 제출
- 5월 17일 국방부 판결재정서, '청원의 반박회신'
- 6월 28일 상시원, '재심 청원' 제출
- 7월 20일 경비총사령부, '재심요청서 반박회신'
- 7월 28일 왕정, '재심청원 보충이유서' 제출
- 7월 31일 상시원, '재심청원 보충이유서장' 제출
- 8월 2일 상시원, '항고서장' 제출
- 8월 17일 국방부, '항고 반박 회신'
- 8월 25일 상시원의 6명 자녀, 감찰원에 '탄원서' 제출

16) 민국 61년(1972) 1월 6일 선임 변호인 진무춘 성명 문건.  
17) 商希驥 방문기록. 민국 61년 1.10 왕위 진술서.

10월 11일 상시원의 딸, 감찰위원에게 탄원서 우송

10월 12일 상시원의 아들, 구국단주임 장징구오에게 탄원서 우송

상시원은 법관의 판결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조사국의 담당자는 커루오예의 불합리한 말과 리스제에가 전한 말을 믿고 피고에게 자수하라고 명령한 후 체포하고, 피로한 신문·협박·유혹·사기 등의 수단으로 피고에게 가짜 자백서를 쓰게 해서는 안되었다.

(2) 민국 21년 여름, 피고는 진장 난화여중 3학년이었을 때, 명수밍의 부탁으로 정췌취가 옆 집을 빌리도록 소개해 주었지만, 피고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고, 그가 의사이름을 내걸고 중의학을 배울 학생을 모집한 지 수개월 후 그가 체포되었다. 그가 의사생활을 하던 때, 낮에는 학생을 가르치고, 밤에는 돌아와 문을 닫고있었으며, 당시 피고는 졸업시험에 바빴고, 반장을 맡고 있었고, 또 중의학을 배우는데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모가 피고에게 공산당 사상을 주입할 수 없고, 더욱이 그와 비적 활동류의 활동에 종사할 수 없었다. 거짓 자백서 중 써 어있는 정비가 피고를 끌어들이 비적당에 가입케 하고 독서회를 조직하여, 유인물을 돌리고, 소조 토론을 진행하고, 성외에서 민중야학을 열었다는 등의 일은 모두 조사인원이 주야로 협박하여 쓰게 된 것이다. 15세도 안된 여학생에게 정치의식이란 게 있을 수 없으며, 어찌 단시간 내에 잘 알지도 못하는 45세의 남자의 말을 가볍게 믿을 수 있었겠는가? 당시 피고는 비록 정모의 체포에 연루되어, 치안인원에게 불려가 신문을 받았으나, 3일간 조사한 결과 치안당국은 피고의 사상이 건전하고 정모와 조금도 비적당 관계가 없으며, 확실히 무죄임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석방되어 당시 난화여중 교장 왕포 선생이 데리고 갔다. 피고와 변호사는 여러 번 왕포 선생을 소환하여 증언을 들어달라고 간청하였는데, 이 이유 때문에 왕선생은 피고의 언행 및 사람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당시에 발생한 일에 대해 가장 분명히 알고 있으며, 이 일은 또한 본사건의 근원이고 또한 심판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소환조사는 당연히 합법적이고 이치에 맞는다. 그러나 아직 법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이에 왕선생은 60년 9월 6일 증명서를 제출하여 말하기를 “민국 21년 본인은 진장 사립 난화여중 교장직을 맡고 있었다. 학생 상시원은 3학년을 마쳤고, 품행과 학업이 모두 뛰어났었는데, 근처에 사는 정췌취가 체포된 사건 때문에 학생 우도 잘못해서 기관에 불려가 신문을 받았다. 조사를 받은 결과 그 사상이 순수하고 죄 혐의가 없으며 정의 사건과 무관함이 밝혀져, 석방되었다. 이에 본인이 교장의 신분으로 데리고 돌아온 일이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거짓 자백서에 써어있는 정비 조직에 참여하여 비적 활동을 했다는 일이 결코 자신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3) 공소장에서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 지x위 또한 60년 10월 6일 서면 증언에서 밝히기를, “..... 나는 한번도 정췌취나 어떤 다른 사람이 상슈즈가 비당조직에 참여하였거나 비당을 위해

활동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고, 60년 12월 27일 법관에 소환되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다. 법관이 물기를 “당신은 상시원이 법률을 위반한 사상언행을 했다는 것과 관련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녀가 답하기를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는 공소장에서 지x위가 증언했다고 하는 “27,8년에 나는 정췌취의 집에서 정부인이 상슈즈가 공산분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과 부합하지 않고, 그의 서면증언과 분명히 일치하고 있다. 법관이 다시 물기를 “검찰관은 6월 24일 당신더러 나와서 증언하라고 했습니까?”하자, 그녀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조사원이 우리 집에 와서 나더러 쓰라고 했습니다”라고 했다. 이로부터 보건대 공소장에서 말하는 증거란 지x위 본인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사인원 자신이 피고의 범죄증거가 없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자백 또한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6월 23일 피고가 이곳에 있던 두 번째 날 지x위로 하여금 위증토른 한 것이다. 피고는 지x위를 모르며, 그녀는 법정에서 나와 증언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피고의 증거에 유리할 것이니, 법관은 마땅히 신뢰하여야 한다.

(4) 리스지에와 관련된 언급: “27년 11월 내가 안지 민교반에서 상시원이 공산당분자라고 루즈원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일은, 설사 루즈원이 이런 말을 했다하더라도 정췌취의 사건이 잘못 전달되어, 피고가 이미 무죄 석방되었다는 것을 모르고서 소문을 듣고서 믿은 것이지만, 마땅히 사실과 서로 부합하여야 하니 법관은 다시 조사하고 리스지에를 소환하여 대질해야 한다.

(5) 그 외, 60년 1월 타이중 조사소 조사원이 피고의 동료인 췌선생에게 부탁해 피고더러 조사소에 나와 ‘자수’하라고 했다는 일과 관련해, 당시 피고는 참으로 이상하여, 줄곧 어떤 일 때문에 자수해야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고, 따라서 췌선생에게 부탁하여 조사소의 인원에게 피고의 과거 학력과 경력을 전달토록 했지만, 조사소 사람은 “자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게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피고는 자문하였으나 일생 국가에 대해 청백하였고, 충성을 다하고 직분을 지켰으며,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 실로 자수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평소대로 가르치고 있었다. 만일 피고가 참으로 반란분자였다면 사전에 깨닫고 빨리 자수하였거나 미리 죄를 벗어날 길을 준비할 수 있었지, 결코 앉아서 체포되기를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법관은 거짓자백서의 내용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sup>18)</sup>

그리고 상시원의 변호사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변호를 하였다.

(1) 군사재판법 제 168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자백을 했더라도 기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여 사실과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만 한다”고 되어있고, 형사소송법 제 156조 제 2항의 규정에는 “피고의 자백은 유죄판결의 유일한 증거가 되어서는 안되며, 기타 필요한 증거를 조사

18) 민국 61년(1972) 3.16. 商希耀 군법상소담변서장.

하여 사실과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만 한다”고 되어있다. 변호사는 피고가 수사기간에 자백을 했지만 이 자백은 조사국 유치장의 불법 구금기간의 것이고, 조사인원이 다른 사건의 피고인 지x위, 리스지에, 커루오예 등의 사람의 말에 의거해, 계속 피로를 가중시키는 심문방법을 사용하여 피고의 정신을 붕괴상태로 몰고 갔으며, 피고를 유혹하여 말하기를 자백하면 정치해결을 볼 수 있다고 하고, 자수 처리하면 곧 석방된다고 하여, 피고는 자유를 얻고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조사인원의 뜻대로 거짓 자백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피고의 거짓자백은 그 행위시간이 40년 전으로 오래된 것이고, 그 장소도 미수복지구 푸젠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 또한 다수가 미수복지구에 있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증거라고는 조사국 (60) 久(1)자 제 316059호 서신이 피고에게 죄 혐의가 있다고 한 것은 자백 이외에 따로 자료가 없으니, 곧 피고의 거짓자백의 진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인즉, 법에 따라 이 거짓자백을 채택해 피고가 범죄를 인정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 160조의 규정에 따르면 “증인의 개인의견이나 추측의 말은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입법취지는 증인이 직접 경험한 일을 사실에 입각해 증거로 채택하는 것 말고는 추측의 말이나 소문 따위는 모두 사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159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판정 이외에서의 증인의 진술은 법률이 규정한 이외에는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이는 재판의 주관 기구가 조사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법원 53년 臺上字 제666호 판결을 참고하면, 범죄사실의 인정은 진실한 증거에 따라야 하고, 증거가 사실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추측의 방법으로 판단의 기초로 삼기는 어렵다. 동 법원의 30년 상자 제 1152호의 판결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이 법원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증거 자체에 허물이 있거나 증거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사실심 법원은 판결의 기초로 채택하고, 그 자유판단의 직권행사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동법원 54년 臺上字 제1944호 판결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이 비록 법원의 자유판단에 따르지만, 필요한 상당한 조사가 있어야 자유판단이 가능하고, 따라서 사실을 심리하는 법원은 서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에 대해,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를 피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다시 이 증인의 공술을 살펴보면, “나는 본래 그가 비적당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고 해 그 내용이 소문임을 알 수 있고, 법원도 리스지에를 법원에 소환해 증언을 들은 적도 없으므로, 재판에 속하지 않은 진술은 법에 따라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

(3) 다음으로 피고의 행위가 여전히 계속중이라는 구절에 관해서는, 피고가 삼민주의를 신봉하여, 일찍이 민국 30년에 중국국민당에 가입하였고, 福字 제157985호 당원증서를 지니고 있으며, 민국 34년에 삼민주의 청년단에 가입하여 푸젠성 지단부 閩字 제62988호 단원증을 지니고 있고, 35년 봄에는 푸젠성 지단부 룽지중학 분단 간사회 제6구 구장에 임명되어, 룽중 분단 간사회의 파견장을 지니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각 항 증거물 복사본을 참고), 룽중분단에서는

제6구 구장을 맡아 단 사무에 열심이었고, 또 이 학교 교장 시에신저우 선생이 증명서를 제출 하였으니 조사할 수 있으며, 시에 R장은 현재 타이난시 따칭 국립중학 교장을 맡고 있다. 피고는 35년 가을 남편 왕정 및 자녀들과 모두 대만으로 이사하여, 타이중시 성립 타이중 여중에서 가르치기 시작해 이미 20여년의 경력이 있는데, 국책을 받들고 열심히 가르치며, 여러 번 수상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수상책자가 증명한다. 민국 42년에는 남편 왕정이 영지초를 기르는 것을 도와 필리핀에 여행가는 화교 왕씨 종친회에게 주어 장총통의 만수를 빌도록 헌납하였으며, 장자 왕xx를 국민당부의 소조장으로 참가토록 하여, 일가가 충성스럽고 불법스런 언행은 하지 않았다. 이로 보건대 피고가 40년 전 비당에 참가하여 비당 선전을 한 일이 없음을 반증할 뿐 아니라,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피고가 이미 비당과는 관계를 끊었음을 충분히 증명하니, 법에 따라 처벌하지 말고, 원심은 마땅히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국국민당이 조사해줄 것을 부탁하고, 전 룽지중학 교장 시에신저우 선생을 소환하여, 피고가 국가에 대해 불충한 사실이 있는지를 증명토록 해야한다.<sup>19)</sup>

이상 피고와 변호사의 여러 번 거듭되는 답변에 의거해 볼 때, 법원은 거짓자백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유리한 증인과 증거를 신중히 재조사하여야 하고, 법원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법관, 검찰, 조사국원 사이에 마치 ‘관은 관끼리 서로 보호하고’ 서로 비호하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해 몇몇 정치수난자의 인터뷰 기록에 의거하면, 군법심판 진술은 기실 조사인원이 자백서를 얻는 단계에서 이미 당사자의 운명을 결정하며, 군사재판은 검찰관의 기소장에 의존하는데, 기소장 내용은 조사국 인원이 신문할 때의 자백서에 의거해 판결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 증거를 중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부당한 재판은 계엄시기 대량으로 ‘원한스러운 사건’ ‘조작된 사건’ ‘잘못된 사건’이 생겨난 원인일 수 있다.<sup>20)</sup>

## 6. 맺음말

위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상시원은 어렸을 때 중일전쟁의 폭발을 맞아, 일찍이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일군이 중국을 침략한 시사적인 이야기를 가르쳤고, 동포를 교육하여 항전 보국토록 했으며, 대만에 온 이후에는 의연히 교육직위를 지켜서 평생을 나라를 위해 인재를 길러내고, 교육을 받들었다. 상시원은 교육계가 공인한 훌륭한 교사이고, 가정에서는 현모양처이며, 남편 왕정은 일찍이 항전시기에 화교 청년군을 가르쳐 중군 보국토록 했고, 그 후에는 또한 대

19) 민국 61년(1972) 3.14. 선임변호사 진무춘 성청복판이유서.

20) 동상 최소평사건, 최소평여사 방문기록; 오문성-허설희 채편, 계엄시기 대만정치사건 구술역사, 남두: 대만 성문현위원회, 2001.

만에 와서 교직에 종사했다. 상시원의 여섯 명의 자녀는 모친이 감옥에 있을 때 늘 부친과 어머니를 찾아왔는데, 그들 중 둘은 미국에서 엔지니어가 되었고, 네 명은 대만의 대학과 사범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자녀들의 사업상에서의 성취가 상시원에게는 다소 위안이 된다. 상시원처럼 현숙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여성이 어릴 적 친진무구하게도 '공비' 혐의가 있는 집에 있다는 이유로 '공산당'의 길을 걸은 것으로 판결되어 원망스럽게도 10년형에 공민권 박탈 8년을 선고받았다.<sup>21)</sup>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항전시기 정부는 일본군이 침략하여 나라를 잃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 전중국에 당파와 남녀계급 종족을 불문하고 함께 항전에 나서자는 전민 총력 동원행위를 호소한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조사인원이 '간첩' 사건을 조사할 때는 마치 이런 역사 지식이 없는 것처럼 늘 '허공에서 자라고' '사실을 왜곡'하는가? 또한 왜 우리의 법률교육은 대다수 군법인원들로 하여금 그 전공소양에서 벗어나 법관이 마땅히 지녀야 할 공명正大한 법 집행의식을 잃도록 만드는가?

대략의 추산에 따르면 대만 지구계엄시기의 반란 사건은 2만9천여 건에 이르며,<sup>22)</sup> 이 글에서 토론한 고등학교 여교사 상시원 사건도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수많은 사건들의 역사진상은 정부의 신속한 자료공개에 따라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계엄시기의 부당 판결의 결과를 개괄해보면, 수난자의 인신 자유와 생명안전을 박탈하고 재산손실을 끼쳤으며 그 친지들에게 심각한 심신의 손상을 입힌 것 외에도 특무정치와 부당 판결이 대만 사회에 가져온 악영향은 정부에 대한 민중의 신뢰상실, 더욱이 사법재판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다. 이후 대만은 극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데, 민중과 정부사이의 부단한 이해 충돌 중 민주·법치제도를 개혁하고 인권의 교육사업을 건설 보급하여야 한다.

부록: 상시원사건 관련 문서자료 목록 (당안 문건 명칭, 일자)

1. 대만경비총사령부 군사검찰관기소서 (61년 경검관 기소서 제008호: 60년 준계자 제4469호) 1971.7.12
2. 商希韜 진무춘 변호사 변호의지 1971
3. 대만경비총사령부 판결서 1971.08.07
4. 왕파 증명서 1971.09.06
5. 기벽옥 증명서 1971.10.06
6. 선임변호인 진무춘 변호사 성청서 1972.01.06

21) 商希韜 구술기록 참조

22) 1975년 정부는 죄범감형조례를 제정하여 대사면을 공포하고 商希韜은 형기의 1/3이 감형되어 감옥에 들어간지 6년 7개월만에 출옥하였다. 商希韜 구술기록 참조

7. 왕휘 진술서 1972.01.10
8. 商希韜 이열 변호사 성청복판 변호의지 1972.03
9. 선임변호인 진무춘 변호사 성청복판 이유서 1972.03.14
10. 商希韜 군법상소답변서장 1972.03.16
11. 왕휘 보조인 진술보충이유서 1972.04.02
12. 이X봉, 증명서 1972.05.22
13. 국방부 판결 (성청복판반박) 1972.6.1
14. 商希韜 성청재심 이유서 1972.6.28
15. 商希韜 이열 변호사 군법 성청재심서장 1972.7.6
16. 대만 경비총사령부 재정서 (재심 성청박회) (62년 도 재자 제1호: 61년 釋理자 제4661호) 1972.7.20
17. 商希韜, 왕휘, 성청재심보충이유서 1972.7.28
18. 商希韜 군법 성청 재심보충이유서장 1972.7.31
19. 商希韜 군법항고서장 1972. 8.2
20. 국방부 재정서 1972.8.23
21. 商希韜 자녀정 감찰원 1972.8.25
22. 정명암정 장경국서 1972. 10
23. 商希韜 자녀정 감찰위원서 1972. 10.11
24. 商希韜 자녀정 장경국서 1972.10.12
25. 부건: 商希韜 복무증명서, 연종고핵훈령급 장장 1946-1969.



## ‘교과서 문제’에 나타난 일본의 아시아 인식

다나카 히로시(田中宏, 류코쿠 대학)

### 1. 교과서 문제의 전사(前史)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는 긴 역사가 있다. 예를 들면 『전후사 대사전』(三省堂, 1991)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1955년 8월에 여당인 일본 민주당이 『우려할만한 교과서 문제』를 발행하여, 미야하라 세이치(宮原誠一)편 『일반사회』와 오사다 신(長田新)편 『모범중학사회』 등의 고교·중학교용 사회과 교과서를 지명하여, ‘사회주의를 예찬한 편견에 사로잡힌 교과서’라고 비판을 했다. 문부성은 이를 받아 들여 교과서 문제 조사관 제도를 발족시켜 검정을 강화하여 검정에 붙여진 교과서가 모두 불합격으로 판정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교과서 집필자가 집필을 단념을 하게 되었고,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가 교과서 재판을 제기하는 배경이 되었다.’(이에나가 재판은 1997년 8월에 끝이 났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문부성은 1956년에 ‘교과서 조사관’ 제도를 발족시키고 1958년에는 ‘검정 기준’을 관보에 고시하는 등, 검정에 관한 법제를 강화하여 많은 교과서가 검정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나가 사부로는 교과서 검정이 헌법이 금지한 검열이며 교육 기본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지배’에 해당된다고 하여, 1965년에 63년, 64년의 『신일본사』에 대한 검정처분에 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제1차 소송을, 이어서 67년에는 66년의 검정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제2차 소송을, 또한 84년에는 80년, 82년, 83년의 검정처분에 관한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제3차 소송을 제기했다. 제2차 소송의 도쿄 지방재판소 판결(70년 7월, 스기모토 판결), 고등법원 판결(75년 12월)처럼 검정이 부당하다고 한 판결도 나왔다.

‘교과서 문제’가 외교 문제화된 것은 이러한 경위 속에서 이루어졌다. 중일국교회복으로부터 10주년에 해당하는 1982년, 일본의 교과서에 있어 근·현대사 부분의 기술에 관하여 중국이나 한국, 나아가서는 동남 아시아 전역에서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교과서 검정과 조선』

고베(神戸)학생·청년센터 1982년, 『아시아경제자료월보(특집 아시아 여러 나라의 주요 신문에 나타난 ‘교과서 문제’ 기사 색인, 1982년 7월—9월)』, 1982년 11·12월호, 아시아 경제 연구소 참조).

1972년 9월의 ‘중일공동성명’의 전문(全文)에는 ‘일본측은 과거에 일본이 전쟁을 통해 중국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되어 있다. 일본이 체결한 전후(戰後) 처리에 관한 국제문서에는 종래 이러한 ‘역사 인식’이 나타난 예가 없었다. 즉 대일 평화조약(1951년) 소일공동선언(1956년), 한일기본조약(1965년) 그 어느 쪽에도 역사 인식에 해당되는 문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 중일공동성명이 갖는 이 ‘무계’를 일본측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점이 ‘교과서 문제’에 나타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82년 7월 일본 정부에 대해 ‘검정 과정에 일본군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한 역사적 사실을 개찬(改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찬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의 진상을 왜곡하고 있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평화우호조약이라는 중일공동성명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고, 양국의 평화우호 관계를 굳건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불리하며, 중국 인민의 감정을 손상시킨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중국정부는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중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이와 같은 중국의 입장에 유의하여 문부성이 검정한 교과서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제의를 했다(『아사히신문』 82년 7월 27일).

82년 8월 26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관방장관은 역사 교과서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1965(昭和40)년의 한일공동담화(日韓共同コミュニケ)에서,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인식을, 중국에 대해서는 중일공동성명에서 『과거에 일본이…(앞에서 인용했으므로 이하생략)…』라는 인식을 말했지만, 현재에도 이 인식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

여기에 인용한 ‘한일공동담화’란 65년 2월 한일 조약의 가조인(假調印)을 위해 방한(訪韓)한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이 귀국에 즈음해 이동원(李東元)외무부 장관과의 사이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는 ‘이동원 외무부 장관은 과거시기에 양 국민에게 불행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한국 국민의 대일 감정에 관하여 설명했다. 시이나 외상은 이 외무부 장관의 발언에 유의하고, 이와 같은 과거의 관계는 유감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로 되어 있다. 즉 한일조약에는 역사 인식을 나타내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겨우 이 담화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미야자와 관방장관의 담화는 ‘일본으로서는 아시아 근린 여러 나라와의 우호 친선을 다진 다음 이러한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부책임에서 시정한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교과서 검정에 즈음해서는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검정 기준을 고치고 전기(前期)의 주지(主旨)가 충분히 실현되도록 배려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으로 ‘교과서 문제’는 우선 중지부를 찍었던 것이다.

## 2. 1985년이라는 해

1985년은 전후 40주년이라는 한 단락의 해였다. 그 해 8월 1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수상은 전후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를 감행했다. 야스쿠니(靖國)신사는 이전의 군국주의를 지지한 정신적 지주이고 거기에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의 A급 전범도 합사(合祀)되어 있다. 나카소네 수상의 공식참배는 용의주도하게 준비되었다. 즉 일년 전인 84년 8월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관한 간담회'(靖國懇, 좌장·하야시 케이조林敬三-일본 적십자사사장)를 발족시켜 21회의 회합을 거듭하여 85년 8월 9일에 '보고서'가 제출되고, 이를 받아들여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가 행해진 것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관한 간담회의 멤버였던 우메하라 다케시(梅原猛)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전쟁의 피해는 가해자보다도 피해자 쪽이 훨씬 선명한 기억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나는 전후에 각 관련국의 노력에 의해 조금씩 개선되어 온 관계가 이를 계기로 악화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나는 꼭 외부성에 문의하라고 주장했지만, 다음 회의에서 외부성에 문의했더니 '한일·중일 관계가 악화되는 일은 없다' 라는 답변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와 같은 의견이 있다는 것을 답신 기록에 기입한다는 조건으로 물러났던 것이다 (중략). 그 후 나카소네 수상을 만날 기회가 있어, '내가 예측한 대로 됐군요. 위원을 사직해서라도 반대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자, 나카소네씨는 웃으며 '당신이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민당이 지탱할 수 없어'하고 말했다." (우메하라 다케시 '생각대로-일본외교에 대한 우려(思うままに-日本外交への憂慮)' 주니치신문 1992년 9월 21일자 석간. 또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나의 이력서』 일본 경제 신문, 1992년 1월 1일 - 31일에는 야스쿠니 공식 참배에 관한 언급은 없다) 야스쿠니 간담회의 '보고서'에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이 있는데, 이는 우메하라에 관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 외부성은 '악화되는 일은 없다'라는 답변을 한 것 같지만, '침화일군남경대도살우난동포기념관(侵華日軍南京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이 남경에, '침화일군 제731부대 죄증(罪證)진열관'이 하얼빈(哈爾濱) 교외에 각각 개관한 것은 나카소네 수상의 공식 참배와 같은 날이었던 것이다. 어느 것이나 상당히 대규모이지만, 일본의 외부성은 그 설립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일까? 남경의 기념관 관명은 등소평의 휘호에서 따왔다.

이전에 나는 남경에서 설립에 관한 유래를 들은 적이 있다. 전후 시내 31곳에 각자 기념비 등이 설치되었으나, 82년의 '교과서 문제'를 계기로 대규모 기념관을 설치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노구교(盧溝橋)사건 50주년(중일 국교 15주년이기도 하다)에 해당되는 87년에는 노구교에 대규모의 '중국대만항일전쟁기념관'이 오픈 했다. 또, 한국 천안시에 '독립 기념관'이 오픈 한 것도 같은 87년이다. 한국 기념관의 소재지에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역사의 왜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기념관의 건설을 발기했다 라고 솔직하게 쓰고 있다.

나카소네 수상의 야스쿠니 공식 참배는 아시아 각국에서 강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

듬해의 중의원과 참의원 동일 선거에서 자민당은 304 의석을 획득했지만 공식 참배만은 보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수반인 총리대신 및 대외 관계를 맡는 외상은 적어도 야스쿠니 참배를 보류해 왔지만, 2001년 8월, 드디어 고이즈미 수상이 앞당겨서 참배(13일)를 감행한 일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전후 40주년에 해당하는 1985년 5월 8일(독일 항복의 날), 이전의 동맹국인 서독의 와이츠제카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기념 연설을 하고 국제적으로도 호감을 사게 되었다. 『아사히(朝日)저널』지는 연말 호에 특집 '전후 40년, 지도자의 낙차—역사에서 배우는 자, 역사를 왜곡하는 자'를 꾸며, 5월의 와이츠제카 연설과 7월의 자민당 가루이자와(輕井澤)세미나에서의 나카소네 연설을, 각각 전문(全文) 게재했다. 그리고 전자에는 '과거에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 눈멀게 된다' 후자에는 '국가 국민은 오욕을 버리고 영광을 추구하여 전진한다'라는 표제를 붙였다.

와이즈제카 연설은 일본에서도 폭넓게 번역·소개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한 구절인 '희생자를 생각하며 마음에 새겨둔다'고 한 표현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쟁 희생자를 생각하며 마음에 새겨두는 모임'이 생기고, 86년 이후 매년 8월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부터 일본의 침략전쟁의 체험자를 일본에 초청하여 그 '역사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시민 집회를 각지에서 갖고 있다(매년의 보고서는 '아시아의 소리' 시리즈로서 간행).

이는 나카소네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아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그 조금 전의 '교과서 문제'에 있어 일본과 아시아의 역사 인식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 진의를 이해하고 있지 않았던 점이 야스쿠니 참배에 이르게 되었고, 서로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3. 내게 있어서의 교과서 문제

나는 1962년부터 10년 동안 민간에서 행하는 유학생지원단체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유학생과 나는 '대화'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1963년 11월에 천엔권의 초상이 '쇼토쿠 타이시(聖德太子)'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로 바뀌었다. 동남 아시아에서 온 어느 유학생은 「다나카(田中)씨 일본에서는 역사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민족의 원한을 사고 하얼빈 역에서 사살되었지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 일부러 문제화시키지 않아도... 게다가 매일 그 지폐를 사용할 재일 조선인의 입장이 되고 보면...」이라고 말한 것이다. 나는 순간 대답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 유학생은 또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이 더욱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점은 그것을 누구 한 사람의 일본인도 지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일본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한 문화인, 지식인으로부터 투고란에 등장하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는 전전(戰前)은 어떻든 간에 전후(戰後)에는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고 있다고 말하는데도..." 신랄한 비판이다.

그 후 찻집에서 커피 값을 지불할 때, “오늘도 이런 천엔 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네”하고 그 자리를 얼버무렸던 일이 생각난다. 당시는 아직 한일국교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유학생은 거의 없었다. 나와 아시아인 유학생 사이에는 대부분 연령차가 없고 일본의 전쟁에 대해서도 ‘공시(共時) 체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의 등장에도 특별한 느낌이 없었던 나와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던 그들과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교과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는 이미 20년 전에 그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감상이다.

상당히 뒤의 일이지만 일본의 서울 특파원이 한국의 대학생으로부터 역시 ‘이토 히로부미’의 천엔 권에 대해 같은 지적을 받았다. 즉 ‘당신은 일본의 천엔 권에 인쇄되어 있는 초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당신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한 사람인지나 알고 있습니까? 초대 조선총독(정확하게는 한국통감)이다. 일본의 식민지 침략의 원동력이 된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일본은 이제 침략을 하지 않는다. 평화국가가 됐다고 하면서 침략주의의 선두에 선 인물의 초상을 지폐에 인쇄해서 매일 사용하고 있다(시바다 순지柴田俊治 『아시아, 거기에 있는 우리들』 아사히신문사 1972년).

‘이토 히로부미’의 등장은 아무래도 단독으로 고안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사실을 점차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 택지 조성공사 때 유골이 발견되자, 일본군에 의한 화교 학살의 유골 수집이 진행되고 대일 배상을 요구하는 대집회가 열렸던 것이 1963년 8월 25일이었다. 나는 그 특집 기사를 나중에 어느 유학생으로부터 건네 받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

천황·황후가 출석하여 매년 8월 18일에 행해지는 ‘전국 전몰자 추도식’이 시작된 것도 같은 1963년부터이고, 또 이듬해 4월에는 중단되었던 ‘전몰자 훈장수여’도 부활했다. 훈장수여를 기뻐하는 어머니의 담화에 특공대원이었던 동안(童顔)의 소년의 사진이 배치된 기사가, 나의 사무용 책상에 슬쩍 놓여진 것은 이 때였다. 일본의 신문을 장식한 훈장수여 명부가 일본의 희생자 이름과 ‘이중 투영’ 되었을 거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일본측에는 아시아의 희생자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에도 없다는 사실이 간파되었던 것이다.

전후 점령 당국에 의해 군인연금 등이 ‘폐지’된 가운데, 전사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요구하며 발족한 ‘일본유족 후생연맹’(1949년 발족, 나중에 일본 유족회로)은 그 목적을 ‘유족의 상호부조, 위적(慰藉) 구제의 길을 열고 도의를 양양과 품성의 함양에 노력하고, 평화로운 일본 건설에 매진함과 동시에 전쟁방지, 나아가서는 세계의 영구적인 평화확립을 기하고, 이로써 전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다’고 하고 있다. 기관지 ‘일본유족통신’의 제목 아래에 매호 언급되던 이 문구가 미묘하게 수정된 것은 제161호(1964년 5월 1일 호)부터이다. 앞의 문구에 새로 ‘영령의 현창(顯彰)’이 삽입되고, 마침내 ‘전쟁의 방지’, ‘세계의 영구적인 평화확립’, ‘전 인류의 복지에 공헌’이 삭제된 것이다.

같은 제 161호의 톱기사에는 다음 아닌 ‘국가 백년의 도의 확립을 향해, 제 87회 이사회가

야스쿠니 신사 국가수호 촉진을 결의’로 되어 있다. 그 후, 야스쿠니 신사 법안의 국회 제출(69-73년), 그것이 성립되지 않자 1975년의 미키(三木)수상에 의한 ‘사적(私的) 참배’, 85년의 나카소네 수상의 ‘공식 참배’에 이른 것이다.

A급 전범 용의자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내각의 수반이 되고(1957.2~60.7), A급 전범인 가야(賀屋典宜, 종신형 후에 감형)가 입각(1963.7~64.7), 또한 가야는 62년 8월부터 77년 4월까지 일본 유족회의 회장이 되어 군인연금을 비롯한 전쟁 희생자 원호 정책의 확충을 위해 큰 힘을 발휘한다. 196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 속에서, 64년의 도쿄 올림픽, 70년의 오사카의 만국 박람회는 그것을 상징하는 이벤트였다. 도카이도(東海道) 신간선의 도쿄—신오사카간의 개통은 64년 10월, 메신(名神) 고속도로의 개통이 65년 7월, 도메이(東名) 고속도로의 개통이 69년 5월이었다.

한편 오오시마 나기사(大島渚)감독의 명작 다큐멘터리 ‘잊혀진 황군(忘れられた皇軍)’이 방영된 것은 1963년 8월의 일이었다(NTV계열). 그 다큐멘터리에서 일본의 군속으로 징용되어 전상자가 됐지만 ‘국적 차별’에 의해 아무런 국가보상도 받지 못한 재일 한국인의 현실이 부각되었지만, 아무런 정책의 변경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전쟁 희생자 원호정책의 확충은 1952년도부터는 해외에서 유골 수집(현재 약 124만), 70년도에는 ‘해외위령비 건설요령’을 제정하여 각지에 위령비 건설을 진행하고(현재 15 곳), 1976년부터는 유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위령 순례·성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은 전부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거기에는 침략전쟁이나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결과에 대한 ‘상상력’은 전혀 없다.

60년대 이후의 고도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일본인 전쟁 희생자에 대한 금전 지급의 증대나 야스쿠니의 복권을 목표로 한 움직임은 한편으로는 역사인식에 대한 왜곡을 수반한 것이었다. 자극적인 타이틀로 장기 연재된 ‘대동아전쟁 긍정론’의 등장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중앙 공론』, 1963년 9월—65년 6월호 수록).

#### 4. 호소카와 연설의 전과 후

나카소네의 야스쿠니 공식 참배와 와이즈체카 연설의 대조성에 관해서는 전술한 대로이다. 1986년에 참배하지 않는 점에 대해, 당시의 고토다 마사하루(後藤田正晴) 관방장관은 대일평화 조약 제11조에서 도쿄재판을 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야스쿠니 신사에는 A급 전범도 합사). 이후 수상이 몇 명이나 교체되었지만 참배는 보류되었다. 그러나 후지오 마사유키(藤尾正行)문부대신(86년), 오키노 세료(奥野誠亮) 국토청장관의 발언(88년) 등이 잇따랐다(모두 사임으로 결말). 또 이시하라 신타로 중의원 의원은 ‘남경대학 살은 중국인들이 만들어 낸 이야기’라는 망언(1990년)을 했다.

1989년은 크게 구분되는 해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천황의 죽음으로 연호가 ‘쇼와(昭和)’에서

‘혜세(平成)’로 바뀌고, 불가피하게 ‘전쟁’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또 ‘베를린 장벽’의 붕괴, 미소 수뇌의 몰타 회담은 동서 냉전의 종결을 가져온다.

90년 6월에는 한소국교수협(92년 8월, 한중국교수협), 91년에는 소련 해체와 큰 변동이 계속된다. 미국과 캐나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일본계 미·캐나다인 수용에 관하여 공식 사죄와 보상을 실현한 것은 1988년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 연방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83년의 보고, 88년에 특별입법 제정으로 진전되고, 90년부터 대통령의 사죄편지와 2만 달러의 보상금이 건네졌다. 캐나다에서는 1988년 말로니 수상과 전(全) 캐나다 일본인계 협회와의 사이에 ‘각서’ 조인, 그리고 말로니 수상이 사인한 ‘승인’이 수표와 함께 건네졌다. 일본에 귀국한 피수용자의 신청이나 문의에 응하기 위해 양국이 담당관을 일본에 파견한 것은 1989년이다.

또 소련이 전후(戰後)에 일본군민을 억류하고 강제 노동을 시켰던 사건은 오랫동안 소일 사이에 가시기가 되어 있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개혁 정책이 진행된 사이 시베리아 억류도 재평가되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91년 4월 방일 도중에 하바로브스크에서 일본인 억류자의 묘 앞에 헌화하고,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일본의 억류자 단체의 대표와도 면담했다. 또 60만 명의 억류자 명부를 지참하고 양국 간에 ‘포로 관련 소일협정’도 조인되고, 유골이나 매장지에 관한 자료, 소지품 등을 일본측에 인도하기로 약속되었다.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 방일 때, 천황은 ‘금세기 한 때 양국 사이에 불행한 과거가 존재한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고…(1984년 9월)라고 말했지만, 새로운 천황은 노태우 대통령을 맞이한 만찬회에서 ‘일본에 의해 초래된 불행한 시기에 한국 국민이 당한 고통을 생각할 때 나는 통석의 염을 금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다(1990년 5월). 양쪽 표현 사이에는 일정한 톤의 차이가 보여진다 하겠다.

걸프전쟁 후 자위대의 소해정(掃海艇)을 중동에 파견할 수 있도록 동남 아시아를 방문한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수상은 싱가포르에서 ‘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던 일본의 행위를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표현이었다(91년 5월). 그러나 현지 언론의 평론은 ‘일본수상이 그렇게 과거를 깊이 반성한다고 한다면 왜 ‘일본점령시기 사난(死難)기념비’를 방문하지 않았던 것일까. 일찍이 서독의 브란토 수상은 바르샤바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한 것이다(『연합조보(聯合早報)』91년 6월 1일자).

또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수상은 방한 때, 한국 국회의 연설에서 ‘최근 이른바 중군 위안부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와 같은 일로 실로 마음이 아프고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1992년 1월). 또 전술한 가이후 연설에는 ‘일본 국민 모두가 과거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믿는다’라고 했고, 미야자와 연설에서도 ‘과거사실을 직시하는 용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감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경계하는 마음을 국민들

사이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더욱 배양할 결의입니다’라고 했다.

다음 해 1993년 8월, 38년 간 계속되었던 자민당 정권이 막을 내리고, 비자민·비공산 연립 정권의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수상은 국회에서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나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초래했던 일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가이후, 미야자와와 연설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 호소카와 연설은 일본 내에서 행해졌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호소카와 연설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내는 세력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호소카와 수상의 역사 인식에 의문이 있습니다. 일본은 침략전쟁을 한 것일까?”하는 의견 광고가 등장하고(산케이신문, 93년 9월 9일자), 거기 게재된 ‘일본은 침략국이 아닌 국민 집회’의 결의에는 ‘국가의 영광된 독립의 보전과, 이와 불가분한 동아시아의 안정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침략 등과는 무연(無緣)의 의전(義戰)이었다’라고 말한다. 또한 10월 1일에는 일본 유족회가 ‘호소카와 총리대신의 침략전쟁 발언에 대한 항의 성명’을 내고, ‘호소카와 내각은 전쟁 책임의 반성과 사죄를 위한 국회결의의 우거(愚擧)를 범하려 하고 있다…’, 호소카와 총리대신의 도쿄재판 역사관에 더럽혀진 자학적 침략 발언에 대해 깊은 반성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당시의 회장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柳太郎)로, 96년 1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수상의 뒤를 이어 수상이 되어, 같은 해 7월 29일 자신의 생일에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만 이듬해는 ‘좌절’된다.

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은 담화로 “일본은 멀지 않은 과거의 한 때, 국가정책의 잘못으로 전쟁의 길을 걷고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미래에 이러한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의심할 여지없이 이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다시 절실하게 반성의 뜻을 나타내고,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표명합니다”라고 말했다.

2001년 8월 고이즈미 수상은 앞당겨서 한 야스쿠니 참배 때의 담화에서, 富山 담화를 따라 “아시아 근린 여러 나라에 대해 과거 한 때의 잘못된 국책에 근거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헤아릴 수 없는 참해(慘害)와 고통을 강요했습니다”라고 했다.

전후 50주년에 해당되는 1995년에는 후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등이 자유주의 역사관 연구회를 발족하고, 96년부터 산케이신문은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를 연재하였으며(후에 단행본 출간), 같은 해 12월에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결성된다. 그리고 우선 교과서에서 위안부에 관한 기술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쳐,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집필, 검정 합격에 이른 것이다.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두 흐름에 관한 논의에, 이상의 보고가 어떠한 식으로든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대만론』에 나타나는 대만 분리주의자의 노예의식

두지평 (杜繼平, 중국인민대학)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善紀)의 『대만론』은 대만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의 대만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뻔뻔스러운 모략으로, 대만 학계와 문화계 지식인과 여성단체 및 야당의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대만 독립파의 지식인, 정치인들과 단체는 고바야시와 대만의 그의 맹우 진메이링(金美齡), 쉬원룽(許文龍) 등을 적극적으로 성원하였다. 쌍방은 격렬한 논쟁을 전개하여, 그 싸움이 가라앉는데 수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의 와중에서 리덩후이(李登輝)를 필두로 한 대만 분리주의자들은 식민지의 주민으로 지배당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식민지 지배자의 입장에 서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찬양하고 일본 제국주의자를 미화하면서, 자존심 없는 노예의 얼굴을 세상에 드러냈다. 대만인의 존엄을 쟁취하기 위해서건, 일본 우익의 창궐을 막고 군국주의 악령이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건, 대만 분리주의자의 노예의식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명확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

『대만론』에서 리덩후이는 일본학교의 선생들이 학생에게, 일본이 대만을 식민지로 만든 것은 사람들에게 손해 끼치는 이기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고바야시가 일본의 젊은이들을 깨우쳐주라고 하면서 “일본이 대만에서 벌인 모든 것은 오히려 역사상 잘 기술할 가치가 있다. 그들은 일본인이 이곳에서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쉬원룽도 ‘일본 교과서 모임’의 교육 방침의 잘못은 일본의 전전의 공적을 논하지 않고 그저 과거는 모두 잘못이라고 한데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중국침략을 변호할 뿐 아니라 일본의 대만 점령에 저항한 의용군을 ‘류맹’ (일제 관방문서에서 말하는 ‘비적’)이라고 경멸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가 대만을 현대화했다고 칭송하고, “당시 대만은 일자리 찾기도 쉬웠고, 수입도 괜찮았으며, 치안상태도 좋아서, 간단히 말해 천당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의 대만 통치는 확실히 양심에 따른 일이라고 부를만하다.” 리덩후이는 일본식민주의를 찬양하는 쉬원룽의 이런 말에 대해 “100% 동의한다! 일본

인은 확실히 대만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한다.

리덩후이, 쉬원룽 등처럼 이렇게 일본식민주의에 아첨하고 대만 민중의 존엄을 짓밟은 뻔뻔스러운 논의들은 일본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격렬한 공격을 받았다. 심지어 쉬원룽이 대만의 과거 위안부는 ‘자원’이었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이 발언이 짐승만도 못한 것이라고 비판당했다. 그러나 대만 ‘건국당’ 주석 허원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만의 미디어가 대만론을 보도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통해 일본과 대만을 비판한 것은, 그들이 마음속에서는 매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일본의 우익 작가이지만, 그는 ‘대만론’이라는 작품 속에서 정치가,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대만인, 그리고 전후 국민당에 의해 식민지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 등, 각 세대 각 사회계층을 향하여 대만의식을 선전했다. 그리고 이 대만의식을 ‘신오골정신(新傲骨精神)’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것은 이 작가가 ‘오만(傲慢)’이라는 단어에서 지어낸 것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들이 자신의 직관과 인식에 따라 “대만론”의 정신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전해 주었다. ‘신오골정신’은 중국인이거나 한국인과는 다른 대만인의 개인주의와 독립주의의 독특한 표현이다.”

대만 독립파의 ‘재일 대만 동맹회’ 회장 린젠량도 “『대만론』은 대만인의 관점에 서서 대만 역사를 묘사한 저작이다”고 말했다. 대만 독립파 인사는 『대만론』 논쟁과정에서 고바야시, 리덩후이, 진메이링, 쉬원룽 등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고, 이런 류의 논조를 전개하고 있다.

대만 분리주의자가 『대만론』을 긍정하여 이런 황당하고 뻔뻔스런 논리를 전개하는 가답은 무엇인가. ① 대만 독립파는 일본식민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심복하여 일본제국주의 사상의 포로가 되었다. ② 이들은 일본 우익세력과 결탁하여 중국에 대항하고 대만을 분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공산당 총서기를 역임한 저명한 맑스주의 이론가 그람시(1891-1937)는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던, 통치를 공고하게 만들려고 하던, 언제나 무력과 문화 이 두 가지 대립하면서도 통일적인 요소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강제와 동의, 압박과 설득, 폭력과 문명, 권위와 교화는 반드시 둘 다 있어야 하고, 둘 다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 그람시는 특히 정치 투쟁 중에 얻은 지식·도덕상의 이데올로기 주도권(헤게모니 혹은 문화패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가 세계관·가치관·도덕규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고, 사람들의 행동과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주요한 의거를 구성하였는데, 더욱 확실히 말하면 사람이 주체인 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는 폭력으로 식민지민중을 압제하고 식민지의 경제자원을 약탈할 뿐 아니라, ‘우월한 문화’를 통해 식민지의 고유한 문화전통을 마비시키고 식민지 지배자의 가치체계를 이용해 새롭게 식민지 피지배자의 가치관을 만들어 내고, 식민지 주민은 심령·사상을 제어하여 식민지 피지배자가 육체상 혹은 영혼상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고 복종하는 노예가 되도록

만든다. 식민주의의 이런 이데올로기적 통제는 식민지 민중에 끼치는 위해는 폭력통치보다 훨씬 심원하며, 훨씬 더 큰 화가 된다. 식민지민중이 심령 상 마주치는 식민체제의 독소는 식민지 세력이 몰려났다고 바로 물이 빠지듯이 사라질 수 없다. 식민지가 형식상 정치 독립을 달성한 이후 식민지 지배자의 이데올로기 주도우세나 문화패권은 전혀럼 전 식민지 민중의 사상을 계속 통제하는 주재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 탈식민지 이론의 흥기는 바로 식민주의가 전 식민지 민중의 사상에 남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제기되었고, 제국주의의 문화패권을 없애고 전 식민지인의 사상 속의 남아 있는 노예근성을 제거하여 식민지 지배자의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고 노예들의 자각적인 주체지위를 회복하고 그 존엄과 자신감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파농은 식민지 지배자가 식민지의 문화전통을 파괴하고 왜곡하여 식민주의의 문화권력을 건립한다고 비판하면서 말하기를 “압박자는 결코 스스로 피압박 민족 및 그 문화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 반대로 진력을 다해 식민지 피지배자가 이미 그 본능 행위모델이 된 본국문화가 열등한 문화라는 것을 승인케 하고, 식민지 피지배자가 그의 ‘민족’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마지막으로 스스로가 자신들의 생리구조마저도 난잡 불순하고 온통 결점 투성이라고 자인케 하려고 한다.”(Fanon, 1966: 190).

파농은 또 지적하기를 “식민주의는 피지배자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는 데만 만족할 수 없다. 식민주의는 하나의 민족을 장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의 머리 속을 완전히 비워놓아 즐거워하며 손놓게 만든다. 식민주의는 사악한 논리에 따라 피압박민중의 역사에도 손을 뻗쳐 왜곡·변형하고 파괴한다..... 식민시대의 특징은 식민지 지배자가 식민지 피지배자를 자체의 문화로부터 소원하게 만들려 노력하는 것이고, 식민지 지배자가 한 것을 보면 그들이 대단히 철저하게 해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식민통치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현지인이 식민주의가 압축에 빠진 그들에게 빛을 드리우기 위해 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식민주의가 만들어내려는 효과는 현지인으로 하여금 식민지 지배자와 결별하면 그들이 곧장 다시 조야하고 타락하고 야만적인 상태에 빠져들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 이런 상황하에서, 무기를 들고 본 민족이 지닌 가치를 수호하려하고, 본 민족이 지닌 가치의 증거와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며, 가슴속으로부터 자신의 역사를 연구하려는 식민지 지식인은 반드시 그들 민중의 영혼을 해부해야 한다.” (Fanon, 1966: 170-171)

수많은 탈식민지론 논자들은 모두 민족독립이 사실 반드시 식민주의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식민시기 식민지 지배자가 지식과 가치체계에서 차지한 우세는 식민통치의 소실에 따라 사라지지 않았고, 예전처럼 숨어서 흩어지지 않고, 전 식민지 민중의 영혼속으로 옮겨 앉았다. 형식상의 민족의 독립은 단지 식민지에 대한 식민통치의 경제·정치·문화상의 손상을 은폐할 뿐이었다(Ghandi, 1998: 6-7). 인도의 저명한 탈식민 이론가 낸디(Ashis Nandy)는 폭력을 수단으로 삼는 강도식 식민주의 공격과 약탈은 적나라하게 본심의 탐욕을 드러냈지만, ‘자유’, ‘문명’의 이름으로, 낙후지구를 개화하고 비문명 국가민중의 심지를 계몽한

다고 자랑하는 식민주의는 식민지 주민의 영혼을 정복하는데 뜻을 두고 있고, 그 피해는 비교적 관찰되기 힘들고, 영향은 더욱 심원하다. 낸디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런 식민주의는 신체를 통제하는 외에 심령을 제어한다. 이는 식민사회로 하여금 전력을 다해 자신의 문화의 가치체계를 철저히 전환하도록 만든다. 이 과정에서 현대서방의 관념은 모든 곳에 침투하고, 시공간이나 심리적 범주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다. ‘서방’은 이제 무소 부재여서, 서방의 속인 동시에 서방의 밖에 있고, 각종 구조 속에 있고 영혼 속에도 있다.” (Nandy, 1983: xi).

#### 대만에 남아 있는 식민주의의 독소

비록 탈식민 이론의 비판의 예봉은 주로 서방의 구미 제국주의를 향하고 있지만, 일본도 그 주요한 대상이다.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이른바 ‘근대화’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중심사상은 ‘탈아 입구’, 즉 야만 미개화·낙후된 아시아를 벗어나 계속 서방을 학습해 유럽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세계강국의 대열에 끼어 든다는 것이다. 중일 갑오전쟁과 러일전쟁의 두 차례의 승리를 거둔 후 일본은 근엄하게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였고, 스스로 아직 근대화하지 못한 아시아 후진국가를 ‘개화’하는 ‘문명’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이를 대외침략의 구실로 삼았다. 대만·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통치는 서방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식민지에 심각한 상흔을 남겼으며, 대만의 경우 더욱 심했다.

대만에 머물던 전 50년간 일본의 주요한 정책은 항일운동을 진압하고 대만의 경제자원을 약탈하는 것이어서, 대만인의 문화, 의식을 전면 개조할 겨를이 없었다. 1930년대 전면적으로 중국대륙을 침략하고 나아가 동남아 국가들로 뻗어나간 후 본국의 인력과 물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식민지 민중과 물자를 동원하여 이른바 ‘대동아전쟁’에 투입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동화운동을 전개하여, 대만인의 민족의식을 소멸하는데 힘을 기울여, 한문 사용을 금지하고, 창씨개명을 장려하고, 일본 신도를 숭배할 것을 장려하고, 중국·중국인·중국문화를 멸시하는 반화·구화(仇華) 선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대만인을 일본천황에 충성을 맹세한 ‘황민’으로 개조하려고 힘을 썼는데, 실제로는 식민지민중을 일본제국주의 대외침략의 중박·忠犬으로 만들려는 의도였다. 이것이 집중적으로 표현된 것은 1937년 개시된 ‘황민화 운동’이다. 이런 역사의 흔적은 당시의 ‘황민 문학’과 양웨이리가 쓴 예신지(葉盛吉) 전기 『쌍향기』에 생동감 있게 나타나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는 대만에서 일종의 자존, 자각을 상실하게 하여, 몸은 식민지 피지배자면서 오히려 식민지 지배자의 입장에 서서 민족통치를 찬양하는 노예의식을 만들어냈다.

앞서 제기한 주체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주체의 영문 표현인 subject는 사실상 상반된 이중의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객체에 대한 인식주체, 역사 중에 동작을 만들어내는 주체를 가리키면서 또한 통치를 받는 신민을 가리킨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적인 성찰과

실천을 통해 교육·매체 등의 방식으로 조각된 이데올로기를 깨물어보지 못한다면 통치계급 이데올로기의 통제를 받고 깨어서 자각하는 의식이 없는 '신민'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진정한 자주능력, 자각의식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리덩후이 이후의 대만 분리주의자의 아침성 발언은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예의식의 비극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고바야시가 발표한 『대만론』의 목적은 그가 니시오 간지(西尾幹二)를 비판하였을 때 했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대만 해협이 일본 자신의 해상선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만일 일본이 중국을 제어하고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면 대만과 합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설령 일본 외교가 대만 패를 쓴다한들 누가 잘못이라 하겠는가? 단지 애석하게도 일본인은 일본국익의 옹호에 (대만이) 공헌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소중하게 이용하려면 현재가 유일한 기회이다. 나처럼 전후에 태어난 일본인이 식민통치 시대의 여러 일들을 추억하고 증거를 살펴보면 지금이 유일한 기회이고, 잘못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은 모든 것이 타임캡슐처럼 생생히 보존되어 있다. 일본인에 대해 대만은 확실히 귀중한 국가인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눈앞에서 보듯이 절실하게 전전의 상황과 역사가 남겨준 흔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일본이 국가 이익에 기반하여 용감하게 외교상 '대만' 패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진메이링 여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고, 나도 이런 '대만패를 쓰는' 방법에 동의한다. 이 때문에 나는 대만의 여러 세대를 살펴보고, 차이군찬 선생, 쉬원통 선생의 견해 등을 살펴보았으며, 일본의 식민통치와 서구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상황을 일본의 젊은이에게 소개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대만의 매체를 통해 나를 비난하였다. '일본 우파 만화가의 『대만론』, 이 책은 대만을 이용해 일본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고바야시는 『중국시두』 기자 류리어의 인터뷰에 응해 리덩후이의 친일언론 배후의 정치 기도를 지적하였다.

“리덩후이 선생 자신이 일본에 대해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와 몇 번 만났는데, 기실 그의 말에 전략적 요소가 담겨 있음을 느껴 피차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고, 비로소 그는 나와 이렇게 교류를 맺게 되었다. 그는 정치가이고 대만의 장래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변증법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주인과 노예는 대립적 통일체이고, 주인이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노예가 그를 주인으로 승인해야만 비로소 주인이 될 수 있다. 노예가 노역을 하지 않고, 떨어져 일어나 저항하면 주인은 그 통치지위를 유지할 수 없고, 주인-노예의 대립통일관계 또한 파괴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로소 자주·평등의 관계가 가능해진다. 『대만론』 풍파 중에 대만 분리주의가 보여준 아침이 담긴 노예의 언행은 대만인의 존엄을 모욕했을 뿐 아니라, 더욱 우려할 후과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일본 식민통치를 칭송하여 스스로 일본 우익의 주

구·충전이 되어 장차 일본우익의 기운을 북돋아 일본이 다시 대외침략 확장의 길을 열게 했다는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가 다시 일어나면 아시아 뿐 아니라 모든 세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일본민족 또한 반드시 불행한 재앙을 만날 것이다. 맑스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민족을 노예로 삼는 민족은 스스로 족쇄를 만드는 것이다.” 엥겔스도 이렇게 지적했다. “어떤 민족이던 다른 민족을 압박하게 되면 자유로운 민족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바야시의 『대만론』 및 대만 분리주의자의 노예의식을 비판하는 주요한 요지이다.

## 한국에서 본 교과서문제

하종문(한신대 국제학부)

### 1. 교과서문제에 관한 와다 씨의 칼럼

일본 내의 대표적인 진보파이자 지한파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씨는 이번 교과서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한겨레신문』에 일련의 칼럼을 기고했다. 와다 씨는 1982년의 교과서파동 이래로 줄곧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분투해 왔으며, 그런 전사를 고려하더라도 와다 씨의 일거수 일투족은 그 의미와 무게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이하에서 와다 씨의 칼럼 중 주요한 내용을 훑어보기로 하자.

먼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에서 검정에 제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서서히 논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을 때, 와다 씨는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후 무라야마 총리담화는 하시모토 류타로, 오부치 게이조, 모리 요시로 등 3대 자민당 총리에 의해 계승돼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 됐다(밑줄은 인용자, 이하 마찬가지). [중략]

당연히 이들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강제합방은 일본의 안전과 만주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했다거나 대동아전쟁은 아시아 해방을 위한 것이었다는 식의 기술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다면 무라야마 담화는 부정되고 이들의 반격은 성공한 꼴이 된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sup>1)</sup>

1) 와다 하루키, 「일본우익의 역사왜곡」, 『한겨레신문』 2000년 10월 23일.

그리고 그는 새역모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노다 검정위원의 경질극이 벌어지고 검정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을 때에도 검정 통과의 의미를 무라야마 담화와 연관시켜 설명했다.

만약 부분적이거나 표면적인 수정만으로 이 같은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 1995년 이래 내외에 표명해 온 일본정부의 기본방침,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의 담화는 실질적으로 부정되는 것과 같다.<sup>2)</sup>

하지만 검정 합격이라는 사태를 놓고는 조금 논조가 달라진다. 즉 문부성이 검정과정에서 행한 137곳의 수정은 결코 '부분적이거나 표면적인 수정'이 아니었으므로 무라야마 담화와 근린제국조항은 분명히 지켜졌으며, 이에 따라 다음 단계는 채택률을 떨어뜨리는 운동이라고 주장된다. 일본 정부는 이제 그 할 일을 다한 것이고 남은 싸움은 일본 국민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검정조사심의회는 이 최초본에 137곳의 수정을 요구하고,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쪽은 요구사항 전부를 받아들여 수정을 했다.[중략] 만드는 모임 쪽이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에 반하는, 이런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패배를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무라야마 담화와 근린제국조항은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중략] 결론적으로는 문제의 교과서 [중략] 불채택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략] 일본 국민이 이 교과서를 물리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최종적인 대결의 장이 될 것이다.<sup>3)</sup>

일본정부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자세는 한국정부의 재수정 요구에 대한 다음의 판단착오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일본정부가 근린제국조항을 지켰다는 사실을 한국정부가 앞장서서 인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문부성이 재수정에 응할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판단이 그것이다.

일본 정부가 근린제국조항을 기준으로 삼아 검정작업을 한 것을 먼저 사실로 인정한 뒤 검정의 불충분과 부족, 불철저함을 비판하는 편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중략]

2)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기고」, 『한겨레신문』 2001년 2월 21일.

3) 와다 하루키, 「교과서 채택거부가 열쇠」, 『한겨레신문』 2001년 4월 15일.



일반적인 재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으나, 그와 함께 잘못이 있으면 수정은 필요하다는 것은 문부과학상도 재삼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의 신중한 문제제기가 노린 대로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sup>4)</sup>

하시모토—오부치—모리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확실히 계승된 무라야마 담화이므로 고이즈미 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곁들인다. 이미 고이즈미 수상은 야스쿠니 공식 참배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새역모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까지 말한다.

고이즈미 총리, 다나카 외상이 외교를 아무리 모른다 해도 무라야마 담화를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다면 담화를 부정하는 듯한 역사교과서는 정부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가 이미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정부로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sup>5)</sup>

채택률이 거의 확정적이던 8월 중순의 칼럼은 5%를 승패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의 승리 선언으로, 그 주체는 ‘일본 국민의 양식’이었다.

5%를 밑돌게 되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쪽의 패배이고, 일본 국민의 양식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그리고 결과는 0.1%도 밑도는 극히 미미한 채택률로 새역모의 패배로 판명되었고, 와다 씨 는 이번 교과서문제 아니 역사인식과 관련한 한국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번 일을 되돌아보며, 나는 한국 쪽의 의견이 일본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통감했다. [중략]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이 한국으로 존재하는 한, 한국으로부터의 비판적 견제가 작동하는 한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릴 수 없다. [중략] 일본에게 한국으로부터의 비판은 생명선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부터의 비판이 ‘열려지고 객관적’일수록 그 영향력은 점증할 것이다.<sup>7)</sup>

4) 와다 하루키, 「인상깊은 ‘교과서’ 대응」, 『한겨레신문』 2001년 5월 13일.

5) 와다 하루키, 「일 정부의 ‘교과서’ 비판」, 『한겨레신문』 2001년 7월 16일.

6) 와다 하루키, 「교과서 민심과 야스쿠니」, 『한겨레신문』 2001년 8월 12일.

이상에서 확인한 와다 씨의 논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정부 차원의 한일관계 기조는 근린제국조항—고노 담화—무라야마 담화—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교과서파동으로도 그 기본정신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 검정에서 한반도 병합의 정당성과 ‘아시아해방전쟁’이라는 기본골격이 수정되었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우호적인 기조를 지켜줄 것을 고이즈미 정권에까지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한국과 중국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든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려 양국을 방문했다. 한국에서는 ‘서로 반성’ 등의 쓸 데 없는 말을 하는 실수를 범했으나, 기본정신은 ‘반성과 사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했다. 두 나라 정부가 앞으로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고이즈미 총리에게 실질적 행동을 촉구해 갈 기회는 있다고 생각한다.<sup>8)</sup>

## 2. 와다 씨의 견해에 대한 평가

와다 씨의 일련의 칼럼은 교과서문제를 둘러싼 정세인식의 오류와 함께 현실추수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겠다. 검정의 통과 여부를 둘러싼 상황판단의 오류는 물론이고, 과연 일본정부가 근린제국조항에서 한일 공동선언까지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경주해 왔느냐의 여부에 대한 안이한 결론도 그러하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 교과서문제 ‘봉합’의 주역으로서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했으며, ‘9.11 테러사건’에 편승하여 자위대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고이즈미 정권에 대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와다 씨 그룹의 지난 행보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앞에서 인용한 칼럼에서도 확인되듯이 와다 씨에게는 근린제국조항,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은 말 그대로 한일관계의 올바른 흐름을 상징하는 네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일관계의 진전을 염원하고 일선에서 실천해 왔던 그로서는 어찌면 당연한 생각이라 하겠다. 사실 무라야마 수상의 취임 이후 패전 50주년이 되는 1995년의 부전결의 채택, ‘아시아여성기금’의 설치, 그리고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됨으로써 “우익세력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지적에 공감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sup>9)</sup>. 그러나 현실은 그

7) 와다 하루키, 「한-일 시민교류의 힘」, 『한겨레신문』 2001년 9월 9일.

8) 와다 하루키, 「화해의 월드컵을 위하여」, 『한겨레신문』 2001년 10월 29일.

렇게 만만하지 않다.

무라야마 담화에 집중하여 얘기를 풀어나가겠다. 다음의 세 가지를 말하고 싶다. 무라야마 담화의 실질적인 의미, 관련된 민간의 운동에 미친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에 대한 효력 등이다.

먼저 무라야마 담화는 과거사청산을 향한 일본정부의 구체적인 행보를 압박하는 전범으로서 거의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다소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외교적 수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한계는 사회당 출신 수상이라는 태생적 상황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했지만,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천명했던 하시모토, 오부치, 모리 내각에서 과거사문제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후속 조치가 아무 것도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검증된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우파 정치가들의 '망언'이 종식되어 갔다는 정도이겠다.<sup>10)</sup>

어떤 면에서 무라야마 담화는 사회당 출신 수상이었기에 가능했고, 그 결실은 자민당이 독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과거사인식과 관련하여 내부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자민당 으로서는 담화 발표에 수반되는 여러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고, 과거사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무라야마 담화를 승계한다'는 표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국내외에 대해 충분한 '면죄부'가 되어 왔다. 게다가 이 정도의 후퇴조차 참을 수 없어 자민당 우파들은 새역모를 통해 대리전쟁을 부추겼고, 여러 호전된 상황을 이용하여 99년의 승리(주변사태법과 국기·국가법의 통과)를 손에 넣었다.

또 무라야마 담화의 출현과 후속조치는 그때까지 고양되던 '과거의 기억을 둘러싼 전쟁'의 지형을 바꿔놓았다. 무엇보다 운동 전선의 분열을 초래했으니,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여성기금의 발족과 활동이 던진 파장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관여하던 단체와 피해자들을 갈라서게 했고, 그 때까지 진행되던 각종 소송의 추진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와다 씨 그룹과의 전면전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여파는 지금도 관련 단체와 개인에게 또렷이 각인되어 있는 듯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향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과서 소송의 흐름을 재음미해 보면 근린제국조항, 무라야마 담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의 여러 안전장치가 역설적이게도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제약하는 굴레로 기능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 중반부터 한일 양국의 매스컴에서 새역모 교과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실리기 시작했지만, 한국정부는 위의 안전장치들의 '자정작용'을 과신해서인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재수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향후의 한일관계가 무라야마 담화나 한일 공동선언의 토대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거듭

9) 앞의 칼럼, 「일본우익의 역사왜곡」

10) 하지만 그 내실 또한 더 이상 '망언'으로 취급되지 않아도 될 만큼 현실에서 새역모를 비롯한 민간 우익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망언'적 상황이 일상화되었던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강조했다. 한국정부가 재수정을 요구했을 때 '근린제국조항은 준수되었지만 불충분했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와다 씨가 쓴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혀져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쪽에서는 여당에서조차 '한일 공동선언의 파기'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일었지만, 결국 정부의 공식적인 표명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경과는 분명 향후 교과서문제가 재발했을 때의 한국정부의 대응 수준을 예고해 주고 있다. 현 정부가 1998년 10월 과거사를 되묻지 않겠다고 한 것은 '너무 일찍 터뜨린 샴페인'에 다름 아니었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본고가 무라야마 담화와 한일공동선언, 그리고 근린제국조항은 허상이라고 주장한다는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무라야마 담화와 한일공동선언의 취지가 존중되고 근린제국조항이 지켜졌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과서문제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재발할 것이라는 데 있다. 무라야마 담화의 골자가 준수되었으니 괜찮다는 평가는 사태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는 냉철함을 흐리게 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근린제국조항의 준수 혹은 무라야마 담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에 머무를 수 없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해원(解冤)'을 대전제로 하는 과거사의 청산과 올바른 역사인식의 공유에 있기에.

이상의 검정통과와 관련한 오류와 함께 와다 씨의 주장에서 소극적이며 수세적인 운동관과 미국에 대한 착종된 인식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점령 하의 '외압'에 의한 제 개혁의 성과가 독립 이후 집요한 '역코스'의 압박에 의해 조금씩 지속적으로 변질·왜곡되어 온 패배의 과정에서 내면화되었다고 보여진다. 다음의 칼럼이 그 힌트가 된다.

그러나 지금 다시 주목할 점은, 이 교과서가 앞으로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불가능하게 할만큼 반미적이라는 것이다. [중략]

지금까지 미일안보조약에 반대하는 사회당과 공산당 지지자들은 미국에 대해 자주독립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헌법9조(전쟁포기 등)를 포함해 미국이 일본의 민주화에 공헌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점과 비교해 봐도 이 교과서 집필자들의 입장은 전적으로 반미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중심 집필자인 니시오 간지, 후지오카 노부카쓰 등은 5월 25일 <아사히 텔레비전>의 심야 생방송 토론에 출연해 미국이 가져다 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일본이 미일안보조약을 파기해 핵무장을 하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11) 와다 하루키, 「전쟁 시기 전엔 행복?」, 『한겨레신문』 2001년 6월 17일.

일본의 진보진영이 상대해야 하는 적은 분명 전통우익—군국주의자와 더불어 냉전체제를 존립근거로 하는 보수지배층의 두 종류이며, 여기에는 미국에 대한 판단이 개재될 수밖에 없다. 점령통치 하의 민주화 과정에서 그 도약대를 마련한 '전후민주주의'는 전자의 부정을 명분으로 천명한 미국의 국익과 합치되었기에 성사된 '제도적 틀'이었다. 반면에 점령 하에서도 미국의 비호를 받아 청산을 모면한 전자의 후예들은 냉전의 심화에 힘입어 대부분 후자로 탈바꿈했고, 그들의 거센 공격에 밀려 전후민주주의는 계속적으로 형극의 길을 걸어야 했다.

따라서 평화헌법을 포함한 전후민주주의의 수호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헌법 제9조를 지키기 위해 일본의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친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가령 신 가이드라인)을 절대변수로 규정한 위에 친미·반미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도 않으며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인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 가이드라인 내지 주변사태법은 평화헌법을 부정하는 점 이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 기조를 무너뜨리고 전쟁의 기운을 조장하기 때문에 반대되어야 한다. 친미와 반미의 여부는 우리 스스로가 묻고 판단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게다가 미일안보조약의 틀에 의해 역사수정주의자들을 견제하려는 생각은 효과도 의문스럽거니와 위협하기 짝이 없다. 이 점은 일본의 진보진영 내에서 의외로 자주 관찰된다. 가령 요시다 유타카(吉田裕) 씨는 1997년 초, 자유주의사관과 같은 내셔널리즘을 방어하는 2가지의 기제가 일본 사회 내부에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991년을 경계로 일본의 대아시아 수출은 대미수출을 능가하게 되지만, 이런 상황 하에서는 일본정부로서도 당연히 대아시아 관계의 안정화에 종래 이상으로 부심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와 함께, "적어도 지금까지의 근현대사 가운데서 미국과 손을 잡은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고 후지오카도 지적하고 있으므로 미일안보조약의 규정성이 내셔널리즘을 제어할 것이라는 것이다.<sup>12)</sup> 이런 상황판단의 오류는 이미 증명되었다. 후지오카 그룹은 미일안보조약에 대해 책임 있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수도 없는 사이비 사상가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타국에 의한 점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봉인되어야 했던 일본의 원초적 내셔널리즘은 경제적 여유를 달성하면서 보통의 일본인을 간질이는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와다 씨의 주장의 저변에는 지난 90년대 이후 사회당의 붕괴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지듯이 명확한 '대항축'을 상실하고 약체화되어 가는 일본 내 진보진영 일부의 오류와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본질은 과도한 '정치적 경도(傾倒)'가 빚어낸 맹목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미국에 대한 절충적 사고에서 이미 그 편린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핵심은 근린제국조항—고노 담화—무라야마 담화—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으로 이어지는 과거사청

12) 吉田裕, 「閉塞するナショナリズム」, 『世界』, 1997년 4월호, 75-76쪽.

산의 비전에 일본정치를 움직여 가는 '주류'인 자민당을 엮어매고자 하는 방식에서 찾아진다.

고이즈미 내각 등장 이후 일본 정치는 실이 끊어진 연과 같은 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는 자민당 안의 하시모토파와 외무성이 일본 대외정책의 계속성을 보증해 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를 내각에서 지지한 사람은 하시모토 류타로와 노니카 히로무 두 장관이었다. 하시모토는 총리가 된 뒤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했고, 오부치 게이조, 모리 요시로 총리에게도 이어졌다. 외무성은 무라야마 담화를 추진하고 그것을 일본 정부의 기본이라고 각국에 설명해 왔다. 그리고 외무성은 교과서 문제에서 문부과학성을 견제해 왔다.<sup>13)</sup>

그러나 반복해서 말하지만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신 가이드라인'의 범제화인 주변사태법과 우익들의 오랜 염원 중 하나인 국기·국가법이 오부치 정권 하에서 국회를 통과했다. 모리 수상의 입에서 '신의 나라', '국체', '교육칙어는 좋은 점도 있다'는 등의 시대착오적인 발언이 잇달아 나왔던 것도 기억에 새롭다.

외무성과 문부성의 대립 또한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대외 관계를 전담해야 하는 외무성의 입장로서는 교과서문제의 발발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부성을 견제할 것이라는 것도 수궁이 간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 같다. 가령 외무성 출신 교과서 검정위원이 경질된 사태는 오히려 반대로 새역모 교과서의 검정 통과가 확고해진(아니면 이미 결정된) 이상 외무성이 쫓겨야 될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교과서가 통과된다는데 두 검정위원(=외무성)은 뭘 했나'라는 한국과 중국의 질책에 대한 사전포석 쪽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다.

### 3.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향하여

와다 씨는 분명 한국으로부터의 '열러지고 객관적인' 견제의 가치를 높이 사고 있다. 확실히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인식과 대응은 과거에 비해 커다란 진전을 이룩했다고 보인다. '관계동원'된 내셔널리즘의 영향력이 현저히 퇴보했으며, 시민운동의 성장은 한국의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성에까지 이르러 '자기 상대화' 내지 '보편성'의 자각과 모색이 시도된 것이 그것이다.

13) 앞의 칼럼, 「일 정부의 '교과서 오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한국 내의 새로운 사태는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유력 일간지에 실린 바로 다음의 두 칼럼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일본을 언제까지나 과거사의 사죄대상으로 억박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나이브하다. 일본은 이미 신 가이드라인 채택 이후 동남아시아 해상통로 1천 마일에 대한 방어책임을 미국으로부터 떠맡기 시작하고 있다. 그들은 군대를 보유할 것이며 평화헌법을 수정할 것이다.

역사교과서문제로 인해 확인한 것은 일본 국민은 이미 우경화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소수 좌파나 교원노조와 연대할 수는 없다. 문제는 우경화된 일본 국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이다.<sup>14)</sup>

더군다나 한국 정부가 우익 역사 교과서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해서 와다 하루키 교수 같은 일본의 소수 좌파 지식인들과 연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일본의 분류라고 할 온건 보수노선에 반감만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중략]  
(과거 한일 간의, 인용자 주) 이런 부패하고 부정적인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양국의 온건한 중도보수적인 중심집단간의 교감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 한다.<sup>15)</sup>

칼럼의 골자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교과서문제의 발발은 일본의 '우경화'를 명확히 증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주체로 한 국제관계가 명분보다는 실리, 즉 국익의 차원에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지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우경화한 일본에의 대응은 어디까지나 양국의 '온건한 중도보수적 중심집단'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며, 와다 교수를 비롯한 소수 좌파와의 연대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내셔널리즘의 자장에 의해 한 색깔로 보였던 일본은 이제 한국 내의 지형을 반영하여 '이념적'으로 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 중에서 일교조나 와다 씨 그룹은 한국의 주류 보수층이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좌파로 분류되고 있다.

이상의 칼럼에서 우리는 현재의 한일관계가 주도세력과 기본이념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교과서문제가 던진 새로운 문제제기인 것이며, 역사적으로도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한일관계의 흐름을 살펴보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한일협정 후의 양국 관계가 친일과 반한이 뒤엎힌 채 소수 정치권의 밀실야합의 수준에서

14) 김영배, '자존의교의 색깔', 『중앙일보』 2001년 5월 8일.

15) 김영배, 「햇볕정책의 국제신인도」, 『중앙일보』 2001년 6월 19일.

움직여져 왔다면, 1980년대에 들어와 두 가지의 변수가 새로 등장했다. 먼저 1982년의 교과서 파동으로 과거사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등장했으며, 80년대 후반 이후 양국간의 민간교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민족파'를 자임하던 나카소네 수상이 1986년 같은 색깔이던 문부상 후지오를 파면하기에 이른 것은 한일관계가 변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 전형적인 사건이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일본의 편의점에 한국 직수입 김치가 진열되기 시작한 것도 작지만 큰 걸음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변화는 한층 가속화되었다. 90년대 벽두에 불거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인해 과거사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응답으로써 와다 씨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일련의 담화와 선언이 발표되었다. 주도세력으로서의 기존의 정치권 외에 새로이 시민연대를 포함하는 민간 부문이 가세했고, 동시에 과거사청산의 이슈는 양국 정부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어 갔다. UN을 비롯한 국제무대도 역사 전쟁의 장이 되어 갔다.

여기서 이번 교과서문제의 경과를 돌이켜 보자. 분명히 와다 씨의 견해에 의한다면 검정을 통과해서도 안 되고 통과될 리도 없는 새역모의 교과서가, 비록 137군데나 고쳐진 '누더기'가 되어서도 검정을 통과하고 말았다. 일본정부는 마지막까지 '현재의 검정제도 하에서 특정 내용을 기술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한 마디로 버텨나갔다. 한국에서의 초기의 열화와 같은 성토 분위기는 채택률의 저조가 보도되면서 급속도로 식어갔고, 그 뒤 한국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누가 봐도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였다. 재수정 요구를 무시한 일본정부의 선택은 10월의 고이즈미 수상의 전격적인 방한과 에이펙(APEC)의 긴급성에 밀려 한국정부의 '추인'을 받고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2001년의 교과서문제는 어떻게 보면 '불상사'였다. 한일 양국 정부 모두에게 말이다. 당연히 0.1%에도 못 미치는 채택률은 무라야마 담화에 의해 견인되는 현재의 한일관계가 감내할 수 있는 절묘한 '황금비율'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내실은 교과서 채택의 '승자 독점' 방식이 가져다 준 살얼음판 승리였다. 게다가 이번 사건을 통해 무라야마 담화 등에 기반한 현재의 '한일 우호 체제'로는 결코 새역모가 천명한 '복수국'이나 제2의 새역모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무라야마 담화를 주축으로 한 현재의 '정치 주도'의 한일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 과거사청산의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싸움을 짊어질 수도 없거니와 그럴 의지조차 없다. 치열한 역사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선택은 그것이 어느 쪽이든 한일 양국의 정부 모두에게 부담이 가기는 마찬가지이다.

2001년 교과서문제의 '교훈'으로 태동하게 될 한일 공동의 역사연구모임을 놓고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고 한다. 합의 도출된 연구 결과를 교과서에 수용하지는 한국 쪽 견해에 대해 일본 쪽은 현재의 검정제도 하에서 특정한 교과서 기술을 강제할 수 없다는 예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속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양국 정부가 정치적 파문 내지 부

담을 최소화하자는 공통분모가 확인되고 나면 10년 전의 복사판이 될 가능성은 지극히 농후하다. 이는 이번 교과서문제의 결말에서 이미 예고된 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갈수록 약효가 떨어지는 과거사 프리미엄을 버리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한국 쪽 현실주의자들이 가세할 방향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2001년의 교과서문제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본격적인 싸움의 서막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새역사의 준동은 신 가이드라인과 국기·국가법, 자위대 해의 파병 등을 발판으로 교두보를 확보한 뒤 염원해 마지않던 일본국헌법 제9조의 개정을 성취한다는 일련의 우경화 시나리오의 전초전으로 치러졌다. 재무장과 개헌 시도로 번져 나가는 일본의 우경화를 견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인민의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그 '진짜 싸움'에서 한국이 방관자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과연 와다 씨 그룹은 한국과의 공동전선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9·11 테러사건'을 이용하여 일본의 자위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로 착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걸프전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일본의 우경화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과서문제로 그렇게 들끓던 한국의 여론이 자위대의 위협적인 변모에 대해서는 놀랄 정도로 소극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이런 불감증은 역사인식을 둘러싼 한국 내셔널리즘의 편협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예이겠지만, 핵심은 다른 데 있다. 즉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익숙해진 한국인의 일반적 정서와 맞물리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 시비를 걸 수 있는 '명분'과 계기가 취약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칼럼에서 확인한 한국의 보수적 현실주의자를 떠올리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 김대중 정권이 자위대와의 합동훈련과 군사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주류적 보수에게 일본의 주류적 보수는 줄곧 추파의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그들은 "일본도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세대가 퇴장하고 보다 관념적인 반일의 재생산을 수용하는 토양이 한국에 만들어져 왔다"는 측면에서 우려하면서도 "박 대통령과 조갑제씨와 같이 피해자 감정의 편향에 안주하지 않고, 자조노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적지만 존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sup>16)</sup> 한국의 보수파로서도 박정희에 대한 평가의 논란에 비추어 위의 주장에 선뜻 동조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래의 칼럼과 같은 논조라면 나름대로 그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와 닿았을 것이다.

16) 福井義高 「日韓關係は特殊なのか」 『現代コリア』 1996년 9월호 『現代コリア』의 홈페이지 [www.bekkoame.ne.jp/~mki/](http://www.bekkoame.ne.jp/~mki/) 에서 재인용.

지금 한·일간에 문제가 돼 있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자신들만의 역사적 관점을 젊은 세대에 전달하려 한 '특수한 그룹'이 만든 것이다. 이 교과서에 대한 일본 사회의 지지는 썰렁할 정도로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중국이 떠들어 준 덕에 이 교과서는 일반 서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덕분에 교과서를 만든 그룹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중략]

솔직히 말해 두 나라의 젊은이들은 한·일 관계가 어떻고, 외교가 어떻고 하는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젊은이들을 교과서 문제에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교과서 문제는 "아직 과거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양국의 기성세대가 조용히 얘기해서 매듭지었어야 할 문제였다.<sup>17)</sup>

과거사청산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의 하나는 스스로의 무관심을 변호하려는 저의에서 출발하는 '또 그 이야기'라는 이미지이다.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과의 싸움을 진부하고 식상한 과제로 치부하여 덮어두고 집단망각으로 내모는 한일 양국 보수파의 연대는 지금 착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열도에서는 재무장과 개헌을 놓고 한 바탕 결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 때 와다 씨는 한국의 '열려지고 객관적인' 비판과 견제를 요청하겠지만,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결과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보통의 일본인이 지난 내셔널리즘의 코드를 자극할 '내정간섭'의 구호가 기세를 올리면 보통의 한국인은 소극적인 체념으로 돌아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과거사청산과 역사인식의 공유를 내걸고 싸우는 연대투쟁의 기반이 제한적이고 고립적이라면, '너네 일이 아니니까 간섭하지 마'라는 논리는 일본의 우익들에게 외압을 차단하는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앞에서 이번 싸움을 통해 한국에서 '자기 상대화'와 보편적인 역사인식의 모색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사실 이번 교과서파동의 와중에 '좋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제기해도 좋았을 충고는,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변호하는 '개죽음'의 논리에 공명하는 양국의 보수적·우파적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이었다. 내셔널리즘의 충들로 내비칠 것을 두려워 한 한국정부의 재수정 요구에는 '대동아전쟁'에 대한 부분은 빠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비판적 지적도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무리아마 담화라는 성과를 외골수로 지키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겠지만, 그러기에 동아시아에서의 역사인식의 불일치가 양산하는 병폐는 너무나 중중이다. 와다 씨의 주장은 90년대 말의 제 변화(신 가이드라인, 국기·국가법 제정)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내정간섭이 건너갈 통

17) 오마에 겐이치, 「김대통령이 해야 할 말」, 『조선일보』 2001년 8월 1일.

로로써 너무나 협소하다. 아울러 향후 개헌의 국면에 대한 이웃나라의 우려가 일본 내의 싸움에 원군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반복하거니와 이번 싸움의 최대의 교훈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싸움이어야 한다는 명제의 재확인이며, 이를 위해 같이 싸울 수 있는 우군 또한 같은 국가와 민족의 범주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아시아의 민중과의 관계에서 말한다면 '전후는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을 뿐이다'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지적은 참으로 의미심장하기까지 하다.<sup>18)</sup>

## 2월 24일

오전 : 보고 및 증언 「한국전쟁·냉전 하의 민중투쟁」

오후 : 4지역 사무국 보고와 공동방침 제안

18) 다카하시 데즈야, 『일본의 전후책임을 묻는다』, 역사비평사, 2000년, 50쪽.

## 유골송환운동과 냉전

- 하나오카사건의 사례 -

주파지에 (猪八戒, 하나오카 봉기를 생각하는 모임)

### 1. '하나오카(花岡)사건'의 개략

하나오카(花岡)사건은 일본 아키타(秋田)현의 북부에 있는 구리(銅)를 생산하는 하나오카정(花岡町)에서 가지마구미(鹿島組, 현재의 회사명은 '가지마건설')와 정치권력, 그리고 일반민중까지도 가담한 피연행 중국인에 대한 학대와 학살을 가리킨다. 이 사건은 광산을 소유한 후지타구미(藤田組, 패전후에 同和광업으로 개칭) 하나오카 광업소가, 광독(鑛毒)을 침전시키기 위한 댐을 만드는 공사를 가지마구미에 위탁한 일에서 비롯되었다. 가지마구미는 다음 <표>에 나온 바와 같이 3회에 걸쳐서, 총 986명의 중국인을 중국 청도(靑島)항에서 승선시켜 강제연행을 행했다.

<표> 가지마구미(鹿島組) 하나오카 출장소의 중국인연행과 노동실태

|     | 청도항<br>출항일 | 승선자  | 도중사<br>망 | 하나오카<br>도착일 | 하나오카<br>도착자 | 하나오카에서<br>의 사망자 |
|-----|------------|------|----------|-------------|-------------|-----------------|
| 제1차 | 1944/7/28  | 299명 | 5명       | 8/8         | 294명        | 142명            |
| 제2차 | 1945/4/18  | 589명 | 2명       | 5/5         | 587명        | 250명            |
| 제3차 | 1945/5/11  | 98명  | 0명       | 6/4         | 98명         | 15명             |
| 계   |            | 986명 | 7명       |             | 979명        | 407명            |

강제연행자 중에서 연행도중 배 안에서나 상륙하여 하나오카에 있는 수용소에 도착할 때가

지 모두 7명이 사망했다. 1944년 8월 8일부터의 폭력적인 노무관리(강제노동, 린치, 중국인 식량의 횡령, 의류를 지급하지 않은 것 등)에 따라, 다음 해인 1945년 2월말까지 사망자는 60명에 달했다. 6월말까지 140명이 사망하였다. 온갖 학대의 결과였다. 도망치다 붙잡힌 사람에게 빨간색 달근 레도 레일용의 강판을 양다리 사이에 끼워 넣는 린치를 하고, 솥소의 성기로 만든 채찍에 모래를 가득 채워, 노동자들에게 휘둘러 육체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짓이겨 갔다. 이 중국인 노동자들은 노예상태로 죽거나 봉기해서 죽거나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렸다.

봉기를 결행한 1945년 6월 30일, 이들은 일본인 보도원(補導員) 4명과 한간(漢奸)이 된 동료 1명을 살해하고 나카야마(中山) 기숙사를 떠났다. 주력부대 300명은 시시가모리 산정(獅子ヶ森山頂)에 올라, 뒤쫓아온 헌병대, 경찰, 경방단(警防團), 재향군인회 등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러나 이들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전원이 붙들렸으며, 하나오카 광산의 오락시설인 교라쿠관(共樂館)에 있는 광장에 수용되었다. 이들은 그곳에서 사흘 동안 일본도나 죽창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고통을 받았다. 이 광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60명을 헤아린다. 다른 방면으로 도망쳤던 붙잡힌 사람들도 이 광장에서 같은 취급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살육행위는 무시무시한 것이었고, 나중에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하나오카 지역 주민들 가운데에서도 이 학살에 가담하거나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다. 이 지역 주민은 누구나 이 사건을 목격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오카(花岡)사건이 전쟁범죄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어느 집의 누가 어떤 식으로 중국인을 죽이고 칼로 베었는가에 관하여,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카야마 기숙사로 되돌아온 중국인들은 한달 쯤 지날 때 까지 경찰관의 감시를 받으면서 강제노동을 계속 했고, 그래서 사망자는 계속 늘어 7월까지 사망자는 교라쿠관 광장에서 죽은 60명을 포함하여 100명에 이르고 있었다. 그 후 8월에는 49명, 9월에는 68명, 10월에는 51명이 사망했다. 10월 6일, 미군 점령군이 나카야마 기숙사의 상황을 조사하여 개선책을 세웠지만, 11월에도 9명이 사망했다. 봉기 후에 약 270명이 학대와 학살에 처해졌다. 이 사망자 수는 가지마구미만의 범죄가 아니라, 권력의 탄압과 주민들의 가지마구미에 대한 옹호를 보여주는 것이다. 봉기전의 사망자 140명과 비교해서 봉기 후에 사망자가 더 많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봉기 후에, 주모자로 간주된 사람에 대한 고문과 자백강요는 처참한 것이었다. 아키타(秋田)현의 지사, 현의 경찰부장, 특고(特高)과장, 검사정(檢事正), 아키타현의 헌병대장, 도쿄 헌병사령부 장교(대좌), 센다이 공소원(仙台控訴院), 도쿄 대심원(大審院)의 관계자들이 대책을 강구하여, 7월 5일 '국방보안법 제16호 제2항'에 있는 전시 소요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다. 즉 6월 30일에 일어난 봉기는 주모자가 중화민국(장개석)의 항일전쟁에 호응하여 일본국내에서 혼란을 일으켜, 일본의 투항을 앞당기기 위한 목적으로 행했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봉기책임자로 간주된 경준(耿諫)씨의 심문조서(1945년 7월 11일자)는, 전시 소요살인죄를 적용한 형식으로 꾸며져 있

다. 그러나 봉기 진압에 나선 센다이 포로수용소 제7분소(花岡町 觀音堂 歐米人 浮虜收容所)가 센다이에 있는 수용소 소장을 통해서 육군정보국 요코이(横井) 소좌 앞으로 보낸 1945년 7월 20일자'가지마구미 중국인노무자 폭동상황에 관한 건'에는, ①노동과중, ②식량부족-가지마구미의 간부가 중국인용 식량을 착복, ③노동임금의 미지급, ④중국인에 대해서 소나 말처럼 다름이라는 네 가지 점이 봉기의 원인으로 보고되어 있다.

고노 마사도시(河野正敏) 가지마구미 하나오카 출장소 소장도, 7월 10일 아키타 지방재판소 검사국의 고무로 쇼시로(小室小四郎)의 청취에서, 중국인의 임금을 사용(社用)으로 유용했고, 중국인 노동자의 저금통장을 만들지 않았으며 보관중도 건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당국은 6월 30일의 봉기에 대해서 전시 소요살인죄를 적용함으로써 가지마구미의 중국인학대와 학살사건을 은폐하고, 경찰관 등에 의한 탄압의 정당화를 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봉기 후에 사망자가 속출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권력과 기업, 그리고 일반민중까지도 탄압에 참여한 국가테러리즘에 틀림없다. 패전후인 9월 11일 아키타 재판소는 주동자 1명에게 무기징역을, 그 외 11명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신문은 이 판결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1945년 10월 6일, 아키타시에 진주해 있던 GHQ가 나카야마 기숙사를 조사하고, 그 뒤에 가지마구미의 전쟁범죄가 문제가 되어 가지마구미나 오다테(大館)경찰서의 관계자가 체포·수감되었다. '하나오카사건'은 극동 군사재판, B·C급 전쟁범죄재판 요코하마(横浜)법정에서 다루어졌다. 1948년 3월 1일 고노 마사도시 등에게 사형을 포함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재판 과정도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중국인들은 요코하마 법정에서 증언한 23명을 남겨두고 1945년 11월 24일에 하나오카를 떠났다. 그들이 하나오카를 떠나기 사흘전인 11월 21일, GHQ는 교라쿠관(共樂館) 광장에서 살해당한 중국인들의 유체를 구덩이 속에서 파내어 화장을 하고 유골을 남겼다. 전쟁범죄 범정에 증거사진으로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작업은 24일까지 이어졌으며, 이 작업이 끝났을 때 중국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남겨진 유골을 가지마구미는 신쇼지(信正寺)에 맡겨두고 방치하였다. 1949년 10월에 새로운 중국이 성립한 뒤, '중국인 노무자 추선 공양탑'을 세워, 그 밑에 유골을 집어넣었으나, 나카야마 기숙사 터에 방치되어 있던 유골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 2. 유골발굴과 하나오카의 조선인

여기서는 중국인의 유골발굴운동과 하나오카의 조선인 문제에 한정하여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 1) 흩어져 있는 유골의 발견

1947년 실업대책사업(이하 실대)의 개시에 따라, 하나오카정(花岡町)사무소에 오다테(大館) 직업안정소 하나오카 출장소가 세워졌다. 직원은 한 명이었다. '살 집이 없고 먹고 살기 위한 직업도 없는 상태'는 이 하나오카에 사는 36호의 조선인들도 마찬가지여서, 이들은 매일 생활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 출장소를 들락거리며 일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일본 조선인연맹 아키타현 하나오카 지부의 멤버가 생활투쟁이나 민족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같은 활동의 영향으로 1947년에 결성된 아키타현 조선인 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상흔은 없어지지 않는다'의 저자인 이차봉씨가 따르면, 1949년 여름 어느 날, 조선인연맹 하나오카지부의 멤버인 이종용씨가 가지마구미 중국인수용소·나카야마 기숙사 터와 그 뒤에 있는 하치마키산(鉢巻山)을 산책하다가 유골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일수(후에 하나오카 자유노동조합 위원장)와 이차봉씨가 삼과 곡괭이로 이를 파보았더니, 땅속에도 유골이 대량으로 묻혀 있었다. 이종용, 김일수, 이차봉 씨등은 회의를 하여 중국인의 유골수습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하나오카 정 사무소에 공적인 책임을 물으면서 유골 발굴작업을 '실대사업(취로사업)의 하나로 추가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일본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여 다시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양심이 있다면, 희생된 중국인들의 유골을 수습하여 본국에 있는 부모 품으로 보내야만 하며, 이는 일본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다"라는 명쾌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생각이 투쟁으로 조직된 것은, 다음 해 1950년 초 하나오카 자유노동조합이 결성된 뒤의 일이었다. 그 때의 상황을 이차봉씨는 "하나오카정사무소에 연일 공세를 취하여,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장(町長)과 교섭하면서 버티고 또 버텼다. 작은 관청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붐비고, 요구나 항의하는 목소리로 떠들썩해서 관청의 업무가 자주 중지되었다. 열흘간 계속된 투쟁으로, 결국 정장이 유골수습작업을 '실대'사업의 하나로 추가하는 일을 수용한다고 대답하여, 투쟁은 한발 더 나갔다."

1949년 9월, GHQ에 의한 조선인연맹의 해산명령이 내려져, 조선인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시기의 가을, 김일수씨가 상경하여 '유일 화교 민주촉진회(留日華僑民主促進會)'에 하나오카의 실상을 전했다.

'유일 화교 민주촉진회(留日華僑民主促進會)'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게 되었다. 12월 3일 '화교민보'의 정용삼(鄭龍三)기자가 도쿄에서 하나오카로 들어와 김일수 등의 안내로 일주일동안 현지조사를 행했다. 다음해 1946년 1월 1일자 '화교민보'(제16호)가 '하나오카 사건'의 대강을 보도하면서, 재일 중국인사회는 그 충격으로 흔들렸다. 고베에서는 진상규명 대회를 열고 일본정부에 대한 책임추궁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일 화교총회(留日華僑總會)', '유일 동학총회(留日同學總會)', '동경 화교연합회(東京華僑連合會)', '유일 화교 민주촉진회(留日華僑民主促進會)' 네 단체는 1950년 2월 10일자로 '유골의 적절한 처리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일본정부에 제출했다. 이 요구서는 "중국인 포로 900여명에게 가한 대살륙 사건은 그 규모에 있어서도, 또 성격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일이며, 포로 중에서 416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도 그 중대성이 입증된다. 가지마구미나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해 파헤쳐진 살해된 사체유기의 현상이 그대로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일본정부가 신속하게 '하나오카사건' 희생자의 유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이었다. 일-중 우호협회 준비회도 1950년 4월 8일, '하나오카사건에 관한 성명서'를 하나오카 정장 앞으로 발송했다. 그 내용은 다음 세 가지 점이었다. ①희생자 유골의 수습과 안치, ②기념비를 세워 일본민중이 반성의 계기로 삼을 것, ③사건의 소재를 분명히 할 것 등이었다.

김일수가 제출한 보고서는 이렇게 해서 일본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다.

## 2) 유골발굴과 공동작업

한 사례이긴 하지만, 하나오카 나카야마 기숙사의 유골발굴 현장으로도 눈길을 돌려보기로 한다. 1950년 9월 6일 중국인의 학생조직 '유일 동학총회(留日同學總會)'에서 두 사람이 선발대로서 하나오카 땅을 밟았다. 다음 날 7일, '하나오카 분회'사람들과 함께 광산측 사람들을 입회시킨 상태에서 발굴작업을 개시했다. 다음날부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아래턱뼈, 늑골, 이빨 등의 많은 유골을 수습했다. 이는 '하나오카 분회'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어서 제2차 팀으로 '유일 화교총회(留日華僑總會)'등의 대표가 도착하여, 9월 14일에 이차봉 등의 안내로 공동 발굴작업을 행했다. '하나오카 분회'의 참가자는 14명이었다. 파도 파도 유골이 연이어 나와서 어쩔 수없이 작업이 17일까지 속행되었다. 화장할 한 유골은 여덟 상자로 분납되었다. 마지막으로 비(碑)를 세울 수 있도록 구덩이를 메우고 땅을 고른 후 작업을 끝냈다. 나무상자에 담긴 유골은 유일 화교총회, 일중 우호협회, 불교신자 등의 손으로 도쿄로 가져가게 되었다.

10월16일, 유골이 하나오카를 떠나는 날, 하나오카역이나 오다테(大館)역에는 관청, 정 의원, '하나오카 분회', 조선인 생활협의회, 조선민주여성동맹 외에, 수많은 노동자, 시민이 모여 이를 전송했다. 현재 이에 관한 한 장의 복사자료가 남아있다. '책임자 김일수'명의로 된 정(町)의 관청에 보낸 것으로, 9월 7일부터 총5회 62인분의 일당 12,400엔에 술값 1,450엔을 더한 청구액이 적혀 있는 청구서이다. 여기에는 1950년 9월 18일자로 찍힌 관청측의 접수인이 있다. 1인당 일당 200엔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분회 사람들이 정장을 상대로 교섭을 하고 '실대'사업 안에 유골수습작업을 집어넣었던 기록이다. 공적자금을 갖고 유골수습을 행한 예는 아마도 전국각지의 다른 사업장에서는 없을 것이다. 이는 '하나오카 분회'의 능률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청구서에는 날마다 작업자 이름이 기입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은 4회나 발견된다. 현장을 지휘했던 이

차봉도 4회 그룹으로 조선인 11명, 일본인 10명이 발굴작업에 참가하고 있었다. 새삼 강조하지 만, '하나오카사건'의 유골수습은 '하나오카 분회'사람들의 사상과 역량 없이는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 3) '하나오카사건'말소파(抹消派)와의 투쟁

'하나오카 분회'의 투쟁이 이룩한 또 하나의 커다란 역할이 있다. 1948년 3월 2일자 「아키타 사키가케신보(秋田魁新報)」는 눈에 띄는 것을 피하듯이, "3명 사형, 전 오다테(大館)경찰서 서장은 중로(重勞)20년 ... 하나오카 수용소 전범에 판결"이라는 기사를 요코하마발 기사로 전했다. 불과 6행으로 된 설명과 기소된 9명의 형량 뿐이다.

1948년 4월 1일부터 1949년 4월 29일에 걸쳐, 여러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감형 탄원서가 점령군에 보내졌다. 여기에는 명확하게 학교측의 지시로 생각되는 '아이켄 바가중장 각하 탄원서(アイケルバガ中將閣下), 오다테(大館)시 가쓰라기소학교 오학년일동' 같은 유형의 것에서부터, 일본 그리스도교단 오다테(大館)교회의 목사의 탄원서까지 포함되어 있다. 당시 가지마구미 하나오카 출장소소장 고노 마사도시에 대한 탄원서는, '하나오카 정 정민일동'으로부터, 또는 오다테(大館)부인회나 소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작성되었다.

전 오다테(大館)경찰서 서장인 미우라 다이치(三浦太一)의 경우도, 오다테(大館)정 부인회의 2,570명분의 이름이 연서되어 있으며, 아키타 고등여학교 동창회의 1,026명이 연서한 것도 있다. 다른 유죄판결이 언도된 사람에 대한 탄원서도 다수에 이른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데에는 말소파의 사전활동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오카 사건의 진상이 아키타현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은 영향도 크다. 실제로 1949년 5월 군사법정의 재심에서 피고전원에게 감형 판결이 내려졌다. '하나오카 분회'의 투쟁은 이 같은 상황 아래서 개시된 것이다.

김일수는 중국인 유족대표의 직함으로 계속해서 '위령협력'을 호소했다. '유족대리 김일수로부터, 위령협력을 청한 단체 및 개인'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호소대상은 하나오카 정내에서는 정장을 비롯하여 정 의원, 각 부락협력위원, 광산관계자, 소중학교 교장, PTA, 각 노동조합이나 개인을 빠짐없이 망라하고 있다. 그는 1945년 6월 30일, 중국인봉기 후의 학살에 동원된 촌(村)이나 정은 말할 것도 없고, 오다테(大館)시장 등,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중국인 수난자에 대한 '위령협력'을 구하러 다녔다. 그것은, 앞의 탄원서 '하나오카정 정민일동'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하나오카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거짓 휴머니즘 반동파들이 공동체의식을 들고 나와 그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투쟁이었다. 이같은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하나오카사건'말소파세력을 부수려고 한 그의 자세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오카사건을 축으로 한 '하나오카분회'와 재일조선인의 활동에 대한 발자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1952년에는 미쓰비시광업(三菱鑛業) 오사리자와(尾去澤)광업소나 도와광업(同和鑛業) 오사카(小坂)광업소와의 끈기 있는 교섭이나 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1953년에는 아키타현 위령실행위원회를 만들어, 550명의 유골을 도쿄로 이송하였고, 7월에는 김일수 자신이 유골 송환선에 승선하여 희생자의 유골을 중국에 전했다.

'하나오카분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조선인들은 조선인연맹 하나오카지부의 구성원이기도 했다. 조선인연맹이 해산당하고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의 한국전쟁에 반대하는 투쟁도 조직하면서, 중국인의 유골송환을 실현시켜 간 하나오카 재일 조선인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억되어야 한다.

### 3. 냉전의 그늘

1950년 10월 16일, '하나오카사건'희생자의 유골이 도쿄로 옮겨졌다. 이 때 유일 화교총회(留日華僑總會)는 도쿄도(東京都) 공안위원회에 "하나오카사건으로 사망한 중국인 전쟁포로의 유 기 백골을 수습했으므로 위령제를 집행하여 사자의 명복을 빈다"는 목적으로, '위령제 집행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안위원회는 사자를 조문하는 의식의 허가조건으로 도쿄도의 조례 '집회·집단행진 또는 집단시위운동의 질서보지에 관한 사항'을 달았다.

그 규제사항이란, ①점령군 또는 점령정책을 비방하는 언동의 금지, ②집단행진으로 번지지 않을 것, ③강연·연설 등은 일절 하지 않을 것, ④경찰관의 경고제지 등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이었다. 공안위원회의 규제사항을 보충하여 구체화한 것이 '중화민국 주일대표단'(장개석정권)의 명령서이다. 여기에서는 유일 화교총회에 대해 집단적 의식은 인정할 수 없으며, 개인 자격으로 사자를 추도할 것을 명령했다. 유일 화교총회의 주최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단체대표의 이름을 읽는 것도 금지했다. 보고·연설·삐라배포에서 사진전시도 금지했고, 추도문이나 조사의 낭독도 그만 둘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령제 당일, 아사쿠사(淺草) 본원사(本願寺)의 외문(外門)에는 '1950년 11월 1일, 유일 화교총회 주최, 하나오카 수난열사추도회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외문에서 정전(正殿)으로 통하는 도로의 양쪽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화환이 늘어서 있었다. 정전 안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재일 중국인외에 일본, 조선의 민주인사들이 구름처럼 몰려 와 앉아 있었고, 참가자의 수는 2,000명을 넘었다. 정면 제단의 한가운데에는 수난열사의 위패와 유골상자가 안치되었으며, 그 양쪽으로는 각 단체나 개인이 보내온 생화가 대회장이 좁을 정도로 늘어서 있었다.

그러나 아사쿠사 본원사 대회장의 바로 밑 지하에 무장경찰관 400명이 배치되었고, 부근의 소학교에도 300명의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경고·명령을 준수하도록 하기에는 너무 충분할 정도로 경비·탄압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다. 추도회가 시작되어 주최자측 대표가 개회사와 '하나오카사건'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이어서 일본에 잔류해 있던 '하나오카사건'의 생존자인 유지커(劉智渠)가 소개되었다. 자신이 체험한 가지마구미 수용소·나카야마 기숙사에서의 사건

을 말하기 시작하자, “과거 일이다. 말할 필요가 없어!”하고 유지거의 말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주일 대표단’이었다. 유지거는 별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오카에서 이 추도식에 와 있던 김일수도 말할 기회를 빼앗겼다.

장개석 지배하의 ‘주일 대표단’과 일본측의 무장경관이 한 무리가 되어 방해를 했다. 경고나 명령이 단순한 협박문구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것은 점령군지배하 한국전쟁에서 미군에 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은 일본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민중탄압의 한 사례였다. ‘주일대표단’의 파괴행위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질게 드리워진 냉전의 그늘을 인식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재일 중국인 사회에 처음으로 ‘하나오카사건’의 개요를 전한 ‘화교민보’ 제16호는 동시에, ‘주일 대표단’을 향한 핵심을 찌르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여기서는 ‘하나오카사건’의 피고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B·C급 요코하마 법정에 대해 언급한 뒤에, ‘주일대표단’에서도 이 군사법정에 모 대좌, 모 검사가 출정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화교에게도 주지되는 일이 없었고 중국본토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일’이라는 발언에 재일 중국인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지만, ‘주일대표단’을 조종하는 장개석 집단에 있어서는 일본의 전쟁범죄인을 재판하는 일은 실익이 없고, 면죄야말로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일 중국인 다섯 단체는 1950년 2월 10일 일본정부에 적절한 유골처리를 요구하고, 당국의 성의 없음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주일대표단’에는 동년 2월 14일의 유골처리 요망서 이외에 세 번 네 번 진정을 반복했다. 그 회답이 발언증지였다.

일본 패전 후에 중국대륙의 국민당 장개석 정권의 행동을 관찰하면, ‘발언증지’의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 1945년 10월부터 피연행 중국인의 송환이 시작되었다. 국민당정권은 귀국자를 접대한다고 하여, 천진시(天津市) 경찰서장 등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운영을 맡도록 하였다. 제1차선 ‘에노시마마루(江ノ島丸)’는 1,661명을 태우고 니가타항(新潟港)에서 당쿠(塘古)에 도착했다. 접안할 때에 1명이 사망했으며, 중상 때문에 1명은 하선하지 못하고 입원조치가 내려졌다. 니가타 항에서 강제노동에 당한 사람들 중에 155명이 사망했고, 다른 항구인 후시키(伏木)나 니데츠(日鐵)광업 아카다니(赤谷)광업소의 사망자를 합하여, 188명의 유골이 아마 송환되었을 것이다. 10명에서 1명 꼴로 유골로 되돌아오는 기묘한 하선상황이었다.

‘귀국노동자관리소’는 외무성 담당관을 힐문했다. 이 담당관은 1943년부터 중국인은 37,180명으로, 그 사망자 수는 계 4,957명, 생존자는 31,601명이라고 허위보고를 하고, 일본국내의 치안유지를 교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귀국시켰다고 전했다. 이 설명을 들은 중국측 책임자가, 금후에 귀국예정인 삼만여 명은 그 대부분이 포로라고 상충부에 연락하여, 이 보고가 북경·천진군(天津軍)을 관할하는 손연중(孫連仲) 제1군사령관을 통해서 중국 육군총사령부 하응훙(何應欽, 陸軍大將)에게 전달되었다. 하응훙은 1945년 10월 24일 전 ‘지나(支那) 파견군 총사령관인

오카무라(岡村寧次) 대장에 대해서, “화북노동협회(華北勞工協會)가 일본에 보낸 중국인 노동자 삼만여 명 중에서 천여 명의 가벼운 범죄를 범한 사람 이외에는, 모두 팔로군(八路軍)의 전쟁포로라고 듣고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한 근거를 조사하여 빨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제1차로 귀환한 중국인 724명이 전쟁포로라고 한 데다, 팔로군 포로의 처우에 대해서는 상부의 의견을 기다린다고 했다. 159명이 국민당 중앙군 제94군에 강제 편입되고, 천진 경찰관으로도 33명을 채용했다.

강제로 군대에 편입된 장신무(張信武)의 증언에 따르면, 국민당은 대규모의 내전을 일으킬 준비를 추진하고 있고, “북양(北洋)대학에 도착하자, 94군이 출동하여 부대 주위에 기관총이 배치되고, 곧 한 사람의 군관이 나와서 노공(勞工)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 대부분이 팔로군이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나이 든 사람이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을 제외하고, 청장년을 강제로 군인으로 만들겠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북양대학에 도착한 22,832명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2,954명이 중앙군으로, 95명이 경찰관으로 강제 편입되었다.

앞에서 말한 하응훙의 생각은, 주일 대표단에도 침투해 있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화교민보’ (제18호)의 포로좌담회에서 홋카이도탄갱 기선 평화광업소(北海道炭坑汽船平和鑛業所)로 연행된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주일대표단’에서 온 유(劉)라는 인물에게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더니, 그는 ‘화북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팔로군이니까 죽어도 상관없다’는 폭언을 내뱉었다고 한다.

천진에 설치된 ‘귀국노동자관리소’의 목적이 귀국 중국인의 접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당 군대에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기술하였다. 화북에서 일본으로 연행된 중국인이 팔로군계라는 견해를 취하기 시작한 ‘관리소’측은, 지니고 돌아온 유골상자를 강제로 북양대학에 두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하여 오사카 축항(築港)공사에 강제 연행되어 사망한 47명 중에 44명 분의 유골이 북양대학에 놓여졌다. 하나오카의 유골상자도 같이 처리되었다. 몰래 유골을 고향으로 가지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관리소’가 폐쇄된 1946년, 1,462명 분의 유골은 천진 교외에 있는 논밭에 버려졌다.

현시점에서 ‘하나오카사건’ 요코하마 법정을 다시 본다면, 중국측 파견검사 장내문(張乃文)이 1947년 7월에 일본에 왔던 사실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지마구미 및 경찰서원들의 학대와 학살 사실을 조사한 것은, 미국 점령군의 아키타 진주부대이며, 특히 대적 첩보부원인 윌리엄 심슨이 중요인물이었다. 심슨은 1945년 11월에 중국인수용소·나카야마 기숙사에서의 사실 조사를 거듭한 다음 ‘나카야마 기숙사 폭동사건’을 정리했다.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하나야마사건’ 전쟁범죄재판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장개석정부의 국방부로부터 온 장검사가 실제로 조사한 흔적은 없고, ‘주일대표단’이 중국인 강제연행을 자신들의 민족적 과제로 삼아 이 문제에 전념한 적도 없다. 그 결과가 1950년 11월 1일의 추도식에서 나타난 헤프닝이었다. 즉 제단중앙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은 팔로군계 포로이며 추도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도식을 거

행하는 자야말로 ‘빨갱이’이며,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밖에 간주되지 않았다.

냉전의 그들은 일본의 전쟁범죄자들을 기쁘게 했다. 일본의 괴뢰 노동자 공출기관인 ‘화북노동협회(華北勞工協會)’의 이사장이었던 조기(趙奇)가 다른 범죄안건과 복합으로 사형판결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화북노동협회’의 설립에 분주했던 홍아원 화북연락부(興亞院華北連絡部)의 네모토 히로시(根本博, 패전시에 중장으로 방면군사령관)는 그 죄가 추궁되지 않고, 오히려 국공내전에서 국민당군의 군사고문을 맡았다.

한편으로 강제연행, 하나오카 봉기후의 가혹한 탄압, ‘하나오카사건’의 말소책동, 1950년 도쿄에서의 위령제에 대한 공안의 탄압, 다른 한편으로 1945년 가을, 막 귀국한 피연행자 중국인에 대한 국민당의 처우, 1950년의 위령제에 대한 ‘중화민국 주일대표단’의 노골적인 적대 등은 전쟁 기간 그리고 전후를 통해 일본과 중국을 맺는 반공국가 테러리즘의 폭풍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투쟁으로 일관한 자유노동조합 하나오카 분회의 활동이 지닌 의미는 결코 작지 않으며, 또한 단지 과거의 일로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 4. 맺음말

하나오카 사건은 1945년 10월 이후, 미국 점령군에 의해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1948년 3월 1일 전쟁범죄로서 가지마구미나 말단 경찰관을 재판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냉전기에 GHQ는 이 명확한 전쟁범죄를 방치했고, 일본정부만이 아니라 중화민국(장개석) 정부까지도 사건의 은닉과 민중탄압에 참여하였다.

2000년 11월, ‘하나오카사건 수난자 연의회(受難者連誼會)’는 가지마건설에 대한 투쟁에서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고, 일단 화해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를 향한 국가책임의 추궁이나, ‘하나오카사건 민중기념관’의 건설은 이제부터이다. 이번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이 점에 관심을 갖고 피해자들의 투쟁의 장에 참가할 것을 호소하고 싶다.

## 한국전쟁 시기 교토 자유노동자의 투쟁

고시로 슈이치 (小城 修一)

1926년 생인 나는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이 본격화 되어가는 가운데서 철저한 군국주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1941년, 가까운 곳에 설립된 항공기 제조공장에 취직하였고, 그 해 12월에 영미와의 전쟁개시로 징병검사가 1년 앞당겨져, 1945년 6월에 해군수병으로서 마이즈루(舞鶴)의 타이라(平) 해군단에 입대했다.

8월15일 정오가 지나 장교가 기운 없이 일본의 패전을 고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당시 시민생활에서는 극도로 결핍되어 있던 식량, 연료, 의류 등 생활필수품이 해군 창고에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장교나 하사관은 그 물자를 다투는 대로 운반해갔고, 트럭에 가득 실어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상관의 명령은 천황의 명령이라며 절대복종을 강요했던 ‘천황의 군대/ 제국해군’의 정체가 이런 꼴인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

패전 이후의 일본에서는 미군이 주체인 연합군의 점령 하에서 GHQ(연합군 총사령부)가 권력을 장악하여, 불충분하나마 농지개혁과 재벌해체, 탄압법의 철폐, 노조결성의 추진 등 ‘민주화’ 촉진을 포함한 점령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1947년 2월1일의 총파업 금지명령, 1948년 7월의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정령201호의 공포 등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체제가 강화된다.

전후, 고토부키(壽)공업 구조(九條)공장에 들어갔다. 고토부키공업은 십조(十條)공장이 가장 컸고(1000명), 칠조(七條), 구조공장 등 다섯 공장에서 섬유기계를 제조하고 있었다. 1949년 들어 GHQ가 지령한 경제 9원칙을 실시하기 위해 방일한 닛지의 독점자본재건을 위한 경제정책은 닛지 라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임금체불, 공장폐쇄, 도산, 해고가 잇달았다. 국철과 도시바의 노조가 반격에 나섰는데, 7월에는 대량해고를 발표한 국철의 시모야마 총재가 선로상에서 사체로 발견되는 시모야마 사건, 무인 전차가 폭주한 미타카 사건이 일어나고, 8월에는 화물열차가 탈선 전복하는 마츠카와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하여 당국에서는 국철 노동자와 공산당원이 관계한 듯한 대선전을 했으며 국철과 도시

바 노조의 조합원이 체포되고 기소되어, 투쟁은 억압당했다.

이제는 점령군의 모략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당시 기소된 사람은 일심, 이심에서 유죄라 하여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의 공감대가 커져 오랜 기간의 법정투쟁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무죄를 쟁취했다.

고토부키공장의 경우 십조 이외의 공장은 폐쇄되었다. 닛지 라인에 따른 합리화 공세로, 1949년 2월에서 12월 사이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연말이 되어 나에게 자유노조에 가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950년 1월 센본(千本) 직업안정소에 일용직 노동자로 등록했다. 센본 직업안정소는 일고 전용으로, 매일 아침6시 전부터 번호순으로 일 소개가 시작되었다.

약 3천명이 등록하고 있었으며, 일은 하루에 약 천명 정도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거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사흘에 한번이고 나머지 이들은 노는 꼴이었다. 자유노조의 요구는 “전원 취업, 일 못하는 사람을 없애라” 하는 것으로, 부(府) 청사나 시청에 밀고 들어가 대중적 협상을 해나갔다. 4월경부터 南山城지방에서는, 전쟁 중부터 육군 탄약고였던 호존(祝園)탄약고에 일거리가 많아졌다. 매일 아침 직업안정소를 거치지 않고 집에서 곧장 현장으로 가는 이른바 ‘직행’으로 탄약운반을 하러 가는 사람이 늘었다.

6월이 되자 GHQ는 공산당 중앙위원을 추방하고, 이어 중앙기관지인 ‘아카하타(赤旗)’의 책임자도 추방했다. 그리고, 집회, 시위를 금지하며 탄압을 강화했다. 6월25일,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다음날 GHQ는 ‘아카하타’의 발행 정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에 저항하여 ‘자유’라고 제목을 바꾼 신문이 발행되었다. 곧바로 교토역 앞에 서서 팔았는데 대단히 잘 팔렸다. 하지만 이틀 날에는 발행정지 명령, 또다시 제목 변경, 발행정지... 몇 번을 반복해서 비합법지를 발행하였다.

7월8일, GHQ는 경찰예비대(자위대)의 창설을 지령하여 재군비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7월 11일에는 “북조선군의 무력침략 반대, UN군 지지”를 내건 총평(總評)이 GHQ 지지 하에서 결성되었다. 7월말에 GHQ는 공산당원과 그 동조자를 관공청과 각 기업에서 모두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빨갱이 몰아내기(레드퍼지)는 초법적인 것으로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실시되었다. 레드 퍼지로 해고된 사람들이 가을무렵부터 자유노조에 들어왔다.

집회, 시위의 금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유노조의 회의를 히가시구조(東九條)에서 하려 하자, 경관이 2명 들어와 집회 금지를 고했다. 강행하면 실력행사로 내쫓는다고 했다. 그런 상황이라 집회는 그만두기로 하고, 모였던 20명 정도가 경관을 규탄했다.

7월말, 직업안정소에서 노동자 한 사람이 “얘기 좀 들어 달라. 굉장한 곳에 갔다 왔다”고 말했다. 그의 얘기는 다음과 같았다. “七條 직업안정소에서 진주군의 일이라는 모집이 있길래 응모해서 야간열차로 요코하마에 갔다. 부두에서 집합해 한참을 대기했다. 한 사람이 약을 먹기 위해 물을 찾아 근처 오두막 앞의 수돗가에 갔는데, 미군이 오두막에서 뛰어나와 총을 들이댔고, 그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졌다. 총을 든 미군이 나와 ‘배에 탈 사람은 저쪽 ‘싫

은 사람은 이쪽’ 하는 바람에 모두 놀라서 우왕좌왕하자, 갑자기 스탑 하며 줄을 긋고는 ‘여기서부터 저쪽에 있는 사람은 배를 타라’고 했다. 나는 싫은 사람 쪽으로 뛰어가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을 듣고 당장, 七條 직업안정소에 항의하러 갔다. 하지만, 직업안정소에서는 “일의 내용은 일체 몰랐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밤늦게까지 항의를 계속했지만 결론을 얻을 순 없었다.

그 해 가을 직업안정소에서 한동안 못 만났던 노동자가 있기에 어떻게 지냈느냐고 하니, “심하게 당했다. 인천상륙작전에 끌려갔다.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이상을 들을 수는 없었다. 일본인 노동자가 속임수 모집에 의해 미군의 상륙작전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그 즈음 경제9원칙의 실시로 세금 징수가 어려워져 차압이 늘어가고 있었다. 부 청사에 가는 길에 세무서 트럭이 서 있기에 집안을 들여다보자, 세무서 직원이 구두발로 집안에 들어가 거만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앞에 집주인이 무릎을 꿇 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애원하고 있었다. 분노한 우리 자유노조 소속 멤버는 세무서 직원을 끌어냈다. 달리고 있던 시 전차가 멈추고 소동이 커지자 세무서 직원은 철수했다.

차압이나 세무서에 대한 항의 행동에 동원요청이 자주 있었다. 9월경부터 각 기업들이 격렬하게 레드 퍼지를 강행했다. 노동조합의 반대도 없었다. 어디서든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15명이 해고당한 이노우에 전기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하니 참가를 바란다는 요청을 하였다. 11월13일 아침, 몇 명의 자유노동자와 함께 여기에 참가했다. 노동자와 학생이 수십 명 와있었다. 스크럼을 짜고 정문에서 공장 내로 들어갔다. 저지하려는 회사측 방해자를 뚫고 공장 내에서 데모하며, “부당해고 철회하라” “회사는 교섭에 응하라” “전쟁반대” 등을 외치고, 공장 노동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광장에 연좌했다. 회사는 당황하여 경찰을 불렀지만, 자치단체 경찰인 무코마치 경찰관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교토의 국경(國警)본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국경에서 경관이 트럭 몇대로 몰려와 연좌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위했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아내듯 잡아 전원 체포했다. 하지만 전원이 연행되어간 무코마치 경찰서엔 들어갈 자리도 없었고, 체포된 사람들의 항의행동으로 대혼란 상태였다. 밤이 되어 다른 서에 분산시켰지만 사흘에서 닷새 사이에 전원 석방되었다.

한편, 전관공(全官公) 교토 의장을 비롯해 국철노조와 사회당, 노동당 대표가 이노우에 사장과 교섭하여 다섯 명의 복직과 다른 사람의 전직 알선 및 생활 보증을 하기로 18일에 합의했다. GHQ의 지령으로 초법적으로 전국에서 강행된 레드 퍼지에 대한 투쟁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 투쟁으로 복직을 쟁취한 것은 커다란 성과였다.

같은 해 1월에는 교토시장 선거가, 4월에는 지사 선거가 있어, 시장으로는 다카야마, 지사로는 니나가와, 이렇게 모두 혁신세력이 미치는 후보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시장과 지사가 당선했다고 해서 자유노동자의 일거리가 갑자기 느는 것은 아니었다. 사흘에 한번의 일거리로는 생활할 수가 없으니 일을 달라고 요구하며 시청과 부청에 항의하러 가는 일이 여름에서 가

을에 걸쳐 많아졌다. 그러나 좋은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고, 보다 많은 노동자와 함께 커다란 투쟁을 만들어내자고 합의하여, 전관공이 주최하는 월년(越年)투쟁 총궐기대회에 전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12월 9일 오전 6시부터 마루야마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되는 궐기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자유노동자들은 마루야마 공원에 모여들었다. 교토시 공안위원회는 집회의 개최를 인정치 않아, 개최를 요구하는 노조대표와의 교섭이 계속되고 있었다. 히가시야마 거리에 면한 공원입구는 다수의 경관에 의해 봉쇄되었고, 노동자는 북측에 있는 知恩園의 참배길로 들어 가지며 기온(祈園)의 들계단 밑을 북쪽으로 향했다. 그때, 북쪽에서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나왔다. 쌍방은 참배길 입구 부근에서 서로 격려하며 합류했고, 자유노동자를 선두로 학생들이 이를 따라, 약 천 명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진행해갔다. 공원으로 통하는 길은 경관이 봉쇄한 상태였다. 선두는 知恩園 산문 앞에서 멈춰서 되돌아가려고 했다. 학생 대열도 히가시야마 거리에서 참배길로 전원 들어온 상태였다. 그때 경관이 전후에서 일제히 곤봉을 들고, 노동자, 학생을 덮쳐왔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서 피를 흘렸고, 109명이 체포되었다.

히가시야마 거리는 분노한 노동자로 가득 넘쳐, 교통정리하는 경관에게 항의하는 등,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도로를 메운 민중들로 시 전차도 멈췄고, 노동자가 부당탄압을 승객들에게 호소했다. 시장에게 항의하러 가자하며 시장 공관으로 갔지만, 부재중이라 돌아왔다. 도중에 “죽임 당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히가시야마 거리 일대의 의원과 병원을 묻고 다녔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고 소문일 뿐이었다.

그날 밤 늦게 대책을 협의한 결과, 시장공관을 점거하여 다카야마시장과 항의의 교섭을 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이른 아침, 직업안정소에서 전날의 부당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시장공관에 갈 것을 제안하고, 난젠지(南善寺) 부근에 있는 시장공관으로 센본지부원 약 30명이 갔다. 공관에는 이미 니시진 지부에서 30명 정도가 도착해 있었고, 현관입구에는 시 직원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열명 정도 피켓을 쳐놓고 일체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었고, 간단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작전회의를 거쳐 “지난 시장 선거에서 가장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와있다. 차 한잔 정도 마시게 해도 되지 않느냐”고 요구하여 2명의 직원이 피켓을 푼 순간, 돌입해서 점거했다.

안에 부시장(助役)이 있기에 그에게 시장이 공관에 나와 교섭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장은 시청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하루종일 밀고 당기는 사이에 일을 마친 노동자들도 참가하였다. 심야 12시가 지나 마침내 시장이 돌아왔다. 큰 응접실에서 교섭이 시작되었는데 “체포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고 유치당한 날의 일당을 지불한다”는 등의 요구를 시장이 수락함에 따라 교섭은 오전 2시경에 끝났다. 귀가하는 사람은 시가 특별히 버스를 내어 집까지 태워보냈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응접실에서 눈을 붙였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마루야마(圓山)사건으로, 교토에서는 전후 처음 있었던 대규모 노동자 탄압사건이었다.

1951년이 시작되자 구치탄바(口丹波)에 가달라는 요청이 있어, 1월 중순에 소노베정(園部町)에 갔다. 거기서 구치탄바 지구 위원회의 활동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구치탄바란 南桑田郡(현재는 가메오카시)와 北桑田郡, 선정郡을 가리킨다.

우선, 기관지(신문/잡지)의 배포 체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학생과 버스 차장 등 매일 정기적으로 왕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르는 ‘인민 루트’를 만드는 일이었다. ‘아카하타(赤旗)’ 발행이 정지당한 뒤, 비밀 기관지 ‘평화와 독립’이 발행되고 있었다. 당시는 한국전쟁 반대와 군수품수송 반대 등 미국 점령군을 비판하는 문서의 배포는 물론, 소지하고만 있어도 발견되면 체포되는 상황이었다.

1951년 1월 2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공산당의 井上貫一의원이 전면 강화(講和)와 점령군의 철퇴를 통한 평화와 독립을 호소하는 질문연설을 하였다가 보수반동 정당에 의해 국회에서 제명되었다. 그 연설문을 인쇄한 ‘국회정보’는 합법이라 대량으로 인쇄했으니, 전국으로 배포해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왔다.

2월 어느날 밤, 교토 시내에서 ‘국회정보’와 비밀문서를 받아 열차를 타려고 교토에 왔을 때, 2명의 경관에게 검문을 받아 소지품 조사를 당했다. ‘국회정보’를 한 장 주고는 전부 같은 것이라고 했다. 경관은 회중전등으로 점령정책 위반 내용이 없나 싶어 자세히 읽는 듯 했으나, 찾지 못하고 포기했다.

또 미국 중심의 단독강화에 반대해, 전면강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단바에서도 참가했다. 텅스텐이나 망간을 채굴하는 광산 사택을 방문하기도 하고, 北桑田郡 마을 청년단 간부가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여, 와치(和知)에서부터 유라(由良)강가를 3시간을 걸어 가, 신사 사무소에서 전면강화 반대서명과 한국전쟁 반대를 호소한 뒤, 다시 와치까지 돌아와보니 날이 다 섰던 적도 있었다.

여름에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산의 촌락에 지원대를 보냈다. 교토와 오사카에서 학생들이 왔다. 그즈음 교토대학 학생이 원폭 전시회를 학내에서 열었고, 요청이 있으면 각지에 가져가서 개최하고 있었다. 군의 연합청년단 운동회가 소노베정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어서, 근처 공민관에서 원폭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町당국의 허가를 얻은 공민관에서 사진과 자료 전시를 개최 전날에 마쳤는데, 町당국은 갑자기 공민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통고해왔다. 일단 허가한 것을 무슨 이유로 취소하는가 하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전시품을 철거하라고 했다. 그래도 어떻게라도 해보고 싶어 가까운 기독교 교회를 찾아갔다. 목사님은 “평화를 위한 행사라면 얼마든지 쓰십시오”라며 흔쾌히 장소를 빌려주었다. 다음날 원폭전은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하지만, 교통정리 명목으로 경관들이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또 재일조선인 사람에게 안내를 받아 터널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아무도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옆에 있는 노동자 막사에 가보니, “어제 낙반 사고가 있어 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오늘은 쉬고 있다”고 했다. 그날 밤, 유인물을 만들어 재일조선인의 도움도 받아, 그 지역에 배포했

다.

연말이 되자, 내년부터는 마이즈루(舞鶴)에 가달라는 얘기가 나왔다. 1952년1월, 마이즈루에 갔다. 구 해군시대부터 있다가 전후엔 점령군이 사용하던 아세쿠(朝來) 탄약고 근처에서 기거하며, 산에서 일을 하거나 일용직으로 준설선 수리장에서 일하면서, 기관지(신문/잡지) 배포에서부터 비밀 유인물 배포, 재일조선인이나 자유노조와의 연락, 특히 해상보안청 간부와의 연락 등을 맡아 했다.

1952년 5월1일 히가시마이즈루(東舞鶴)에서 노동절 행사가 끝난 뒤, 자유노조의 노동자는 “일을 달라” 등의 요구를 걸고 시청으로 행진했다. 시청 앞에는 많은 경관들이 피켓을 쳐놓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얼마 동안 격렬한 항의를 하여 약간의 싸움도 있었으나 저녁엔 철수했다. 도쿄에서는 인민광장으로 들어가려는 노동자에게 경관이 발포하여 노동자 2명이 죽임 당했다. 이날 ‘아카하타’ 복간 제1호가 발행되었다.

미 점령군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재군비를 했고, 노동전선을 재편함과 동시에 노동운동에서의 공산당의 영향력을 일소하는 정책을 강행했다. 일본은 출격/보급기지가 되어, 불황에 허덕이던 일본 자본은 병기, 탄약의 생산, 수송, 수리 등의 특수로 되 살아나면서 큰 돈을 벌었다. 전후 일본자본 부흥의 기초는 한반도 인민의 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의 베트남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전쟁 당시는 미점령군의 막강한 탄압체제 하에 있어, 반대투쟁은 유인물 배포까지도 비합법화 될 수 밖에 없었다. 베트남전에서는 결성 이듬해에 방침 전환을 한 총평(總評)이 1966년 10월21일에 베트남 반전통일행동을 제안해 반전 파업을 결행하였고, 배평련(배平連)등의 시민운동과 학생운동도 대단히 고양되었다.

1991년의 걸프전 때부터 일본정부는 ‘국제공헌’이라는 이름 하에 헌법을 짓밟고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였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에서는 미일안보 신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새로이 ‘테러대책 방지법’이라는 ‘전쟁협력법’을 만들어 참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진행된 노동전선의 우익적 재편으로 총평이 해산한 후의 노동운동은, 제대로 된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반전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반전 활동이 매우 약하다. 그러나, 세계의 노동자, 민중은 각국 각지에서 반전투쟁을 싸워내고,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제이션에 반대하여 커다란 항의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반기지투쟁과 반핵운동, 여성문제와 환경문제, 그리고 반제투쟁 등, 다양한 과제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의 민중을 비롯해 세계민중과의 연대를 여는 때보다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 국제 심포지엄도 그런 일익을 짊어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의 적에 대한 민중의 공동행동이 강화되어 있는 곳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 나고야(名古屋)·오스(大須)사건에 대한 증언

사카이 히로시(酒井博)

### 1. 머리말

오스(大須)사건의 원 피고 사카이 히로시(酒井博)입니다. 저는 현재 75세로, 1952년 7월7일 오스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25세이었습니다. 오스 사건에는 사건 후에도, 대법원의 결심에 이르기까지 26년 간에 거친 재판 투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공판 투쟁을 중심으로 한 오스 사건에 관한 기록을 남겨 두고 사건을 현대사 속에 자리 매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심포지엄의 테마에 따라 사건 당시로 한정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건 당시 저는 공산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입당하게 된 동기로 거슬러올라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42년에 규슈(九州)의 사세보(佐世保)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기타마츠우라군(北松浦郡) 에리(江里)탄광이라는 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는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 노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원으로 취직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조선인과 함께 석탄을 파거나 육체 노동도 했습니다. 그 후 소집되어 패전을 맞이하고, 이번에는 사가현(佐賀縣)에 있는 기시마(杵島) 탄광에서 조합운동에 참여해 청년 부장을 지냈습니다. 그 때에 큰 사건이 몇 개나 있어 우익 무리들과 몸을 아끼지 않고 행동하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탄광 국관 문제(탄광 국가관리안)에 반대하는 논문을 썼더니 아사히신문에 채용되었습니다. 게재된 다음날 그것을 읽은 사가현(佐賀縣)의 공산당 위원장이 달려와서 입당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활동은 이론에서부터 시작됐다기 보다는 실제의 노동 현장에서 비참한 상황을 목격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전쟁에서 우리 형제도 두 명이 죽었으며, 도쿄의 집도 불타버렸습니다. 나의 맨 위의 형은 전쟁 범죄인으로 라바울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천황제나 자본주의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일본은 또 이러한 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비전향 상태로 분발하는 공산당이 빛나

보였던 것입니다. 자본론을 읽고 있던 형의 사상적인 영향도 있었고, 최후까지 저항하고 싸웠던 공산주의를 향한 동경은 이전부터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 2. 오스사건의 배경과 히로고지(廣小路)사건

오스 사건은 1952년의 7월 7일에 나고야의 오스 구장(球場)에서 갖게 된 집회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7일의 집회는 당시 사회당의 참의원 의원을 하고 있던 帆足計(帆足計)씨와 당시의 개신당 중의원 의원 미야코시 기스케(宮腰喜助)씨 두 사람이 중국과 구소련을 방문하고 나서 보고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일 국교 회복'을 언급하고 전후의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중·소를 순회하고 민간 레베에서의 중일 무역 촉진에 관한 협정을 맺고 왔습니다. 그 무렵은 일본과 중국·소련과는 국교가 회복되어 있지 않았고 냉전체제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미·소가 대립하고 있었고, 한국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귀국 후 도쿄·오사카·교토에서 보고회를 열고 마지막으로 7월 7일 나고야에서 보고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현지의 노동조합인 아이치현(愛知縣) 지방노동조합 평의회(愛勞評)나 중립계의 노동조합, 그리고 재계가 중심이 되어 꽤 광범위한 환영 실행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중일국교회복 등이 주된 슬로건으로, 조선전쟁에 반대하는 슬로건은 실행위원회의 것으로는 직접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나 좌파계 노동단체는 조선전쟁에 반대하는 개별 슬로건을 갖고 참가했습니다. 집회로서는 상당히 폭넓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공산당 당원으로서 이 집회를 중국·소련과의 국교 회복을 위해 성공시킨다면 동시에 실제로 싸우고 있는 조선전쟁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참가했습니다. 당시의 미국 제 5공군은 나고야의 바로 북쪽에 해당하는 고마키(小牧)에 기지를 두고, 조선전쟁 발발과 동시에 수송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띄우지 않았지만, 수송기로 조선전쟁에서 죽은 병사를 얼음에 채워 가져와서, 거기서 시체 처리를 해서 미국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시체 처리는 나고야의 공공 직업안정소를 통하여 자유 노동자인 '니코온'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보통임금의 2배 정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이 있으면 갔습니다. 당시 저는 자유 노동조합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하지 말라고 들었습니다만, 역시 임금이 좋았기 때문에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고야는 조선전쟁 당시에 미군의 한 거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5공군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전날인 7월 6일 히로고지(廣小路)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 사건에는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아는 범위에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고야에 열차로 도착한 帆足·미야코시(宮腰) 두 사람을 환영하려고, 실행위원회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역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환영이 끝나고 그대로 해산한 것이 아니고 200정도

의 학생, 노동자, 시민이 중심이 되어, 나고야 역에서 깃발을 들고 슬로건을 내세우며 데모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전쟁 반대·중일 국교 회복·무역 촉진 등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역을 나와 히로고지 거리를 지나면 스미토모(住友)생명 빌딩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는 미군이 접수형태로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빌딩 앞을 데모대가 지나가고 있을 때에 미군이 위협을 하려고 창문을 열고 창틀을 떨어뜨렸습니다. 쓸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만 카빈총을 겨누었다고 합니다. 부상자는 없었습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데모대 뒤에 있던 경찰관대가 일제히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무신고 데모였던 셈입니다. 데모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민의 권리입니다만, 아이치현(愛知縣)에서는 아이치현 공안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산을 명령하고(사실은 명령하기 이전에 이미) 데모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난투가 되고 수십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중 전보국 직원인 다마오키(玉置) 모(某)하는 사람이경찰에 끌려가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에 옷 속에서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 문서 중에 7월 7일 밤 미국촌(アメリカ村)과 나고야 나카경찰서(中警察署)에 대해 항의 행동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집회 종료 후에, 현재 시라카와(白川)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있던 미군숙소 즉 제 5공군의 장교 숙소로 항의 행동을 일으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음날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나고야시경은 집회 후에 미군의 숙소에 대해 일정한 공격이 오리라는 판단을 하고 경비를 구실로 3,500명 정도의 경찰관대를 모았던 것입니다.

나는 당시 가스가이(春日井)시·히가시가스가이(東春日井)군·니시가스가이(西春日井)군·아이치(愛知)군, 당시의 선거구로 말한다면 아이치현 제 2구의 지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위원장은 이름 뿐으로 실권은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만은 뷰로원(ビューロー員)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뷰로 회의(ビューロー會議)라고 하는 것은 지구위원회의 위에 존재하고, 다른 조직으로서 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시 히가시가스가이군의 모리야마정(守山町)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현재 나고야시 모리야마구), 그곳에 자택이 있었고 자택을 지구위원회의 사무실로 활용해 공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스가이라든가 모리야마는 농촌이기 때문에 농민운동을 지도하거나 아카하타(赤旗)의 지국장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활동은 군사행동과는 별개의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당시 1952년의 9월 1일에 중의원 선거의 고시도 있고 해서, 나는 선거운동의 사무장이었기 때문에 그쪽 일도 필사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위원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해도 조선인이나 자유노동자 사람들이 화염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시해 어떤 계획이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합법 부대는 대중을 동원하고 집회를 성공시킨다는 것으로, 그 다음에 관한 것은 일체 정보가 들어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중적인 투쟁이 성공하면 화염병 투쟁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탄압하는 경우 당시의 방침으로는 자위를 위해 최소한의 저항을 한다—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말한 것은 화염병입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스 사건은



군사 행동이라고 합니다만 군사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 기껏해야 화염병이나 자갈 정도로 자기 방위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화염병 투쟁도 화염병 투쟁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중일 국교회복·무역 촉진·조선전쟁 반대를 위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이승만 정권의 어느 쪽이나 한편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컨대 전쟁을 그만두게 하려는 슬로건은 조선전쟁 반대입니다. 조선이라고 말한 국도가 전쟁터가 되고 고마키(小牧)에서 수송기가 날아가는 현실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반전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재일조선인 중에는 '조방(祖防)'(조국 방위 위원회)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일본에서 조국 방위라고 하는 방침을 갖고 일본인과 협력하여 조선의 자주적 독립을 이루려고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방을 지도하고 있었던 것이 일본 공산당 안에 있던 민족 대책부입니다. 그들에게는 '조방'과 공산당 양쪽에서 지령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 우리들은 조선인 제군과 함께 회의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조선인으로서 조국을 위해 또는 믿고 있는 정치 신조를 위해 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산당은 일본의 혁명운동의 일익으로서 조선인이 갖고 있는 혁명적 에너지, 파워를 받는다는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상당한 조선인이 오스 사건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 3. 오스 구장에서의 집회

당일 참가자는 신문에 따라 다릅니다만 8,000명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10,000명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데모 참가자를 1,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늘어나서 대개 그 수배가 되는 5,000 ~ 6,00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스 구장의 외야석까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집회는 오후 6시 4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정각에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지구위원장으로서 참가했습니다. 단지 "사카이(酒井)군은 얼굴도 이름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데모대의 중심이 되지마"라고 들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70% 정도는 보고를 들으러 왔던 일반인으로, 나머지 30% 정도가 공산당 사람이나 조선 사람들 등 확실한 정치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회는 지역을 대표해서 이토 나가미쓰(伊藤長光)씨가 인사를 하고, 사회당의 아카마쓰 오사무(赤松勇)씨와 공산당의 다치마 히데(田島ヒデ)씨 등의 인사가 끝나고, 帆足·미야코시 두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경제회의, 북경에서 열린 중일무역협정에 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강연이 끝나 폐회가 될 즈음 당시 나고야 대학생인 이와타 히로시(岩田弘)군 등이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연단에 올라 전단지를 뿌리고 "미 제국주의의 조선 전쟁에 대한 잔학한 행동에 대해 미국촌에 항의하러 갑시다. 전날의 히로고지 사건으로 체포된 제군을 해방시키기 위

해 나고야 나카경찰서에 가서 항의행동을 합시다"라고 선동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선동행동이 라든지 대중적인 데모로 지도권을 쥐는 것은 바로 공산당입니다. 장내의 대중적인 집회를, 나쁘게 말하면 탈취하였다. 이 점은 나중에 비판받습니다만, 당시에는 집회가 있으면 반드시 야유하고 무단 데모를 하여 일반 시민에게 선전하라는 방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 데모였습니다. 구장 내를 2, 3회 돌았습니다. 조선인 제군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깃발을 들고 자유노동자 사람들은 무시로깃발(ムシロ旗)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외에 나갑니다.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천천히 제자리걸음하면서 장외로 나갔습니다. 대충 9시를 넘어, 40분부터 50분 정도 지나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4열로부터 5열 정도의 대열이었지만 가두로 나가자 정연한 데모가 아니고 축제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로상으로 가득 퍼져 통행인과 데모대가 구별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경삼아 덩달아 떠드는 사람들도 있어서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배 정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중적인 데모로 되었습니다. 나는 장내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데모에 참가하도록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요컨대 이 데모대를 고립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데모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고 오히려 데모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형태로 옆이나 뒤에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데모대는 천천히 슬로건을 연호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참가자에게 함께 뒤따라가도록 구장을 나섰습니다.

### 4. 오스 사건

당시 아이치 뷰로의 우두머리였던 나가다 스에오(永田末男)씨는 전날에 경찰에게 행동 계획이 담긴 문서가 건네졌다는 연락을 받고 곧 회의를 열어, 반드시 탄압이 있을 것 같으므로 7월 7일 밤은 데모의 진로를 변경하고 나카경찰서나 미국촌에는 가지 말고 가미마에즈(上前津)교차로를 우회전하여 가나야마(金山)방면을 향해 데모 행진을 하고 가나야마 체육관에서 해산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 조직을 통하여 전달되었기 때문에 7일 밤에는 우리들이 있는 곳에도 지령이 도착했습니다. 관헌이 탄압을 가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촌으로 간다는 것처럼 하면서, "관헌에게 꿀탕을 먹인다", "항의는 하지만 실행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침이 나가기 때문에 나도 지구당원에게 오늘은 화염병을 갖고 나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공산당이라는 것은 이상해서 Y=군사 위원회의 쪽은 독자적으로 정세분석을 하고 화염병을 주고 있었습니다. 대중적인 데모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뒤쪽으로는 중핵 자위대라고 말한 자위조직에 화염병을 주고 있었습니다. 당의 조직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데모는 가미마에즈(上前津)의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했습니다만 그 앞의 이와이(岩井)거리 4

가 부근에 접어들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관대는 경비라는 명목으로 길 주변에 있는 가스(春日)신사에 200명 정도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방승차량으로 “이 데모는 공안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해산하라”고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승 차량이 곧 불타올랐습니다. 그 때 나는 데모대의 후방에 있었습니다만 방승차량이 불타 올랐을 무렵에는 왜 저런 곳에 화염병이 날아갔던 것일까? 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두에서 불길기 오르고 동시에 노상에 있던 일반차량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그 승용차에 화염병을 내던지거나 불을 붙이거나 한 자는 데모대에는 있지 않았고, 데모대원 중에는 자신의 옷 등으로 불을 끄려고 한 자도 있었습니다. 누가 한 것인가는 마지막까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경찰 관계자가 부탁해서 고의로 그 장소에 차를 두었다 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불길기 오르고 나서 발포소리가 날 때까지는 4, 5분 아니 좀더 빨랐던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나가 경찰서의 소년 방범과장인 시미즈(清水榮)라고 하는 경감(警視)이, 자신과 다른 2, 3명 이서 함께 6발의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처음에 시미즈가 발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발사했다는 증언이 나와 있지만, 데모대를 향하여 경고 없이 발사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데모대 쪽에서는 선제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으로 인해 데모대는 한때 파닉스 상태가 되었습니다. 뒤쪽의 일반인들은 각기 흩어졌습니다. 실제로 남은 사람들은 400명에서 500명 정도일까? 누가 쓴 총알에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조선인 고등학생이었던 신성호(申聖浩)군이 배후에서 총격을 당해 맹관총장이라는 부상으로 죽었습니다. 도망가는 데모대를 향해 쏜 것입니다. 본래 발포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었지만 무시하고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그 중의 한 발이 신군의 머리를 꿰뚫었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의 통행인 희생자도 있었습니다. 보도에서 가까운 곳에서 유탄에 어깨를 관통 당해 나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망자는 두 명입니다. 그러나 데모대 중에서 사망자가 나왔다고 한 것은 나중에 밝혀진 일입니다. 그 때는 권총의 발사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데모대의 일부가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10분이나 15분 정도였을까? 화염병을 전부 내던진 것이겠지요. 그 뒤 빨빨이 흩어지고 근처 공터로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저도 일단은 공터에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구속된 것은 121명, 실제로 체포영장이 나왔던 것은 나중에 체포된 사람도 포함해서 400명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소된 것은 150명입니다.

저는 공터에 몸을 숨긴 뒤 단독행동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영(市營)전철이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미마에즈(上前津)에서 타 사카에(榮)까지 가서 갈아타고, 야다(矢田)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30분 정도 걸어 다리를 건너 제방 쪽에 있던 자택까지 걸어 돌아왔습니다. 다리 쪽에 검문소가 있어 긴 6척 길이의 막대기를 든 관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을 당당하게 지나 어디에서 왔냐고 묻기에 오스의 강연회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확인하고 사카이 히로시니까 잘 기록해 두라고 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집회에 참가하고 집회가 끝났기 때문에 돌아왔던 것이라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피

의자가 되면 안되므로 자신의 성명과 시간을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저의 처도 집회에 참가하고 먼저 돌아와 있었습니다.

## 5. 내게 있어 오스사건

제가 체포된 것은 사건 후 1개월 이상 지난 8월 30일입니다. 8월 31일에 고시가 되어 9월 1일부터 총선거가 시작됩니다. 저를 8월 30일에 체포한 목적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 저는 군사위원회도 중핵 자위대도 아니었지만 당시의 공산당 가운데에서는 비교적 대중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를 체포한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겠지요. 처음에는 변호사가 선거가 끝나면 곧 석방된다고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보석될 때까지 235일 동안 독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군사위원장은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말 오스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군사 부문의, 특히 중핵 자위대 등의 무리는 거의 붙잡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 것을 공산당도 명확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있고 그것이 소란죄로 판결되어 끝났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스 사건의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항소심, 대법원과 26년 동안에 걸친 장기적인 재판 투쟁이 이어졌지만, 결국 오스 사건의 소란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은 부회수행(附和隨行)으로 6,000엔의 벌금형에 집행 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체포 때는 소란의 주모자, 기소된 때는 소란 지휘였습니다. 오스 사건이라는 것은 저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체포된 것이 26세, 그리고 나서 26년 간 대법원까지 항소하여 재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24년 간 원피고입니다. 제게 있어 오스 사건 원피고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통해 저 자신도 단련되고 실패의 경험을 포함해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는 보람이기도 하고 또 전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오스 사건 원피고로 살고 싶습니다.

<지도>

스이타·히라가타사건을 검증한다

와키타 겐이치 (脇田憲一, 히라가타사건 전피고)

1. 한국전쟁 2주년 6·25투쟁

스이타·히라가타(吹田·枚方)사건은 1952년 6월 23일 밤부터 25일에 걸쳐 오사카부내 일원에서 일어났던 한국전쟁 2주년 6·25기념일투쟁(이하 6·25투쟁)에 대한 탄압사건이었다. 이 6·25투쟁은 오사카부내의 미군시설, 군수공장, 군사수송을 표적으로 한 군사투쟁이었다. 이것은 당시의 일본공산당 및 재일 조선 민주통일전선(민전)의 군사방침에 의해 지도된 무장투쟁으로 전개되었다. 당시의 민전의 주요 간부활동가는 거의 일본공산당원으로, 민전은 일본공산당 민족대책부(민대)의 각급 기관의 성원들이 지도하고 있었다.1) 오사카부 민대캠프는 당(黨)오사카부 뷰로(지하지도부)의 하부 조직이었지만, 이 6·25투쟁에 한해서는 특별히 부당(府黨) 군사위원들이 직접 지도하고 있었다.2)

오사카부 뷰로에서 결정된 6·25투쟁의 방침과 전술은 다음과 같다.

[기본방침]

- ① 미제의 침략에 대해, 몸소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있는 조선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을 지지하고, 민족의 독립과 평화옹호에 대한 일본국민의 자각을 한층 강화 한다.
- ② 조선인민은 즉시휴전, 외국군대 즉시 철수를 위한 투쟁에 총력기하도록 한다.
- ③ 조일인민의 공동의 적인 미제를 일본과 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통일행동을 취한다.

1) 강재언, 「체험으로 말하는 해방후의 재일조선인운동」 고베학생·청년운동센터출판부간, 제5장 「민전시대의 나」 p.138.  
 2) 소화 27년 6월 19일 「오사카부하의 서군사회의 토의결정사항」 문서(경찰당국입수문서)

## [구체적 전술]

① 관서의 중심적 기지, 이타미 비행장과 그곳의 미군숙소, 군사수송의 중심 스이타 조차장, 이 세 곳이 내려다보이는 토요나카(豊中)시 마치카네야마(待兼山)의 산허리, 오사카대학 북캠퍼스 운동장에서 6월 24일 밤, 노동자 농민·학생·조선청년을 모아 반전, 기지분쇄를 위한 대규모 캠프파이어를 실시하고, 밤새도록 대봉화를 올려서, 6월 25일 새벽녘에 이 세 지점에서 데모를 감행한다.

② 오사카부 시내에서 6월 25일 오전 10시에 일제히 집회를 열어, 구체적인 요구를 내세워 동사무소와 경찰서에서 데모를 한다.

③ 히라가타에서는 구 히라가타 조병창에서 유격대에 의한 군사공격을 가하고, 마치카네야마에 호응하여 6월 24일 밤, 부근의 산에서 밤새 캠프파이어를 행하고, 6월 25일 새벽녘에 고마즈제작소 유치위원 고마즈 마사요시(小松正義)에 대한 데모를 한다.

## [6·25투쟁의 경과](개요)

## ◎ 6·25집회와 데모

① 마치카네야마 전야제에 약 3000명이 참가했다.

② 스이타 조차장에서의 데모의 경우, 한밤중에 마치카네야마를 전차부대와 산을 넘어가는 부대로 나누어 출발하고 도중에 합류하여, 경찰부대의 경비선을 돌파하여 과감하게 결행했다. (이것을 스이타 소요사건이라고 부른다.)

③ 히라가타에서는 잇폰마츠노오카(一本松 언덕)의 집회에 약 100명이 집결하여, 한밤중에 고마즈 마사요시에 대한 데모를 하고, 화염병 몇 개를 투척했다. 화염병은 발화되지 않아 화재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추적해 온 경찰부대와 산중에서 난투극을 벌이다 13명이 체포되었다. (이것을 히라가타 방화미수사건이라 부른다.)

④ 오사카시 이쿠노(生野)의 집회에 2,000명 이상이 모였고, 두 패로 나누어 경찰을 협공하여 난투극을 벌이다 16명이 검거되었다. 200명이 경찰서에 찾아가 항의하였다.

⑤ 그 외 오사카부내, 오사카시내 16곳 이상에서 켈기집회, 보고집회를 개최했다. 총 3,300명이 참가했다. 오사카의 데모 참가자들은 모두 6,720명에 달했다. 대회 단순참가자들을 합하면 1만명 이상이 참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대부분은 재일 조선인들이었다.

## ◎ 유격대의 투쟁(군사행동)

① 이타미비행장, 미군숙소 습격을 위해 유격대가 출동했지만, 미군과 경찰부대의 경비가 엄중했기 때문에 습격을 중지하고 퇴각했다.

② 군사수송열차습격을 위해 유격대가 출동했지만, 예정시각에 열차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퇴각했다.

③ 구 히라가타 조병창 공격은 예정을 변경해서 전날 6월 24일 새벽에 결행했다. 유격대 9명이 담을 넘어 침입하여, 시한폭탄 2개를 설치했다. 1개는 폭발했지만, 나머지 1개는 불발인 채로 발견되었다. 유격대원과 잠복아지트의 방어를 담당했던 그 지역의 당원 전원이 체포되었다. (이것을 히라가타 조병창 폭파사건이라 부른다.)

## 2. 스이타사건

## 1) 마치카네야마의 전야제

1952년 6월 24일 오후 8시 30분부터 토요나카시 마치카네야마 오사카대학 북 캠퍼스 운동장에서, 한국전쟁 발발 2주년 기념 전야제가 개최되었다. 주최자는 오사카부 학련이었지만, 일본 공산당과 민전의 지시로 많은 참가자들이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경찰당국은 선전 뿌라와 압수문서를 통하여, 이타미기지, 미군하우스, 고소네변전소 등이 공격목표라는 것을 감지하고 엄중한 경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모임장소의 사용허가서는 오사카 대학 경제학부의 자치회에서 제출했는데, 대학 당국은 이것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묵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경비요청을 하도록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혼란을 우려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측도 학내 출입을 강행하지 않고 주변 경비에 그쳤다.

참가자는 불을 피워 진을 치고, 큰 북을 두드리며 조선인민유격대의 노래, 평화의 노래 등을 크게 부르고, 춤을 추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폭죽을 쏘아 올리고, 스크램을 짜는 등 분위기를 고양시켰다. 한편 참가자들 일부는 운동장 동쪽 언덕의 잡목림 속으로 이동하여, 불을 피우고 환호성을 지르며, 나팔을 불어 기세를 올렸다. 또 잡목림과 대나무 숲에 들어가 죽창과 목도, 화염병 등을 대량으로 만들었다.

오후 9시 이전부터 운동장에서 대회가 개최되어 의장단을 선출한 후, 國鐵, 全遞, 全海員, 자유노조, 민주과학자회의, 문화인의 모임, 오사카대학, 칸사이대학, 오사카시립대학, 칸사이학원대학, 오사카 외국어대학, 오사카 경제대학, 호세이대학, 시립대교조, 이타미고교, 이케다시의회, 노동당, 공산당 등의 대표로부터 격려인사와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대회는 마지막 전차가 지나가는 시각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도중에 참가한 사람, 돌아간 사람까지 합하면 참가자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 2) 야마고에(山越)부대

6월 25일 오전 0시를 지나, 전야제 참가자는 두 패로 나누어 대회장을 출발하여 데모행진을

시작했다. 언덕 잠목림에서 동쪽으로 향해 출발했던 데모대는 약 1,000명(경찰추정 400명에서 500명)은 현재의 미노시에서 스이타시의 센리구릉을 넘어서 스이타 조차장으로 향했다. 이 데모대는 산을 넘는 길을 행진했기 때문에 야마고에부대라 불려졌다. 도중에 1시간 가량 노상에서 휴식하면서 새우잠을 잤다.

운동장에서 서쪽을 향해 출발한 데모대는 약 1,000명(경찰추정 500명에서 600명)으로, 이들은 현재 한큐전철 이시바시역이 있는 곳을 향해 행진했다. 이 데모대는 그 후 임시전차를 운행하도록 하여 스이타 방면으로 향했다. 산월부대에서는 출발 전에 일본공산당 오사카부 군사위원장 미키 쇼고(三歸省吾, 34세)가 참가자를 향해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조선은 지금,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있으며, 그 무기는 일본에서 제조되고 있다. 내일은 다수의 조선동포가 살해된 기념일이다. 그러나 스이타 조차장에서는 여전히 무기를 가득 실은 군수열차가 나가고 있다. 우리들은 실력으로 군수열차의 운행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부터 스이타 조차장을 습격한다. 도중에 파시스트 국수대중당 총재 사사가와 료이치(笹川良一)의 집과 노동자의 적 國鐵愛勞 간부 나카노 신타로의 집을 습격한다.”<sup>3)</sup>

야마고에부대는 三歸省吾, 夫德秀 두 명을 선두로, 현재의 미노시에서 센리 언덕을 넘어서 스이타시 야마다로 들어가, 한큐전철 핫토리역에서 행진해 온 전차부대와 합류했다. 이 부대가 행진했던 거리는 22km였다. 그 사이에 별동대는 전 국수당 총재 사사가와(笹川良一)의 집, 국철노동조합 스이타공장 지부위원장 나카노 신타로(中野新太郎)의 집을 습격했다. 경찰은 데모대의 행방을 놓쳐 무방비상태였다.

### 3) 전차부대

이시바시역에 도착한 데모대는, 전차 막차시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대표단이 역장실로 물려가 임시전차를 운행토록 역장과 교섭했다. 역장은 거부했지만 그냥 두면 첫 전차가 출발할 때까지 역구내가 점거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상사의 지시를 받아 오사카 우메다역까지 4량의 임시전차를 내기로 했다. 인원은 700명에서 800명으로 추정된다.

데모대는 7천엔을 모금하여 운임을 지불했다. 전차를 편성하는데 2시간 이상 걸렸기 때문에 데모대는 이상하다며 조금 응성거렸지만, 오전 3시 4분에 임시전차가 도착하였고, 데모대는 이를 타고 우메다 방면으로 이동했다. 실제로 오사카시 경시청은 우메다역 구내에 경관을 배치하기 위해 시간을 일부러 늦춘 것으로 추정된다.

이시바시역에서 해산한 사람을 제외하고, 데모대는 전원이 우메다로 향하는 임시전차에 승차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전차가 우메다까지 직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전차는 오

3) 「토요나카시 마치카네야마의 6·25기념일전야제의 상황」 검찰연구특별자료 제13호 「스이타·히라가타사건에 대하여」 제1부, 제1장, 제1절(5항 14행부터 18행).

전 3시 25분에 이시바시역과 우메다역의 중간지점인 핫토리역에 들면 정차했다. “내리자,” “스이타조차장으로 가자”라고 누군가가 외치자 전원이 하차했다. 핫토리역의 개찰구에는 깃발을 든 여러 명의 남성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지하 지도부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진상은 아직도 여전히 의문이다.

핫토리역에서 하차했던 전차부대는 누구의 지휘여하에 관계없이 소속 그룹별로 대열을 갖추어, 스이타 방면으로 행진했다. 행진은 구 이타미 가도의 중심도로를 피해, 배후도로를 통하여 스이타시 토요츠로 들어가는 경로를 따라 진행되었다. 오전 4시경 스이타 시경 토요츠로출소에 별동대가 화염병 2개를 투척하고, 돌도 던졌다. 화염병 1개는 주재소 처마 밑에 맞아 폭발하여 발화했다. 그러나 콘크리트벽이었기 때문에 건물에 불이 붙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리창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전차부대는 다시 야마다의 길을 거쳐 지금의 스이타시 야마다에 도착하여 야마고에부대와 합류했다. 핫토리역에서 야마다까지의 전 행로는 18km였다. 이 사이에 경찰 측은 토요나카 시경과 스이타 시경의 연락에 문제가 있었으며, 또 전차부대가 핫토리역에서 하차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이타 시경은 데모대의 행방을 놓쳐 무방비 상태였다. 국경과 자치경의 관할구역에 대한 집착과 협조의 결여로 경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다.

### 4) 스이타 조차장 돌입

국가경찰 오사카본부는 경비본부를 토요나카시에 설치하고, 경비부대는 토요나카시 경찰서장 대리를 경비본부장으로 하고, 국가경찰 오사카부 경비부장, 동 순찰 교통과장, 이케다시 경찰서장을 참모로 하여, 토요나카 시경, 이케다 시경, 미노지구 지서 및 국경 응원부대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오사카대학 당국이나 경찰측은 경비협정에서 집회와 데모의 실행행사에 대한 맞대결을 피하고, 경비의 중점을 이타미기지 비행장, 주둔군 하우스에 두었기 때문에, 스이타 조차장의 경비는 소홀했다.

데모대는 전차부대의 양동작전으로 경비의 허점을 찔렀다. 합류했던 산월부대와 전차부대의 사기는 고양되고, 현재의 세츠시 센리가오카의 스사노오 신사 경내에서 일단 휴식을 취했다. 데모대는 2,000명의 대부분이 되어 신사 앞의 산업도로에 대기하고 있던 스이타 시경의 경찰부대 132명의 경비선을 쉽게 돌파했다.

스이타 조차장의 구내 총면적은 76만㎡, 코우시엔(甲子園)구장 20개정도의 면적에 상당하는 서일본 최대의 조차장이었다. 오전 6시 18분 데모대는 경비의 빈틈을 뚫고 키시베역 서쪽의 담이 무너진 곳을 통하여 동 역구내에 돌입하여, 상하여객선을 횡단하여 조차장 구내 동쪽편의 센리가오카역을 향해 약 20분간 행진하였고, 오전 6시 43분 북측 가드 부근에서 장외로 나왔다.

이 사이에 데모대는 환성을 지르며, 국철노동자에 “군임을 멈추어라,” “미군의 무기를 운반

하지 말라,”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등을 크게 외쳤으며, 경비중인 경찰관이나 철도공안원에 대해서는 “개들은 돌아가라”라는 등의 야유를 퍼부으며 돌을 던졌고, 군용품 적재화차를 탐색하면서 행진했다.

스이타 조차장에서는 사전에 데모대 습격정보를 입수하여 침입을 예상하고 경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었지만, 죽창과 곤봉 등으로 무장한 데모대에 압도되어, 속수무책으로 밀리서 방관할 뿐이었다. 주둔군용 화차 30량은 대피시켰기 때문에 피해는 면했지만, 구내의 업무는 상행선 18분, 하행선이 45분간 중단되었다. 스이타 조차장은 경계 사이렌으로 시끄러웠다.

#### 5) 미군 장군과 경찰부대 습격

재차 산업도로로 나간 데모대는 오전 6시 50분경 세츠시 센리가오카 소학교 부근에서 교도방면을 향해 질주해 오던 미 육군준장 카터.W.클라크가 탑승한 승용차를 습격했다. 일제히 돌, 나무조각, 화염병을 투척하여, 클라크 준장의 얼굴에 전치 19일의 부상을 입혔다. 클라크 준장은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도방면으로 도주했다.

오전 7시 20분경 스이타시 키시베 부근에서 미 육군하사 로버트Z.빈이 탑승한 승용차가 데모대원 여러 명에게 포위되어, 차의 앞 유리, 옆 유리가 파괴되고 차체의 일부가 파손되었다. 빈 하사는 무사했다. 또 데모대의 후방에서 추적해 오던 이바라기 시경의 장갑차가 데모대를 추월하려다 화염병 공격을 받았다. 화염병은 폭발하여 차내는 불바다가 되었으며, 경관 십 여 명이 불덩이가 되어 도로에 굴러 떨어졌다. 부상당한 경관들은 부근의 논 속으로 도망쳤다.

도주한 경관을 데모대의 일부가 추적하여 투석, 구타, 죽창으로 찌르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권총을 빼앗아 발표하는 위협도 생겼다. 데모대의 지휘자는 이를 제지하고 폭도화되는 것을 막았다. 데모대의 후방을 추적하고 있던 경찰부대는 습격 당한 동료의 참상을 방관하고 있었다. 경찰부대는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다. 데모대는 산업도로를 완전히 제압했다.

경찰의 무기력함에 자신감을 얻은 데모대는 연도의 경찰파출소 3곳을 연속해서 때려부수었다. 그러나 지휘자가 화염병 사용을 엄금했기 때문에, 불타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데모대는 경찰의 습격에 대비하여 죽창, 곤봉, 화염병을 휴대하고 있었지만, 지휘자의 명령과 통솔에 따라 끝까지 질서정연한 데모를 하였다.

#### 6) 경찰부대의 역습

데모대에 농락당한 경비본부는 마지막에 반격을 시작했다. 오전 7시 35분 오사카시 경시청 응원부대 204명을 서쪽 전방의 스이타 시청 앞에, 그리고 남쪽 전방에 국경 오사카부 본부경찰 학교 응원대 105명을 이중으로 배치하여, 데모대의 후방을 추적하는 경찰부대와 협공하는 작전을 세웠다. 그러나 데모대의 지휘자는 이것을 간파하고, 전방에 대기하고 있는 경찰부대의 200미터 앞에서 골목길로 들어가 국철 가드 아래로 잠입하여 국철 스이타 역 방면으로 방향을 바

꾸어 나아갔다.

경비본부는 마지막까지 경비작전의 허를 찌르는 데모대에게 농락 당했다. 데모대는 스이타역 앞의 노상에서 도착하자마자 해산했다. 오사카방면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스이타역 오전 8시 7분발의 통근열차에 올라탔다. 이 시각은 통근의 일반승객으로 플랫폼이 혼잡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갑자기 경찰부대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스이타시 경찰서장이 지휘하는 경찰 약 30명이 열차를 정차시키고 데모대를 검거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워의 통근열차 승객들은 플랫폼으로 도망가거나, 열차의 유리창에서 선로로 뛰어내려 큰 혼란이 일어났다. 경찰부대는 데모대원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데모대원은 화염병, 황산병, 라무네탄 등을 던지며 응전했다. 데모대, 경관 쌍방에서 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승객도 이 사태에 휘말려 부상자가 나왔다.

일반승객까지 말려든 검거작전은 경비본부의 지시가 아닌 스이타시 경찰서장의 독단에 의한 것이었다. 이 폭압적인 검거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여기에서 데모대원 23명이 체포되었다. 열차는 혼란한 가운데 9분 늦게 오전 8시 16분, 오사카역을 향해 발차하여, 오전 8시 25분, 오사카역에 도착했다.

데모대원은 전원 오사카역에서 내렸지만, 구내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사카시 경시청 기동대와 소네자키서의 경찰 222명이 일제히 검거를 위해 출동했다. 오사카역에서도 권총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충돌이 일어났다. 오사카역에서 三歸省품 이하 4명이, 모모타니역에서 夫德秀 이하 14명이 체포되었다. 이날 체포된 스이타사건의 데모대원은 총 52명에 달한다.

#### 7) 재판의 결말

스이타사건의 검거자는 300명 가까이 되고, 111명이 기소되었다. 재판은 1심에서 11년, 2심·3심에서 9년, 총 20년에 걸친 장기적인 재판의 결과, 1심에서는 소요죄와 위력업무방해죄 모두 무죄, 2심에서는 소요죄만 무죄, 위력업무방해는 유죄가 되었다. 소요죄의 무죄 판결은 이른바 죽창, 곤봉, 화염병 등을 휴대했던 ‘무장데모’를 정당한 집단시위행동으로 인정받은 획기적인 승리였다. 여기에서 ‘저항권’의 변론을 전개한 변호단의 공적이 크다.

1963년 6월 8일의 한국전쟁 휴전협정 성립에 즈음하여 전쟁에서 희생된 조선동포를 애도하며 스이타사건 피고단 전원이 법정내에서 기립하여 묵념을 올렸으며 재판장은 증립을 지켜 이것을 묵인했다. 검찰측은 이것을 국회의 소추위원회에 제기하여, 재판장의 국회소환이 결정되었다. 재판장은 사법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소환을 거부했다. 스이타사건의 장기재판은 노동조합과 민주단체의 인권을 지키는 광범위한 투쟁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4)

4) 「스이타사건과 재판투쟁」 1999·1 스이타사건 문집간행위원회 「스이타사건과 재판투쟁-쟁취한 소요 무죄」 (4) 「點釋」 175항

## 3. 히라가타 사건

## 1) 구 히라가타 조병창 재개반대운동

1951년말 무렵부터 오사카부 히라가타시의 구 육군 조병창 히라가타제작소(히라가타 조병창)를 재개한다는 소문이 시민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수면하에서 고마츠 제작소(본사는 이시가와현 고마츠시)의 불하교섭이 추진중이었다. 이 회사는 1952년 봄, 한국전쟁과 관련된 미군특수 포탄 40만발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는데, 미군은 포탄 발주 조건으로 전용공장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구 히라가타 조병창 입수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동년 4월 28일 미일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구 히라가타 조병창의 배상물건 지정이 해제되어 민간기업에 대한 불하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고마츠 제작소는 무리하게 불하교섭을 추진하여, 동년 10월 13일, 中宮, 甲斐田공장의 불하를 내락 받고, 일시 사용허가를 받았다.

구 히라가타 조병창은 구 일본육군의 포탄제조소로 전시 중에 월생산 20만발의 포탄을 제조 하였던 설비가 그대로 온존되고 있었다. 히라가타시도 1951년 6월 무렵부터 中宮, 甲斐田, 禁莖의 세 지구에 걸친 연면적 366만평(119만 ha)의 조병창부지를 지역진흥에 이용하고자 시의회와 연계하여 민간기업유치운동에 나서고 있었다. 일본공산당 히라가타 시위원회는, 이것이 고마츠제작소에 의한 조병창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라며 가두에서의 전단 살포와 연설회를 통하여 폭로하면서, 조병창 재개 반대운동을 개시하였다. 이듬해인 1952년 6월까지 사회당, 노동조합, 농민조합, 민주주의옹호동맹 등과도 연계하여 반대 시민대회를 네 번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연인원 1,200명의 시민이 참가하였다.<sup>5)</sup>

## 2) 구 히라가타 조병창 폭파사건

이 해 6월 23일 심야부터 이튿날 24일 새벽에 걸쳐 구 히라가타 조병창 甲斐田지구 제4 착출공장 내에 유격대 9명이 침입하여 시한폭탄 두 발을 장치하였는데, 이 중에 한 발이 폭발하고 한 발은 불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유격대는 시한폭탄을 장치하는 실행대 네 명과 이를 엄호하고 망을 보는 나머지 다섯명으로 구성되었다.

유격대는 일본공산당 히가시오사카지구 뷰로의 군사위원장 마츠무라 야스오(23세)가 책임자이며, 실행대장은 기타카와치지구 조국방위(祖防)대장인 関載憲(24세), 엄호대장은 모리구치시 군사위원장 松本保紀(27세)였다. 유격대원은 조방대 세 명, 중핵자위대 여섯 명으로 편성되었다. 나는 엄호조의 일원이었다.

1952년 6월 23일 오후 10시가 지나서 히라가타시 마키노의 片莖신사 경내에서 집회를 갖고,

5) 「枚方市史」 제5권 제2장, 제3절의 2 「사회운동의 격화」 「평화운동의 고양」 제88표 「枚方시내의 반전평화 데모와 집회」 238항.

여기에서 3km 앞에 있는 조병창까지 어둠 속을 걸어가 벽을 넘어 공장내 부지로 침입했다. 제4 착출공장은 동서 약 110미터, 남북 약 85미터, 건평 1,696평(5,600평방미터)의 광대한 철골 건조물이었다. 시한폭탄을 장치한 것은 전동펌프실내의 750톤급 전동수압펌프 여섯 대중에서 두 대의 윗부분이었다. 시한폭탄은 폭발했지만, 기계장치의 손상은 없었으며, 유압계와 공장의 유리창이 파손되었을 뿐이다. 유격대는 24일 오전 2시경 공장을 탈출하여 예정된 아지트에 잠복했다.

## 3) 고마츠 마사요시 자택 습격사건

이 해 6월 24일 오후 7시경부터 히라가타시 히라가타공원 뒷 편의 다카츠키산, 통칭 잇텐마츠노카에 일본공산당 동오사카 지구위원회 산하의 청년당원, 조선민주주의애국청년동맹원 등 100명이 결집하여 결기대회를 열고 다섯 항목의 가와기타(河北) 해방통일전선강령과 가와기타 해방청년행동대 결성을 결의했다.

오사카 가와기타 해방청년대 강령은, ① 살인병기를 제조하는 히라가타 조병창 부활을 실력으로 분쇄하자. ② 군용도로 반대, 토지매입을 실력으로 분쇄하자. ③ 국민을 탄압하는 경찰관의 무장(경찰예비대를 말함)을 즉시 해제하자. ④ 청년을 미국의 총알받이로 하지말라. 징병반대. 파괴방지법 반대. ⑤ 케이한전철, 마츠시타전기, 슈퍼, 아사리(淺利)의 군사공장화 반대 등 5항목이었다. 가와기타 해방청년행동대 규약은, ① 행동대의 규약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 ② 행동은 대장의 명령에 따른다. ③ 행동대의 회비를 납입한다 등 3 항목이었다.

행동대는 3중대, 1대대로 편성되며, 대대장에는 당 모리구치세포 松本保紀가 임명되었다. 1중대는 오사카대학 공학부 학생부대, 오사카치과대학생부대, 네야가와세포부대. 2중대는 모리구치세포부대, 오사카시내 아사히·미야코지마세포부대, 기타카와치부대, 간사이여자의대 학생·간호원 의료부대. 3중대는 民愛靑의 조선인부대, 히라가타 자유노조부대였다.

당지구위원회의 현지 책임자는 지구위원인 가미히로였다. 그런데 행동대의 이날 밤의 행동 방침을 둘러싸고 지도부의 지시가 혼선을 빚었다. 처음에 마츠모토 대대장이 “어제밤 특별유격대가 조병창에 침입하여 포탄제조 프레스를 시한폭탄으로 폭파했다”고 연설하자 대원들은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그리고 “유격대가 잠복한 아지트가 경찰부대에 포위되어 있다. 오늘밤 우리들은 구출작전을 전개할 것이다”며 행동을 지시하자 분위기는 갑자기 긴장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격대는 탈출에 성공했다. 잠시후면 우리 행동대와 합류할 것이다. 우리들은 내일 아침까지 대기할 것이다. 각 대원은 휴식과 잠시 수면을 취해도 좋다”고 지시했다. 그러자 다시 환성과 박수가 대원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그러나 잠시 후 3중대로부터 “내일까지 아무 것도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곧 바로 고마츠 마사요시의 집을 습격하자”며 지도부를 자극했다. 이번에는 1중대에서 “항의행동이라면 문제없지만, 화염병 습격에는 반대다”며 반대의견을 표방하였다. 지도부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양자는 모

두 '집행부불신임'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각 행동대의 토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으로 바뀌었다. 결국 의견은 대립한 채 내려진 타협안은 3중대가 실행부대를, 1중대, 2중대는 엄호부대를 맡는다는 작전하에 히라가타시 카가무로(加賀室)에 있는 고마츠 마사요시의 집을 습격하게 되었다.

고마츠 마사요시의 집은 잇짚마츠노오카를 500미터 정도 동쪽으로 내려간 곳의 고급주택가에 있었다. 1중대, 3중대, 2중대 순으로 언덕을 내려가 3중대인 민애청부대는 고마츠 집의 현관을, 동히라가타 자유노조부대는 별동 창고를 부수고, 화염병 몇 개를 투척하였다. 1중대는 북쪽 전방에, 3중대는 남쪽 후방에서 경찰부대의 출동에 대비하고 있었다. 습격은 불과 몇분내에 종료되었다.

투척한 화염병은 발화하기는 했지만, 크게 타오르지는 못했다. 집안에 있다가 갑작스런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는 이미 행동대원들이 퇴각하고 없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잠옷을 벗어 진화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증거가 될 잠옷은 처분해버렸다고 제출하지 않았다. 현관의 구두, 옷, 벽에 황산이 묻은 흔적은 남아있으나, 불에 탄 흔적은 없었다.

달려온 히라가타 시경의 경관도 현장의 증거를 보존하지 않고 산 속으로 퇴각한 데모대를 추적했다. 행동대의 의지의 통일성 결여와 혼란이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쳤다. 경찰부대의 발포로 통제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한밤중에 산 속에서 13명의 대원이 검거되는 무참한 패배를 당했다.

#### 5) 재판의 결말

히라가타 사건은 두 사건을 합쳐 90여명의 관계자가 체포되었으며, 65명이 기소되었다. 죄명은 조병창 폭파사건이 '폭발물단속죄 위반', 고마츠 마사요시 저택 습격사건은 '방화미수', '폭발물단속죄 위반', 경찰부대와 충돌사건은 '공무집행방해'였다.

제1심 판결은 1969년 11월 19일, 즉 7년 2개월간, 최고재판결정은 1967년 9월 16일, 즉 15년 3개월간을 끄는 장기 재판이 되었다. 형량은 1심 판결이 '징역5년' 1명, '징역3년 6개월' 3명, '징역3년' 1명, 나머지는 집행유예, 무죄는 6명이었다. 제2심과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3명에게 실행 6개월이 감형되었을 뿐이다.

#### 4. 총괄 검토

이 6·25투쟁에 관하여 오사카지검의 문서는 다음과 같이 총괄하고 있다.

"6·25 스타타 소요사건은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수립된 방침과 전술을 준수하고 실천한

무력투쟁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경비경찰관이 취한 행동제압을 위한 작전의 미비성과 의지의 허약성이 역작용을 일으켜 무력투쟁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중대 요소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당 오사카부 뷰로의 문서는 다음과 같이 총괄하고 있다.

"당은 끈질긴 투쟁 속에서 특히 도쿄 메이데이 투쟁의 정치적 의의와 교훈을 6·25 준비투쟁에 살려 이를 발전시켰다. 이는 오사카 행동대의 앞으로의 혁명투쟁에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게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쿄 메이데이와 함께 오사카의 6·25투쟁은 일본의 반전독립을 위한 혁명의 길에 제2의 확고한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믿는다."

전자는 무력투쟁에서 경찰경비의 패배를 인정하고, 후자는 마찬가지로 무력투쟁에서 도쿄 메이데이사건과 비견되는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는 실적주의적인 총괄이다. 우리들의 총괄의 기준은 이것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 투쟁의 성공과 실패여부와는 무관하게, 이기건 지건 간에 과연 이것이 납득할 수 있는 투쟁이었던가의 여부에 있다. 언제까지나 후회 없는 투쟁이었던가 하는 점이다. 나는 오사카 6·25투쟁에 참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후회도 없다.

#### ◎ 와키타 겐이치 프로필

1935년 에히메현 출생

1951년 오사카에서 일하며 야간고교를 다님

1952년 6월 枚方사건에 가담하여 체포됨. (재판투쟁 15년)

1953년 8월 일본공산당의 야마무라공작대로 들어가 당에 전념함. (1961년 탈당)

1956년부터 노동운동에 참여, 철강, 금속조합활동에서 총평 지방 오르그

1985년부터 타카츠키시에서 내고장 생협운동, 시민운동.

1985년부터 타카츠키시의원(1기).

2000년부터 문필활동.



## 미군 점령기의 재일조선인 운동

정 영재 (丁永才)

### 1. 들어가며

나는 지금 73세인데, 1928년에 부산에서 태어나 보통학교 4학년 때 일본에 왔다. 그 후 부모의 일자리에 따라 노무자들이 사는 이곳 저곳으로 이주하며, '더럽다' '김치냄새 난다' 혹은 "조선징은 돌아가라"는 말들을 들으며 온갖 민족차별 안에서 살아왔다. 그래도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던지 어느새 나는 군국소년으로 자라났다. 일본인에게 차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여 학교 선생님이 되든지 아니면 군인이 되겠다는 생각에 그저 열심히였다.

18세 때 일본이 패전하자, 주위에 있던 조선인 동포들은 막걸리를 마시며 식민지 해방을 정신 없이 기뻐하며 외쳤다. 얼마 안 있어 재일조선인에 의한 완전한 자주적-민주적 조직이었던 조선인연맹이 일본 방방곡곡에 조직되어 갔다. 약 500군데에서 동시에, 잃었던 언어와 문자를 되찾기 위해, 서당 같은 형태로나마 봄날에 죽순 자리듯 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이는 점차 소학교로, 일부는 중학교로 발전해갔다. 현재는 초급, 중급, 고급, 대학에서 일관된 교육을 하고 있다.

나는 히로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1946년 11월부터 오사카에 있던 조선인 교원 양성소에 다녔다. 그 후 일본의 구 텐노지 사범-학예대학에 입학했지만, 전설적 영웅 김일성 주석 아래로 돌아가 사회주의 건설에 가슴 벅차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분히 공부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언제나 조국통일을 염원하면서 온갖 조선인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투쟁이란 투쟁엔 모두 출선해서 참가했다. 지나고 보니 감회가 깊는데, 반세기나 되는 긴 시간을 생활비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서 상근 활동가로 운동했다. 거짓 없이 정말 그랬다.

나도 내 처도 눈만 뜨면 조국통일, 조국통일... 한국의 고향에 가보고 싶고...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지만 친형제와 많은 친지들과 만나고 싶은 심정에 가슴 저려 하면서 나이 들어가고

있다.

1945년 10월 15일에 재일조선인연맹(조련)이 생기고 나서부터 매년 나카노시마에서 광복절 행사가 개최되었다. 그럴 때면 나도 현수막을 내건 트럭 세 대를 몰아 기시와다(岸和田)에서부터 참가하곤 했다. 조련에서 운동하던 사람 가운데 특별히 정치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던 젊은이가 일본공산당에 입당했다. 나도 1948년 4월에 일본공산당에 입당했는데, 운동은 주로 조선인 운동을 했다. 일본공산당은 한번도 굴함 없이 투쟁한 훌륭한 정당이란 생각이 머리 속엔 있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당시는 김일성 주석에 관한 선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일본 민주화 운동은 고양되었다. 전후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와 재일조선인 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은 1948~49년경부터 이다. 1948년 4월 24일, 오사카부(府)청사 앞에서의 한신(阪神) 교육투쟁에 나도 참가하였는데, 당시 5만 명의 조선인이 여기에 참가했다. 경찰 장갑차가 나와 물을 뿌리고 권총을 쏘아 김태일 소년이 눈앞에서 총을 맞았다.

동포가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는 학교이다. 한신 교육투쟁으로 민족학교가 폐쇄된 뒤, 나는 오사카부 청사에 가서 학교가 폐쇄되었으니 아이들에 대한 언어와 문자는 어떻게 할거냐는 항의투쟁을 했다. 오사카부로부터 민족학급의 교원자격을 얻어냈다. 나는 기시와다에 있는 두 학교에서 방과후에 조선인 아이들만을 모아 일주일에 두 번씩 언어와 문자를 가르쳤다. 오전 중에는 상근활동으로서 선전물을 등사판으로 밀어 배포하기도 하고, 동포들의 관혼상제를 돕는 일을 보기도 했다.

조련이 해산한 뒤, 간부는 공직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해방구원회'가 생겼다. 나는 기시와다지역 카이즈카의 센슈 지구의 총무부장을 맡았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일상적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정치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에 동원이 많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 웬만큼 두드러진 선배들은 모두 일본공산당에 입당했고 나도 권유를 받고 입당했던 것이다.

나는 기시와다시 南植町の 세포로 들어갔는데, 조선인은 나와 다른 한 사람 둘만이고, 나머지는 일본인이었다. 당시 유인물을 뿌리는 등 운동을 하는데, 나는 조선인이니 조선인 운동도 했다. 그즈음 특별히 식별해 본 적은 없지만, 민단은 1할 내지 2할이 안 되는 정도였다. 거의 의식에 없을 정도로 적었다. 대부분이 조선 총련계인데, 적극분자도 있고 중간분자도 있었고, 그저 따라만 간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다 '반미'라는 분위기에 동조하였다. 총련에 와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강제연행 되었거나 노동자 막사에서 고생해온 사람들이라, 자연히 김일성 주석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가겠다는 얘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흐름은 소위 말하는 '좌익'이었다.

1948년 제주도 4.3사건으로 피신해온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 일본에 건너온 뒤 조선총련에서 상근자나 교원을 지낸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그 학살 가운데서 죽음을 무릅쓴 상태

에서 빠져 나온 사람들이었다. 밀항선으로 일본에 오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총련의 운동을 했다. 잔혹한 일들을 겪은 사람 중 일부이긴 하지만 공포심 때문에 이제 운동은 일체 안 한다고 한 사람도 있지만, 조선총련의 간부나 교장, 이사장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

당시 우리는 43사건이 대단히 영웅적인 투쟁이라고 평가하면서 미 제국주의자에 대한 증오가 절정에 달했다. 희생된 사람들은 진정 애국적인 운동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사물을 조금 냉정하게 보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상층 일부 사람들이 극단적인 일들을 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산맥 같은 곳이 이어진 곳이면 몰라도, 그런 고도(孤島)에서 무장투쟁을 하다 보면 미군과 괴뢰군에 의해 포위되리라는 것을 알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6만 명 또는 8만 명이나 된다는 숭고한 희생을 치루었으니, 그건 전술적인 과오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동시에 1948년 10월, 여수에서 한국군 제14연대가 봉기했던 것도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훗날이 되고 나서, 그러한 전술을 짰던 것에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운동이었지 않나 하고 생각한 일이 있다.

## 2. 조선전쟁과 조국 방위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조선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전쟁의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미국 점령군에 의해서 1949년 9월 조련이 해산 당하고, 같은 해 10월 '해방 신문' 폐간, 민족학교 폐쇄령,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이 시작된 직후 '아카하타(赤旗)' 폐간, 일체의 언론자유의 억압이 진행되었다. 빨갱이 몰아내기(레드 퍼지)였다. 그런 준비를 갖추어 놓고 조선전쟁으로 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조선전쟁 발발 시에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민족해방, 조국통일이라며 기뻐했고, 조선이 통일되면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다.

우리의 운동이 점령군에 의해 비합법화 된 가운데, 나는 일본공산당 당원으로서 Y, 즉 일본공산당 군사위원회가 "무장투쟁을 할 테니, 그 준비를 하시오" 해서, 합법적 신분 상으로는 교원이기도 하고 해방구원회 총무이기도 했지만, 내심은 일본공산당원으로서의 무기획득을 하고자 했다. 실제로는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스나가와 공원에 가서 일본 경관을 연못에 빠뜨려 권총을 빼앗겠다고 계획하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산촌 공작대에 가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다루이 쪽으로 일주일 정도 갔었지만, 나한테는 "최대한 합법적 활동을 하라"고 지시하여 다시 돌아왔다.

1951년 1월 재일조선 통일민주전선(민전)이 결성되었는데, 민전 자체가 일본공산당 중앙 민족대책부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 비합법적으로 조국방위위원회(조방)와 조방대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조방대는 조선인 청년의 경비대인데, 그 밑에 소년단이 있었다. 조방대가 실제로 무장

했던 것은 아니다. 재일조선인이 생활적인 탄압을 받았을 때, 선두에 서서 싸우는 행동부대였다. 혹시 상층부는 무장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한 무장하지 않았다. 나는 소년단 아이들에게 일본 경찰이 오면 노는 척 하다가 기동대 차량 타이어의 공기를 빼는 기술 등을 가르쳤다. 조방대는 조국의 방위, 미국의 조선침략 반대, 조국의 통일 독립, 민족의 권리옹호 운동등을 주로 하였다. 투쟁의 대상은 미군과 미군에 협력하는 군수공장이었지만, 일상적으로는 동포가 박해 받으면 그 상황에 동원된다는 것이었다.

## 3. 다나가와(多奈川) 사건

그런 시기에 '다나가와 사건'<sup>1)</sup>이 발생하였다. 다나가와 사건은 1952년 3월, 泉南郡 다나가와町에서 일어났다. 당시의 재일조선인은 생계를 위해 양돈을 하고 있었는데, 양돈을 할 때 음식 찌꺼기 모아온 것과 막걸리 양금을 섞어 돼지 사료로 준다. 막걸리를 만들었던 건 비단 다나가와 뿐만이 아니었다. 많은 조선인 촌락에서 양돈을 하고 있었으니, 막걸리를 만들고 있었고, 그것이 생활의 밑바탕이었다. 그걸 밀주라 해서, 오사카 부경(府警)과 와카야마 현경(縣警) 수백명은 다나가와를 두세 번 습격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언어맞고 체포되고, 동시에 총에 맞았다. 막걸리는 여기저기에서 주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싸웠다. 대표가 세무서에 가서 "생활 보상을 하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 때 와카야마의 야마모토리는 순사부장과 우리 동료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다. 야마모토 순사부장이 아래서부터 권총을 쏘았다. 우리는 총에 맞은 동료를 泉佐野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해부하는 데 입회했다. 총알이 장을 관통하여, 이미 손 났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나가와 사건으로부터 한달 뒤인 1952년 4월27일에는 泉大津에 있는 조선인 학교가 습격을

1) <참고> 다나가와(多奈川) 밀주 사건 : (전략) 1952년 3월 26일 이른 아침, 국경(國警) 오사카 지방본부 경관과 국세국 직원이 泉南郡 다나가와정(多奈川町)의 조선인 촌락을 주세법 위반으로 '급습'하여 막걸리 밀조를 '적발'했는데 "아무래도 불온한 정세인 것 같다. 경관이 발포해 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에 반대하며 "동포를 죽이는 폭탄을 만들지 말라"며 특수공장을 습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중략) 다나가와정 7천명 주민 중 500명이 재일조선인이다. 전쟁중 가와사키중공업의 조선소 도크 건설을 위해 강제연행 해온 조선 본토 출신자가 퍼크 때는 4천~5천명에 달했다. 귀국 못하는 사람들이 토목공사 현장이나 메리야스 가공 등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막걸리를 만들고 있었던 듯 하다. 막걸리를 뒤집어 얹은 통이 뿔고, 걸어서 부쉬진 문짝 뒤에는 노파가 웅크리고 있었다. 몇 집 건너 저쪽엔 십 수명이 모여있었다. 오열하고 있는 것이었다. 사살된 젊은이의 유족과 연고자임이 드러났다. "도대체 뭐가 불온하단 말이나"는 것이 첫인상이었다. 슬픔에 찬 마을이었다. / 이쿠노(生野)에서 달려온 윤상철씨(민전 오사카부 위원회)의 얼굴이 보였다. "근로보국대로서 무조건 진행하고는 패전으로 뺐개졌다. 생계 때문에 하는 변변치 않은 밀조인데, 왜 이런 대탄압을 가하는 겁니까. 폭력을 휘두르고 목숨까지 빼앗은 건 경관대 쪽이오"라며 격앙을 억누르지 못해 우락부락한 얼굴이 홍조를 띄었다. 오사카대학 오무라 법의학 교수가 사법해부를 한다고 한다. 분노의 소리와 오열이 겹친다. "죽여 놓고는 죽은 몸에 칼까지 던다니,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아나네의 호소, 막고 나섰던 윤씨의 눈에서 눈물이 넘치고 있었다. (후략) <히라노 이치로 / 전 아사히신문 기자 「차별과 싸우는 문화」 No.23 중 발췌>

당해 세 명이 희생되었다. 이른바 백색테러였다. 민단측과 조선총련측 간의 싸움으로 총련측의 청년이 죽었다. 나는 여기에도 참가했었다.

#### 4. 스이타(吹田)사건

그 후, 스이타 사건이 일어났다. 1950년 6월25일 조선전쟁으로부터 2주년을 맞는 1952년 6월 24일이었다.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별로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상층 간부들은 알 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몰랐고, 다만 “언제 청년 몇명 동원”이라는 지시만 받았다. 그것이 민전에서 온 것인지, 조국방위 위원회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일본 공산당인지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나한테 “8명 동원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갑작스럽게 말을 하니...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6월 24일에 4명을 동원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애인이었던 내 처에게 “가자”고 했더니, “어딜 가는 데” 하는 식이었다. 지금은 돌아가신 김씨와 다른 한 사람까지 넷이서 한큐 전철 이시바시 쪽으로 갔다. “오후 7시에 집합하라”고 해서 가보니 센슈지대 조선인 청년들도 많이 오고, 얼굴을 모르는 일본인 청년, 학생들도 많이 와있었다. 우리는 待廉산으로 올라갔다. 당시 오사카대학 운동장은 평탄하지 않고 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어둑어둑한 상태에서 수천 명이 모여 있고, 센슈만 해도 50~60명은 있었다.

우리는 밤새도록 죽창을 만들었다. 나중에 운동장에서 불도 피워놓고 노래도 하고 연설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분명 그랬던 것도 같지만,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죽창 만드는 데 열중하였다는 것이다. 캄캄한 곳으로 가서 도끼로 대나무를 베어와 죽창을 만들었다.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몇 사람이나 모여 있는지, 전혀 몰랐다. 운동장이란 생각이 없고 캄캄한 산, 대나무 숲이었다.

이튿날인 6월 25일 아침, 3시 반에서 4시경 먼동이 틀 무렵 시위를 위해 출발했다. 나는 그 땐 몰랐는데, 이시바시역에서 전차를 타고 핫토리역으로 향했던 ‘인민전차부대’라는 것이 있었다. 우리는 그 부대는 아니고, 산길을 걸어가는 ‘산을 넘는 부대’였다. 먼저 우익인사 사가와 료이치 집을 습격하러 갔다. 하지만 사사가와는 없었다. 시위대열은 센슈 그룹, 오사카 시내 그룹 등 지역별로 결집해 4열 종대로 정연하게 있었다. 우리는 시위대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뭘 하는지 잘 알 수 없었지만, “선두가 습격하고 있다”고 해서 “어디냐”고 물었더니, “사사가와 료이치 집이야” 하는 식이었다.

하여간 우리는 논길을 밤새 걸었다. 배는 고파왔지만 불평 불만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밤이 지나 날이 밝아져 왔을 땐 이미 기동대들에게 포위당하고 있었다. 밝아진 뒤 가만히 보고 있자니, 마치 농민봉기와도 같았다. 명석을 든 사람이 있고, 제 처 같은 경우엔 아무 것도 모르

고 긴 죽창을 들고 있었다. 거기서 처음으로 “지금부터 미국 무기탄약의 수송을 저지한다. 이 건 조선전쟁에 보내져 동포들을 죽이는 무기이므로, 우리는 적어도 이 무기수송만은 저지해야 한다” 며 나한테만 말을 해주었다. 내 처도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으니 “그럼 갑시다” 라고 했다.

그 당시엔 도로 명칭도 몰랐는데, 밤중에 30킬로인지 40킬로인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산길을 걸었다. 무조건 그저 걸어갔다. 앞쪽 선두 대열에서는 북을 쳤던 것던 기억이 있다. 시위대는 몇 천 명이었고, 다들 젊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영웅적인 기분도 들었다. 당시엔 몰랐지만, 국도 191호에 이르자 이미 수백명의 기동대가 척하니 총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 다케노하나 가드를 넘지 않으면 스이타 조차장 쪽으로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사대를 모으게 되었다. 4열 종대니까 앞쪽은 총 맞을 각오를 했다. 앞쪽 7,8명은 총 맞아도 좋으니 여기서 돌파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결사대 나와라” 한다 해도 그리 간단히 나갈 순 없었다. 그 당시 가장 영웅적이라고 소개되었던 건 센호쿠(泉北)군 센호쿠지부 청년들로 78명이 결사대로 나왔는데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다. 이들로 앞 2열을 만들었다. 그 뒤를 우리가 따라 갔다. 북을 치며 척척 나아갔다. 그랬더니 경관들이 쏘지는 않고 확 도망갔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기분으로 그곳을 넘어 이번에는 오른쪽(남향, 국철 기시베역 방면)을 향해 4열 종대로 계속 시위를 했다.

철망이 찢긴 곳으로 해서 조차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물 덮어씌운 것을 죽창으로 아아 하면서 찢었다. 거기엔 탱크도 없었고 대포도 탄약도 아무 것도 없었다. 수송열차는 이미 새벽 녘에 나갔고 다 비어있다는 건 미연에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죽창으로 찢어보았던 것이다.

그리고는 산업도로로 나왔는데, 오사카 방면에서 교토를 향해 고급차가 달리고 있었다. 우리 쪽에서 화염병을 던졌다. 차가 불타고 도망치는 사람을 보니 미국인이었다. 후에 들으니 오츠(大津)부대 사령관인 클러크 준장이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기동대가 우리 앞으로 가려고, 덮개를 씌운 트럭, 이바라기 시경 위폰차 등이 시위대를 가로지르려 했다. 거기다 대고 화염병을 던졌다. 경관들은 뜨겁기도 하고 화상을 입을 것이 두려워 차에서 뛰어내렸다. 시위대와 뛰어 내린 경관들이 겹겹이 대치했다. 거기서 경관의 권총을 빼앗았던 것 같다. 그 장소는 須佐之男命 신사 앞 부근이었다.

경관쪽에서도 화가 났을 것이다. 우리는 맥주회사 쪽에서 국철 스이타역 홈으로 올라갔다. 그랬더니 기동대는 계단에서 머리만 내놓고 쏘기 시작했다. 마침 그때는 아침 출근시간이어서 스이타역에는 전차만이 아니라 증기기관차도 달리고 있었다. 스이타역에서 오사카역까지 가는 거였다. 기차는 하얀 증기를 뿜으면서 뻍-뻍-뻍--소리를 내고 있었다. 거기서 경찰이 쏘기 시작했다. 그러자 거미 새끼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확-하니 도망을 쳤다. 무슨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정신없이 흩어졌다. 여자 아이는 허리가 빠질 정도의 충격으로 오줌을 싸며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 일행이 그 아이를 업고 피신했다. 여기서 대열은 흐트러져 일부 사

람은 전차로 교토로 도망갔다.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 기차를 타려 해도 긴 죽창을 들고 있으니 들어갈 수가 없었다. 버리면 될 텐데 순진하게도 죽창을 들고 창으로 빗겨서 넣고 자 했다. 아침 통근 시간이니 빨리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다들 떨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죽창을 가지고 오사카역으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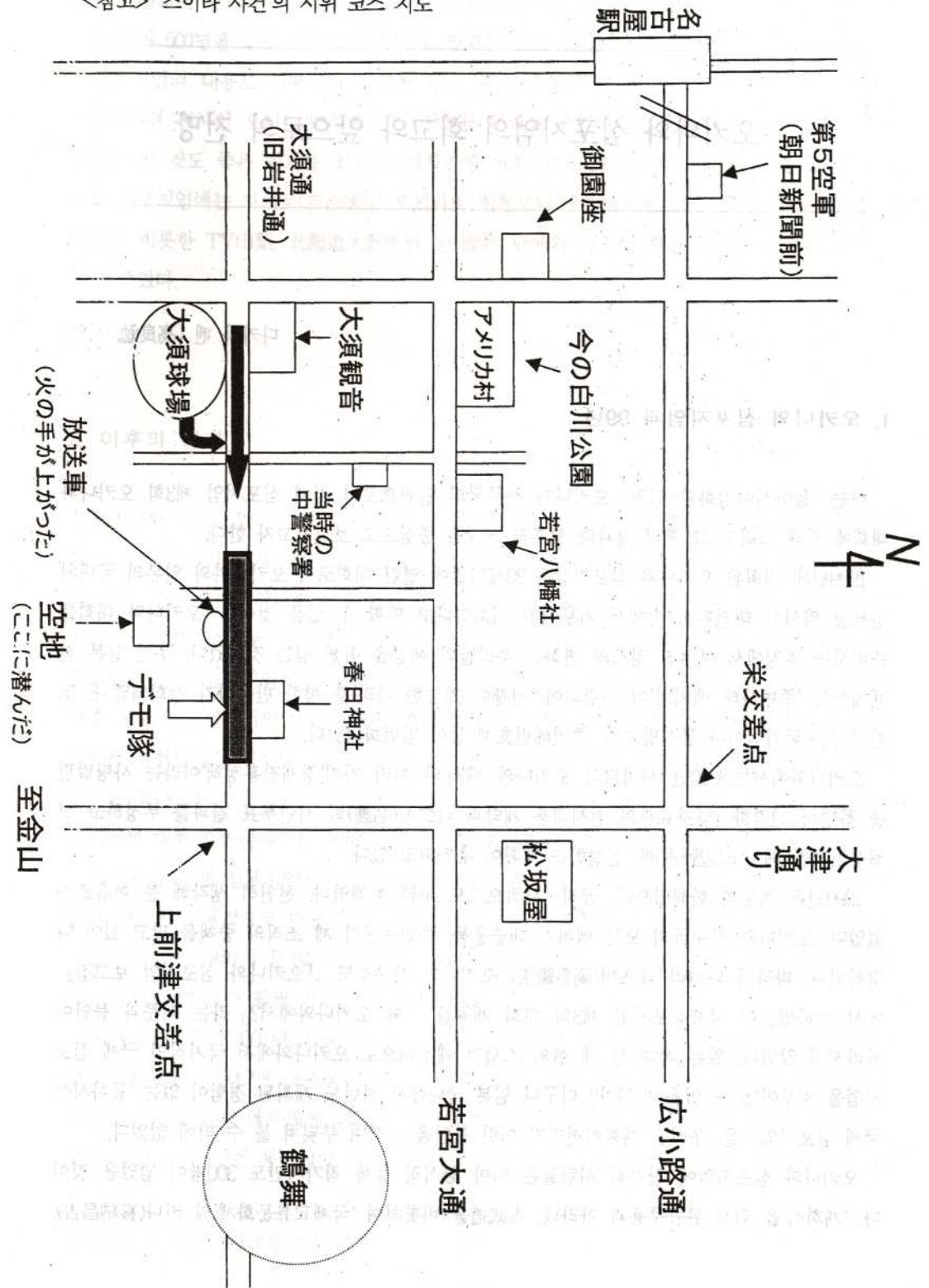
오사카역에서 대열을 재정비해 오사카 중심거리인 미도스지에서 데모할 생각으로 개찰구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개찰구로 나가기 전에, 소네자키의 경관들로 생각되는 병력이 뺑뺑하고 머리 위에서 총을 쏘는 바람에 모두 다시 해산하고 도망쳤다. 고베로 갈 사람은 가고, 나는 처를 데리고 환상선 전차를 타고 가만 앉아 있었다. 전차 안에서 총을 맞아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은 모두 체포되었다. 경관이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연인사이로 시침 떼고 앉아 있었다. 츠루하시(鶴橋)에 가서 개찰구를 지날 때, “차표는?” 하기에, “너무나 혼잡스러워 잃어버렸다”고 했더니 그냥 통과시켜주었다. 오사카역 개찰구에서 나는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을 보았고, 처는 여자아이가 배에 총을 맞아 붉은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센슈에서 함께 간 동료 두 사람도 각각 일단 무사히 돌아왔다.

### 5. 마지막

그 후 우리는 ‘스이타 사건’을 극좌적인 운동이었다고 하여 그다지 평가하지 않았다. 연구의 맥락에서도 ‘스이타 사건’은 대단히 비중이 적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극좌 모험주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참가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것을 극좌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당시의 조선 청년은 조국에서 지금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동포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생각했다. 가령 그때 그 자리에 미국 탱크라도 있었다면 당연히 화염병을 던졌을 것이고, 미국인이 있었다면 같이같이 찢어버릴 만큼의 적개심이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재일조선인의 조직을 둘러싼 문제가 많아서 ‘스이타 사건’을 제대로 총괄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비로소 이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참고> ‘스이타 사건’의 시위 코스 지도



# 오키나와 심포지엄의 회고와 앞으로의 전망

다카라 벤 (高良勉 시인)

## 1. 오키나와 심포지엄과 99년

나는 「동아시아평화와 인권」 오키나와 사무국의 일원으로서 국제 심포지엄 제3회 오키나와 대회에 관해 그리고 그 후의 경과와 향후의 전망을 중심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1999년에 개최된 오키나와 심포지엄은 20세기말에 열린 대회로써 오키나와와 일본의 국내의 정세상 역사의 대전환점 속에서 치루어진 대회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진 정세의 변화는 우리들의 예상을 훨씬 넘는 것이었다. 우선 일본 전체에서는 '주변사태 배치법'이 가결되어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향한 반동화가 강화되었다. 또한 국기·국가법이나 통신방수법, 주민배번호제 등이 입법화되었다.

오키나와에서는 2000년 서미트의 오키나와 개최와 여러 가지 '경제진흥정책'이라는 사탕발림을 하면서 신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내용 개악과 나고시(名護)의 시민투표 결과를 부정하고 신해상기지를 헤노코(辺野古)에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1999년은 격동의 한해였으며, 공적·사적으로도 바쁜 한해였다. 천천히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었다. 오키나와 사무국의 모든 멤버가 대중운동, 주민운동의 제 조직의 중책을 맡고 있어 다망하였다. 따라서 다카라 테츠미(高良鐵美) 오키나와 사무장도 『오키나와 심포지엄 보고집』에서 논하였듯이 국제심포지엄 제3회 대회 개최를 「왜 오키나와에서?」라는 의문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일본 국내 한 개 현의 스태프와 재정력으로 오키나와에서 국가적인 국제 심포지엄을 치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일본 국내에서 한번도 개최된 경험이 없는 '동아시아 국제 심포지엄'을. 우리는 개최직전까지 이런 불안을 느끼며 부딪쳐 볼 수 밖에 없었다.

오키나와 심포지엄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마 공식적 등록 참가자만도 300명이 넘었을 것이다. '개회식'을 위해 류큐무용과 가라테, 古武道を 비롯하여 '국제교류문화제'의 키나(喜納昌吉),

찬플즈 등의 출연자, 운영스텝의 자원봉사자, 혹은 '필드워크'를 안내하거나 헤노코(辺野古)의 해변의 집회에 참가한 그 곳의 '지키는 모임'등을 비롯한 참가자를 합하면, 오키나와 대회 참가자는 아마 5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확한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심포지엄의 내용도 사무국의 예상을 넘는 매우 충실한 것이었다. 우선 기념강연으로써 전 오키나와현 지사인 오타(太田昌秀)씨가 강연을 허락해 주었다. 또한 회의 전에 필드워크 일정을 배치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황리에 마친 국제교류문화제도 잊을 수 없다. 이 오키나와 심포지엄에는 자치로(自治券)로 오키나와 현분부나 오키나와현 교직원조합, 오키나와현 高教組를 비롯한 TV山梨, 北海道大野병원 등 많은 단체와 개인이 협찬 광고와 모금을 내며 지원해 주었다.

## 2. 이후의 경과

오키나와 심포지엄의 의의에 관해서 자신의 입으로는 보고하기 힘들다. 아무래도 주관적이 되고 자찬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후의 경과에 관해서만 가능한 객관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우선 오키나와대회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제4회 광주 심포지엄이 대성공이었다는 점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얼핏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키나와 대회의 성공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광주 심포지엄에 적극적으로 대규모의 오키나와 참가단을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광주 심포지엄 실행위의 초대로 키나(喜納昌吉)와 찬플즈의 공연이 15만명에 가까운 광주시민 앞에서 실현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오키나와 심포지엄에서 광주 심포지엄으로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들 동아시아 민중 네트워크는 보다 견고해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미군기지에 대한 오키나와·한국민중 연대운동의 활성화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국제 심포지엄운동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들은 국내외에서 연대 가능한 상대의 이름과 얼굴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동아시아 속의 국경을 넘어 4개국·지역내외의 문제를 보다 가깝게 느끼고 파악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들은 한국, 대만을 예전보다 훨씬 가깝게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2001년 10월 27일에서 30일 사이에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문학자회의 '2001 PEACE CAMP'에 초청되어 거기서 보고하였다. 그때 함께 회의에 초대되어 회장에서 재회했던 사람이 대만 陳映眞씨, 제주도 출신의 현기영씨, 제일 조선인 서승씨 등이었다. 나는 기쁨과 함께 다시 한번 동아시아 국제 심포지엄이 쌓아 올린 인맥과 조직망의 힘에 놀랐다. 4차

1) 전일본 자치단체 노동조합.(편집자주)

례의 국제 심포지엄에서의 '문학·문화 교류'가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우리 심포지엄은 오키나와 대중운동과 주민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 오키나와의 군사기지반대운동의 최대 쟁점은 여전히 나고시 해노코에 '후텐마기지 이설'을 명목으로 한 신해상기지건설을 용납할 것인가 아닌가이다. 이 해상기지 건설을 용납하면 오키나와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군기지 건설을 스스로 인정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오키나와 심포지엄 참가자가 해노코의 해변에서 집회를 열고 현지 주민과 교류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격려했던 것은 이 해상기지건설 반대운동을 정신적으로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나고시민의 반기지 투쟁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전개되고 있다. 오키나와 반기지 투쟁은 일본 전체 속에서 소수파이기 쉬우나, 동아시아에 있어서 반미군기지운동 네트워크가 다수파가 됨으로써 커다란 용기를 얻고 있다.

우리들은 오키나와 대회의 다음해에 열린 '2000년 오키나와 서밋'에 대항하여 '카테나(嘉手納)기지 포위행동'을 성공시켰다. 이 인간띠에 의한 기지포위 행위에는 오키나와의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족 단위로 참가하여 성공시킨 것이다. 거기에 일본 본토와 동아시아에서 지원자가 연대하였고, 제3회 대회에서는 3만명 이상의 참가자가 극동에서 가장 큰 카테나 기지를 완전히 포위하였다.

미일정부가 '오키나와 서밋'을 통해 오키나와 기지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했던 것에 대항하여 우리들은 오키나와 반기지 운동을 전 세계에 어필했던 것이다. 이 카테나기지 포위 행동은 실질적으로는 '평화시민운동회'라는 주민운동의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실시되어야만 했고, 우리 오키나와사무국 성원들은 그 네트워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다.

오키나와 심포지엄의 세션에서 보고, 토의되었던 것 중에서 그 후 새롭게 전개된 것도 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젠더와 여성운동의 네트워크 중에서도 일본군 성노예제를 다루는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이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12월 7일부터 12일 사이에 도쿄에서 열린 법정의 준비·운영에는 국제 심포지엄의 관계자가 큰 역할을 하였다.

오키나와 사무국의 우라사키(浦崎成子)씨의 메모 보고에 의하면, 한국측에서는 '법정에 있어서의 남북한 검사단으로 박원순 변호사, 오키나와 심포지엄 한국사무국장인 하중문교수, 광주 심포지엄 참가자로 오키나와에서 우라사키씨와 현지조사를 했던 강정숙선생, 그 외의 심포지엄 '관계자가 다수 도쿄에 집결, 참가하였다'.

일본측에서는 '후지나가(藤永壯), 송연옥, 우라사키 씨등이 법정에 관계되는 자료의 1·4권에 집필을 담당하였고, 법정에서는 후지메(藤目유키)교수가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검사단으로 참가하였으며, 오키나와 위안부에 관한 부분을 우라사키씨의 논문에 근거하여 기소장을 작성하였다. 동아시아 심포지엄 관계자가 다수 노력하였다. 이것도 우리 국제심포지엄의 젠더를 둘러싼 문제의식의 공유와 신뢰관계로부터 생겨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40년만에 오키나와 연단에 서서 '1950년대의 오키나와'를 보고한 고쿠바(國場幸太郎)

씨의 활약도 눈부시다. 고쿠바씨의 증언은 일본복귀 이전의 오키나와 현대사 연구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예를 들어 2001년 11월 17일에는 도쿄의 센슈대학에서 '점령하, 오키나와·아마미의 비합법 저항운동'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주목을 받았는데, 고쿠바씨는 여기서 '오키나와 비합법공산당의 활동'이라는 제목의 귀중한 보고를 행하였다.

또한 2001년 8월 여름방학에는 한국, 일본, 오키나와의 대학생들의 국제교류 세미나가 류큐대학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이 국제세미나도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의 중심 멤버인 서승, 정근식, 다카라(高良鐵美), 아라사키(新崎盛暉)교수의 학생들과 오키나와 사무국 멤버들의 협력으로 실현된 것이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운동의 성과가 있지만, 오키나와 심포지엄의 그 후의 경과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상을 보고해 두고 싶다. 이것만으로도 오키나와 대회의 의의와 성과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3. 앞으로의 전망

국제 심포지엄의 향후를 생각함에 있어 오키나와 사무국 운동의 특징을 꼭 논하고 싶다. 오키나와 사무국은 항상적인 조직과 회의, 재정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네트워크형이며, 실행위원회적인 운동밖에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국제심포지엄운동'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무국원을 비롯하여 우리 심포지엄 참가자는, 일상적으로는 개개인이 소속된 직장이나 지역에서 대중조직이나 연구단체의 대표자나 중추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국제 심포지엄을 위한 정례회의 등은 개최하고 있지 않다. 단, 서로 대중운동이나 연구대회 등에서 빈번히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서 볼 때 오키나와의 국제심포지엄운동은 상당히 사회적인 신뢰와 대중성에 의해 지지되고 전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무국원이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확장이 커다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례회의가 없으므로 국제심포지엄을 향한 활동은 대회 일정이 가까워지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조직과 운동이 구체적으로 사무국원의 중대라는 형태로 확대되지 않는 면도 있다. 또한 오키나와 사무국의 독자적인 운동으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오키나와의 제 운동은 독자의 역사적인 전통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총파업(General Strike)과 '섬 전체적 투쟁'이라는 체험의 역사로부터, 전 주민이 생활·문화 등의 전 영역에서 투쟁에 참가한다는 전통이다. 동시에 국제교류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국제적 감각이 풍부하다. 우리들은 류큐왕국이라는 독자적인 국가가 멸망하고, 미일정부의 식

민지가 되었던 역사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경의 벽을 넘은 네트워크와 국내외의 연대 운동을 만들지 않는 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민중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제연대 네트워크의 형성이 사활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일본 전체의 반전, 반안보, 반기지 평화운동에 큰 기대는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의 아프간 '보복공격'을 둘러싼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해 자민당, 공명당 등 보수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등 야당의 일부도 찬성하여,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로 승인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사민당이나 공산당 등 야당들도 이에 대한 유효한 대중운동을 조직화하고 있지 않다. 지금 일본의 국회는 일본 민족주의로 익찬체제화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들은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의 중요성이 금후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특히 반기지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무쪼록 오키나와의 투쟁을 고립화시키지 않고,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민중운동의 네트워크로 감싸주기를 바란다.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은 그 과제에 응해 주리라고 믿고 있다.

## 공동방침제안(案)

서승 (리츠메이칸대학)

[동아시아평화와 인권]국제 심포지엄도 제5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준비단계에서부터 헤아려 보면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간에 많은 성과를 얻어 왔습니다만,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습니다.이번 제5회 동아시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에 있어서 대만, 한국, 오키나와를 걸쳐서 일본으로, 공동개최국이 한번씩 돌아 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하고, 보다 큰 발전으로 체제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 간의 수차례에 걸친 총괄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12일의 일본사무국전국회의(정근식 한국위원회 사무국장배석)에서 토론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1. 성과 확인

- 1) 냉전시대를 통하여 폐쇄되어 온 동아시아민중의 교류, 연대의 부활에 기여했다.
- 2) 21세기세계평화의 구축에 있어서 한반도의 화해, 통일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 3)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 있어서의 일본중심의 동아시아지역질서의 일체성과 전후에 이르는 연속성을 확인했다.(1945년 일본제국주의의 패망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시작에 의해 일제의 유산은 청산되지 못하였고, 일본에 있어서는 [역코스]에서 [보통의 국론]에로의,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친일파]의 잔존, 재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동아시아의 모든 민족에 있어서의 근대이후의 [민족해방]의 과제를 저해해 왔다).
- 4) 냉전시대를 총괄하고, 20세기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미/일지배와 국가폭력의 실태를 분명히 하여, 미/일 헤게모니에 대한 동아시아민중의 대항전선 구축의 긴급성을 제시하였으며, 21세기 [민중중심의 지역평화]의 구상을 제시해 왔다.

- 5)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국가테러리즘개념의 정착, 보급에 기여→아프간전쟁이후의 미국/이  
스라엘국가테러리즘과의 관련에서 중요함.
- 6) 냉전기의 국가폭력과 수난의 실태를 분명히 하고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며, 대만이나 한국  
에서의 국가테러리즘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보상법]의 제정에 기여했다.
- 7) 300~400명이 참가한 4회에 걸친 대규모의 自費의 민간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많은 연  
구자, 운동가, 수난자들의 몸을 바친 헌신과 봉사에 의하여 지탱되어 온, 자주/독립의 민  
간심포지엄운동이었다.
- 8) 학술과 수난자, 운동가(연구발표, 증언, 필드 워크)의 삼자간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심포지엄을 제창하여 실천하였다.
- 9) 백편에 달하는 연구논문, 증언을 축적하여, 동아시아의 소장파, 기예의 연구자네트워크,  
민중의 연대를 만들어 냈다.
- 10) 준비자료, 보고집의 간행은 물론, 각종언론이나 뉴스소식지,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그 성  
과를 일본어, 조선어, 중국어의 3개국어로 지속적으로 공표하여 왔다. 각 심포지엄에 있어  
서의 자료집은 물론 일본에서는 3권의 사전학습자료집과 보고집, 한국에서는 2권의 자료  
집이 간행되었다.
- 11) 각 지역에서 동아시아의 상호교류에의 인식을 넓히고 2001년5월의 동학농민혁명심포지  
엄에의 참가나 동아시아대학생들간의 자주적 교류회실현등의 파급효과를 낳아 왔다.
- 12) 일본사무국은 개인참가를 원칙으로 하여, 어떠한 당파로부터도 중립을 추구할 것을 관철  
해 왔으며 그 결과 폭넓게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할 수 있었다.

2. 이후의 방침

- 1) 여수대회에 참가하여, 한국에서의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민간인희생(학살)진상해명, 명예  
회복법]의 성립을 위한 운동을 지원한다.

- 2) 비용면, 사무량의 방대함, 연락사무의 번잡함으로, 비상근활동가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  
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단하에 여수대회를 전환점으로 기존의 공동개최방식의 대규모심  
포지엄에서 탈피한다. 단 개최를 희망하는 단체가 있을 시에는 그 단체, 또는 복수의 단  
체의 책임하에 대규모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다.
- 3) 종래의 일/한/대만/오키나와공동사무국체제를 재고할 것. 각 지역사무국을 각 지역운동을  
중심으로 활성화시켜서 공동사무국회의 대신에 각 사무국과 참가단체(일본의 경우, 개인  
참가)를 망라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을 꾀한다. 공동개최에서 네트워크로의 전환으로, 보  
다 기동적이고 유연하게 각지역에서의 과제에 따른 심포지엄의 개최를 행할 수 있다. 동시  
에 네트워크를 통하여 타지역에 보고 또는 참가를 요청한다. 이런 전환에 의하여 종래의  
4지역으 합의를 통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었던 의사결정의 신속화와, 현지  
의 요구나 규모에 맞는 심포지엄이나 행사를 계획하고 비용의 절감등이 기대된다.
- 4) 그 간에 준비단계였던 1994년에서부터 헤아려 7년동안 쌓아 온 심포지엄의 인적, 조직적  
네트워크와, 운동경험, 축적된 연구실적을 공통의 재산으로서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명칭을 포함한 운동의 계승을 재확인한다.
- 5)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살리는 장의 형성
  - ① [동아시아의 저널]창간, 편집위원회의 구성(동아시아심포지엄의 네트워크와 축적을 전제  
로 하여 학술논문+각 지역의 운동의 현황과 주요인터뷰의 보고 : 책임은 구체적인 한 지  
역에 맡긴다. 현재 후보로는 한국)
  - ② 인터넷, 메일링리스트에 의한 상시통신체제의 유지와 인터넷소식지의 발행(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 ③ 소규모의 분야별 세미나, 필드워크등, 각 참가단체 및 그룹의 주체적 개최에 의한 연속성  
의 유지
  - ④ 동아시아 청년학생의 평화캠프 개최(예 : 오키나와에서의 한일국제교류세미나, 대만동아  
시아 반제, 평화학생캠프)등, 청년 및 학생교류의 실천



国際シンポジウム「東アジアの冷戦と国家テロリズム」日本事務局

〒557-0062 大阪市西成区津守 1-13-28

(フリースペース ローカル 内)

電話 090-3826-1347 FAX 075-466-3020

e-メール mormenn@d4.dion.ne.jp